Busan is good
부산이라 좋다

2026년 지방정부 혁신 실행계획
【부산광역시】

2026. 4.

부산광역시
BUSAN METROPOLITAN CITY

목 차

Ⅰ. 추진전략 ····· 1

Ⅱ. 총괄표 ····· 4

Ⅲ. 추진과제 ····· 9

1. 주민 소통 일상화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정책으로 전환 ··· 9
2.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통해 지방정부 투명성 강화 ····· 41
3. 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생활 속 문제해결 ····· 45
4. 사각지대 없는 포용적 공공서비스 체계 구축 ····· 54
5. 모두가 기본적 삶을 보장받는 사회 안전망 구축 ····· 84
6. 자율과 혁신을 통한 지역균형성장 체계 구축 ····· 121
7. 주민 누구에게나 쉽고 편리한 서비스 환경 조성 ····· 145
8. 가짜 노동 없는 성과 중심의 조직 운영 ····· 169
9. 열정이 넘치고 일 잘하는 공직사회 조성 ····· 180
10. 공공부문 AI 대전환을 위한 인프라 구축 ····· 192
11. 공공 AI 리터러시 강화 및 인재 양성 ····· 221

Ⅳ. 소확신 과제 ····· 225

Ⅴ. 정부혁신 확산 방안 ····· 237

Ⅰ. 추진전략

□ 비전 및 전략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

1 참여소통 — 국민 주도 참여·소통 거버넌스 구현
- 1 대국민 소통 일상화로 국민의 의견을 정책으로 전환
- 2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통해 정부 투명성 강화
- 3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생활 속 문제해결

2 기본사회 — 포용과 균형의 기본사회 구현
- 4 사각지대 없는 포용적 공공서비스 체계 구축
- 5 모두가 기본적 삶을 보장받는 사회 안전망 구축
- 6 자율과 혁신을 통한 지역균형성장 체계 구축

3 공직혁신 — 성과로 신뢰받는 일 잘하는 정부 구현
- 7 국민 누구에게나 쉽고 편리한 서비스 환경 조성
- 8 가짜 노동 없는 성과 중심의 조직 운영
- 9 열정이 넘치고 일 잘하는 공직사회 조성

4 공공 AX — 공공부문 인공지능 대전환
- 10 공공부문 AI 대전환을 위한 인프라 구축
- 11 공공 AI 리터러시 강화 및 인재 양성

➡ 「정부혁신 추진전략('25.12.)」과 연계, 우리 시의 특성을 반영한 **총 80개 과제를 발굴**하여 시정혁신 실행계획 수립·추진

□ 추진방향

○ 기관장의 혁신리더십 강화 및 혁신활동 참여·혁신성과 내재화 노력

- 시장(부시장 포함) 참여 각종 회의·행사·현장방문 등 추진 시 혁신비전·의지 제시를 위해 참여 활성화(전부서) 추진 및 혁신 메시지 지원(조직담당관)

- 시정혁신과제를 발굴하여 성과평가(BSC)와 연계하고, 혁신네트워크 구성·운영 및 조직개편 등을 통한 혁신체계 구축 지원 및 활성화

- 대한민국 정부혁신 박람회, 혁신 워크숍, 혁신 우수사례 자료 공유 등 정부혁신 활동 적극적 참여 및 내재화를 통한 혁신역량 강화 추진

○ **시민 주도 참여·소통의 부산 구현**

- 정책소통을 위한 챗봇 AI 부기뉴스 서비스를 확대하고, 시민참여형 인구정책 아이디어 발굴하며, 가덕도신공항 보상지원 소통자문단을 운영하는 등 시민과 소통을 통해 시민의견을 정책으로 전환

- 한눈에 보는 '부산민원통계'를 대시민에게 공개하고,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을 추진하는 등 주민의 알권리 보장 및 부산시정의 투명성 강화

- 유료도로 불편민원처리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지역문제 해결 역량 강화를 위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시민의 목소리 경청을 통한 생활 속 문제해결

○ **포용과 균형의 기본사회 부산 구현**

- 전국최초 장애인 특화 공유 오피스를 시범 조성하고, 광역최초 찾아가는 외국인 감염병 예방 통합검진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사각지대 없는 포용적 공공서비스 체계 구축

- 부산형 통합돌봄 사업을 추진하고, 통합돌봄과 연계한 세대통합 케어·브릿지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 등 추진으로 모두가 기본적 삶을 보장받는 사회 안정망 구축

- 부산 소재 스타트업 실리콘 밸리 진출을 지원하고, AI·BC 융합 디지털 금융 혁신생태계를 구축하며, 5극3특 초광역 공유대학을 운영하는 등 자율과 혁신을 통한 지역균형성장 체계 구축

○ **성과로 신뢰받는 일 잘하는 부산 구현**

-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숨은 절세 혜택 선제적 발굴·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시민 수요 맞춤 러닝 인프라 확충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시내버스 요금 간편결제(제로페이) 도입 등 주민 누구에게나 쉽고 편리한 서비스 환경 조성

- 재난 안전분야 인력 강화 및 인센티브 확대를 추진하고, 라이프세이버 제도를 운영하며, 아차사고 제안제도 도입을 통한 안전혁신을 추진하는 등 가짜 노동 없는 성과 중심의 조직 운영

- 혁신과 소통이 활발한 건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저연차 공무원 공사감독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하며,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활성화 하는 등 열정이 넘치고 일 잘하는 공직사회 조성

○ **공공부문 인공지능 대전환 추진**

- 드론·센서 활용 AI 기반 급경사지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인공지능 지역확산 사업을 추진하며, AI 기반 소형어선 등 일체형 블랙박스 개발 및 부산형 지능행정 구현을 위한 AI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공공부문 AI 대전환을 위한 인프라 구축

- AI 지적업무 길잡이(ABC)를 제작하고, 신규임용(후보)자 AI 기반 문제해결 능력 강화 교육을 운영하는 등 공공 AI 리터러시 강화 및 인재 양성

○ **소확신(소**소하지만 **확**실한 시정혁**신)** 과제 선정

- 혁신과제 중 신속하고 현장중심의 실질적 대시민 체감도 높은 사업을 소확신 과제로 선정하여 추진

- 시민 수요 맞춤 러닝 인프라 확충 및 프로그램 운영, 찾아가는 외국인 감염병 예방 통합검진 시범사업, 동백패스와 K-패스 연계 개선, 시내버스요금 간편결제(제로페이)도입 사업 선정·추진

Ⅱ. 총괄표

주민 주도 참여·소통 거버넌스 구현

세부추진과제명	소관부서	추진일정
1. 주민 소통 일상화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정책으로 전환		
1. 정책소통 챗봇 AI 부기뉴스 서비스 확대	홍보담당관	'26.4~12월
2. 부산 어린이신문 「박(Big)아이 도란도란」 본격 확대 운영	미디어담당관	연중
3. 시민참여형 인구정책 아이디어 발굴 및 정책화 추진	인구정책담당관	'26.3~7월
4. 2026 부산유엔위크 시민참여형 재구조화	국제협력과	'26.1~12월
5. 부산 1,000인의 아빠단 운영	출산보육과	'26.3~12월
6. 거버넌스와 앵커시설을 활용한 찾아가는 15분도시 서비스 제공	15분도시과	'26.4~11월
7. 시민 참여 공공디자인사업 추진	도시공공디자인과	연중
8. 세계디자인수도(WDC) 청년 브랜드랩 프로젝트	디자인산업혁신과	'26.4~6월
9. 김해공항 소음피해지역 주민 소통강화를 위한 주민 견학 추진	신공항도시과	'26.상·하반기
10. 가덕도신공항 보상지원 소통자문단 운영	신공항사업지원단	'26.1~12월
11. 시민참여 교육과정 연계, 정책 환류 플랫폼 구축	인재개발원 전문교육과	'26.1~12월
12. 건설현장 안전점검 및 현장의 소리 소통·협력 강화	건설본부 총무부	'26.2~11월
2.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통해 지방정부 투명성 강화		
1. 한눈에 보는 '부산민원통계' 대시민 공개	통합민원과	'26.1~5월, 계속
2.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환경정책과	연중
3. 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생활 속 문제해결		
1. 자산학과 함께하는 사회공헌 모델구축을 통한 시민공감형 홍보추진	미디어담당관	'26.4~7월
2. 유료도로 불편민원처리 협의체 구성 및 운영	건설행정과	'26.5~12월
3. 부산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민관협의체 운영	생활공간혁신과	'26.5~11월
4. 지역문제 해결 역량 강화를 위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신설	청렴담당관	'26.2~6월, 계속

포용과 균형의 기본사회 구현

4. 사각지대 없는 포용적 공공서비스 체계 구축

1. 서부산권 영상미디어 접근성 확대를 통한 문화사각지대 해소	영상콘텐츠산업과	'26.1~12월
2. 경계성지능 아동·청소년「유소년축구교실」운영	복지정책과	'26.1~12월
3. 의료급여 수급자 방문형 복약상담 추진	복지정책과	'26.4~12월
4. [대표과제] 전국최초 장애인 특화 공유 오피스 시범 조성	장애인복지과	'26.3~7월, 계속
5. 광역최초, 찾아가는 외국인 감염병 예방 통합검진 시범사업 추진	감염병관리과	'26.1~12월
6. 부산시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	아동청소년과	'26.3.~12월
7.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 추진	반려동물과	'26.1~12월
8. 노후아파트 안전취약계층 소방안전물품 무상보급	소방재난본부 재난예방담당관	'26.1~11월
9.「SELF생존전략」장애인 소방안전교육 강화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서	'26.2~11월
10. 사회적 약자 대상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	농업기술센터	'26.1~12월
11. 외국인 자동차 등록 안내 책자 배포	차량등록사업소	연중

5. 모두가 기본적 삶을 보장받는 사회 안전망 구축

1. 시민안전보험 보장체계 고도화 및 사각지대 해소	안전정책과	'26.1~12월
2. 에이지테크 기반 지역밀착형 건강돌봄 플랫폼 보급	바이오헬스과	'26.2~12월, 계속
3. 부산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및 대출이자 지원 확대·개선 추진	청년정책과	'26.1~11월
4. 부산형 통합돌봄 추진	돌봄복지과	'26.3~12월
5. 통합돌봄 연계 세대통합 케어·브릿지 노인일자리 창출	노인복지과	'26.1~12월
6. 존엄한 생애말기돌봄 지원 강화	건강정책과	'26.1~12월
7. 출산 가정 맞춤형 건강 돌봄 서비스 제공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건강정책과	연중
8. AI디지털배움터 운영	정보화정책과	'26.1~12월
9. 동백패스와 K-패스 연계 개선	교통혁신과	'26.3~4월, 계속
10. 7분 화재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출동환경 개선	소방재난본부 방호조사과	'26.2~12월
11. 미술관 기반 지역 연계 문화돌봄 프로그램 운영 확대	현대미술관	'26.3~10월

6. 자율과 혁신을 통한 지역균형성장 체계 구축

1. 지역 소재 스타트업 실리콘 밸리 진출 지원	창업벤처담당관	'26.2~5월
2. AI · BC 융합 디지털금융 혁신생태계 구축	금융블록체인담당관	'26.4~12월, 계속
3. 부산 정주형 원격근무 프로젝트 사업	일자리노동과	'26.3~12월
4. 지역상권 활력 회복을 위한 상권활성화 사업 추진	중소상공인지원과	'26.1~12월
5. 산업단지 유치업종 구조개편	산업입지과	'26.4~12월, 계속
6. 부산 전력반도체 특화 인력양성	반도체신소재과	'26.1~'27.2월
7. 5극 3특 초광역 공유대학 운영	지산학협력과	'26.4~10월, 계속
8. 선박 AR/VR 가상화센터 조성 및 운영(영도 경제기반)	도시공간활력과	'26.4~12월
9. 김 국유품종을 활용한 부산지역적합 신품종 개발	수산자원연구소	'26.1~12월

성과로 신뢰받는 일 잘하는 지방정부 구현

7. 주민 누구에게나 쉽고 편리한 서비스 환경 조성

1. [납세자 권익보호] 숨은 절세 혜택 선제적 발굴·지원	법무담당관	'26.4~12월
2. 온라인 자동차등록시스템 구축	세정정책담당관	'26.4~9월
3. 종이 없는 전자계약 추진	회계재산담당관	연중
4. 적극행정의 표본이 된, "폐원된 어린이집의 무형유산 전수공간으로 변신"	문화유산과	'26.1~9월
5. 시민 수요 맞춤 러닝 인프라 확충 및 프로그램 운영	생활체육과	'26.3~12월
6. 건설현장 'Clean-업(UP) 맞춤형 클리닉' : 찾아가는 예방교육 및 컨설팅	건설행정과	'26.6~'27.1월
7. 정비사업 상생지원단 운영	건설행정과	'26.4~5월, 계속
8.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선정으로 양질의 주택 신속 공급	도시정비과	'26.4~6월
9. 시내버스요금 간편결제(제로페이) 도입	대중교통과	'26.4~7월, 계속

8. 가짜 노동 없는 성과 중심의 조직 운영

1. 주요 재정사업 평가 실효성 제고	재정협력담당관	'26.3~9월
2. 재난 안전분야 인력 강화 및 인센티브 확대 추진	인사과	'26.상반기

3. 라이프세이버 운영	소방재난본부 구조구급과	'26.1~8월
4. QR 기반 공동주택 세대점검 효율화 추진	소방재난본부 부산진소방서	'26.4~12월
5. 아차사고 제안제도 도입을 통한 안전혁신 추진	상수도사업본부 안전감사부	'26.2~12월

9. 열정이 넘치고 일 잘하는 공직사회 조성

1. 혁신과 소통이 활발한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	조직담당관	'26.1~12월
2. 소통으로 마음을 잇는 직원 어울한마당	총무과	'26.2~12월
3. 저연차 공무원 공사감독 역량강화 교육 추진	기술심사과	연중
4.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성화	감사담당관	연중
5. 소방공무원「찾아가는 상담실」상담 프로그램 운영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연중

공공부문 인공지능 대전환

10. 공공부문 AI 대전환을 위한 인프라 구축

1. 드론·센서 활용 AI기반 급경사지 안전관리	자연재난과	'26.1~12월, 계속
2. 지역 자본 역외 유출 방지를 위한 AI · 데이터 기반 지능형 거버넌스 구축	경제정책과	'26.1~5월, 계속
3. 인공지능 지역 확산 지원 사업	인공지능소프트웨어과	'26.1~12월
4. 부산형 지능행정 구현을 위한 AI 서비스 확대	정보화정책과	'26.2~12월
5. AI 기반 소형어선 등 일체형 블랙박스 개발	수산정책과	'26.5~11월, 계속
6. 기상특보 단계별 AI 지능형 콜백시스템 운용을 통한 119신고 폭주 대응력 강화	소방재난본부 119종합상황실	'26.1~12월
7. 생성형 AI 기반 민원해결도우미「119도와줘봇」챗봇 운영	소방재난본부 해운대소방서	'26.2~6월, 계속
8. AI로 실현하는 1:1 맞춤형「우리 가구 안전 디지털 처방	소방재난본부 금정소방서	'26.4~11월
9. AI 기반 도서 추천 서비스 도입	부산도서관	'26.3~10월, 계속
10. 소나무재선충병 무인항공기 예찰 및 AI 분류기술 연구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	'26.1~12월

11. 공공 AI 리터러시 강화 및 인재 양성

1. AI 지적업무 길잡이(ABC) 제작	토지정보과	'26.1~7월, 계속
2. 신규임용(후보)자 AI기반 문제해결 능력 강화 교육 운영	인재개발원 역량교육과	'26.2~11월

소확신 (소소하지만 확실한 지방정부혁신) 과제

1. 시민 수요 맞춤 러닝 인프라 확충 및 프로그램 운영	생활체육과	'26.3~12월
2. 광역최초, 찾아가는 외국인 감염병 예방 통합검진 시범사업 추진	감염병관리과	'26.1~12월
3. 동백패스와 K-패스 연계 개선	교통혁신과	'26.3~4월, 계속
4. 시내버스요금 간편결제(제로페이) 도입	대중교통과	'26.4~7월, 계속

Ⅲ. 추진과제

1. 주민 소통 일상화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정책으로 전환

1-1 정책소통 챗봇 AI 부기뉴스 서비스 확대

주관부서	대변인 홍보담당관	협조기관	-
담당자	조희경 주무관	연락처	051-888-1394

□ 추진배경

○ 생성형 AI 챗봇 서비스를 통해 주요 시정정책 소통 창구 마련

○ 시민의 정책질의 데이터 수집·분석을 통한 이슈 변화와 시민 관심흐름 파악

○ 챗봇 음성서비스, 웹·모바일 통합 이용환경 제공으로 접근성 및 편의성 강화

□ 세부 추진사항(주요내용)

○ 음성·3D 캐릭터 기반 AI 챗봇 서비스 실시 및 안정화

- 최신 AI모델(GPT-5.2) 적용 및 실시간 음성대화 챗봇 서비스 실시
- 3D모델로 구축된 부산시 캐릭터 **'부기'** 상황별 총 16가지 모션 적용
- 웹, 모바일 앱(안드로이드, iOS) 적용으로 멀티플랫폼 지원
- 대화이력, 질의분석, 사용량 통계 등 통합관리자 메뉴 구축

○ AI 부기뉴스 서비스 학습데이터 범위 확대로 정보접근성 강화

【기존】 부산시보, 보도자료 ⇒ **【확대】**

- **부산소식** — 통합 공지사항 등
- **주요시책** — 주요 업무계획, 달라지는 시책/제도 등
- **부산소개** — 부산의 오늘, 상징, 인물, 역사 등
- **분야별 정보** — 경제, 일자리, 사회복지, 안전 등 12개 항목

○ 대표 홈페이지 통합검색에 '생성형 AI기반 지능형 통합검색' 구축

- 기존 키워드 통합검색에 AI답변 영역을 추가하여, 사용자 질의의도 기반의 정확하고 종합적인 답변 제공 ※ 네이버 AI브리핑 참고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시행 전	시행 후
○ 텍스트(웹)기반 AI 챗봇 서비스	○ 음성·3D 캐릭터 기반 AI챗봇 서비스 실시 및 안정화
○ 보도자료, 부산시보 데이터 기반 챗봇서비스	○ 통합홈페이지 내 부산소식, 주요시책, 부산소개, 분야별정보 데이터 학습범위 확대
○ 대표 홈페이지 텍스트 기반 통합검색	○ 대표홈페이지 통합검색에 '생성형 AI기반 지능형 통합검색'구축

○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 부산시보, 보도자료 등의 제한적 자료를 바탕으로 한 단순 텍스트 기반 응답 ○ PC(웹)전용 챗봇으로 핸드폰, 태블릿 등 다양한 기기에서 이용할 수 없는 불편함 존재 ○ 키워드 방식의 정확한 검색어 입력 필요 및 복합질문 처리 불가	○ 시민이 원하는 최신의 정확한 시정소식을 실시간 음성 응답 제공으로 시민 체감형 소통 강화 ○ 멀티플랫폼 지원 및 직관적 인터페이스 제공으로 웹 호환성, 접근성, 개방성 향상 ○ 자연어 기반 직관적 검색 가능으로 검색 성공률 향상 및 복합 질문에 대한 종합적인 답변 제공 가능

□ '26년 소요예산

○ 챗봇 OpenAI(ChatGPT) API 서비스 연간 사용료 : 2,000천원

※ 확대 구축은 시 통합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보수 용역사업 과업 포함.

□ 추진일정

○ 4월 : 음성·3D 캐릭터 기반 AI 챗봇 서비스 오픈 및 안정화

○ 4월 ~ 6월 : 부산소개, 분야별 정보 등 AI 학습범위 확대

○ 7월 ~ 12월 : 대표홈페이지 통합검색에 '생성형 AI 기반 지능형 통합검색' 구축 운영

□ 홍보계획

○ 시 통합 홈페이지, 부산시보, 공식 유튜브, SNS 등 활용 홍보

1-2 부산 어린이신문『빅(Big)아이 도란도란』본격 확대 운영

주관부서	대변인 미디어담당관	협조기관	시 관련부서, 시 교육청, ㈜부산일보, 공공·민간기관 등
담당자	최지혜, 조현경 주무관	연락처	051-888-1295, 1297

□ 추진배경

○ 어린이 독자층을 대상으로 지역 역사·문화 및 부산 소식을 널리 알리고, 글쓰기와 창의적 사고 능력 증진을 위한 콘텐츠 제공 필요

- 부산 특색을 살린 다채로운 활동을 통해 어린이가 부산에 대한 자부심을 키우고, 지역사회와 소통하면서 미래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촉진

○ 이를 위해 '25년 신규사업인 부산 어린이신문(빅(Big)아이 도란도란) 발간 및 어린이기자단(꼬마부산기자단) 운영을 본격적으로 확대 추진

-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춘 참여형 시정 매체 운영으로 시정 소통을 강화하고 교사, 학부모 등으로 독자층을 한층 넓혀 나가고자 함

〈 '26년도 부산 어린이신문 운영현황 〉

❖ 발행형태 : 계간 / 타블로이드 12면 / 회당 16만부 발행 * '25.6. 창간
❖ 배부현황 : 443개소(초등학교 319, 어린이복합문화공간, 교보문고 등 124개소) * 배부처 확대 추진
❖ 주요내용 : ❶어린이기자단 취재 기사, 부산시정·문화·역사 정보 등 어린이신문 제작,
❷어린이기자단 운영·취재 지원, ❸홈페이지 운영 등

□ 세부 추진사항

○ **(신문*발행 확대)** 횟수(연3→4회), 부수(11만부→16만부), 면수(8면→12면) 확대

- 일선 학교(교육청) 요청에 따라 초등학교 전학년 대상 배부
- 어린이기자단 뿐 아니라 여러 독자층의 목소리를 담기 위한 지면 확대
- 어린이의 신문 제작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표지 그림 공모전 운영(연 4회)
- 시보편집위원회 운영(연 4회)을 통해 다양한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 반영
- 하반기 독자 만족도 조사를 통해 신문 개선방향 도출('26.10~11.)

* 표지 그림, 기자단 취재 기사, 축제·행사 소개, 전문가·학부모 기고, 웹툰, 낱말퀴즈 등으로 구성

○ **(기자단 운영 확대)** 보다 많은 어린이에게 기자단 참여 기회 확대(204명→314명)

- 구·군별 안배로 지역별 균형있는 참여 / 다문화가정 어린이 특별 선발
  * 일반모집 300명, 다문화가정 9명, 제1기 우수기자 5명으로 구성
- 단체 현장탐방, 문화체험, 시정 미션취재, 기획인터뷰 등으로 매월 취재활동계획을 재미있게 구성·추진 * 하절기는 실내 방학특강 개최
- 수료식 및 발대식 개최를 통해 기자단의 소속감과 책임감을 부여하고 1년간 취재활동이 우수한 기자에게 상장 수여
  * 제1기 기자단 수료식('26.1.) / 제2기 기자단 발대식('26.3.) 개최
  * 제1기 기자단 수료식에서 시장상(25명) 등 총50명 상장 수여

○ **(홈페이지 운영·홍보 확대)** 기자단 및 독자층을 위한 쌍방향 소통 플랫폼 운영

- 전문가의 첨삭지도를 통해 기자단 취재기사의 품질 제고
- 우수 취재기사는 온라인콘텐츠*로 제작하고 어린이신문 표지 그림을 활용한 굿즈 제작 등 관련홍보 강화 * 어린이신문 인스타그램 등 운영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시행 전	시행 후
○ '25년 신규사업 - '전반적 만족' 91%	○ ('26년) 부산 어린이신문 '전반적 만족' 달성 목표 (91.5%) - '25년 대비 신문 발행 및 기자단 확대 운영으로 사업의 난이도 및 도전성이 매우 높음

○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 ('25년)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춘 시정 소통매체 창간 - 초등학교 4~6학년 등 11만부 배부 - 제1기 어린이기자단(204명) 운영	○ 2년차 사업으로서 본격 확대 운영 - 초등학교 전학생 대상 16만부 신문 배부 - 제2기 어린이기자단(314명) 확대 운영 ○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춘 소통매체 운영으로 시정 공감 제고 - 부산시민으로서 정체성 함양 및 미래 인재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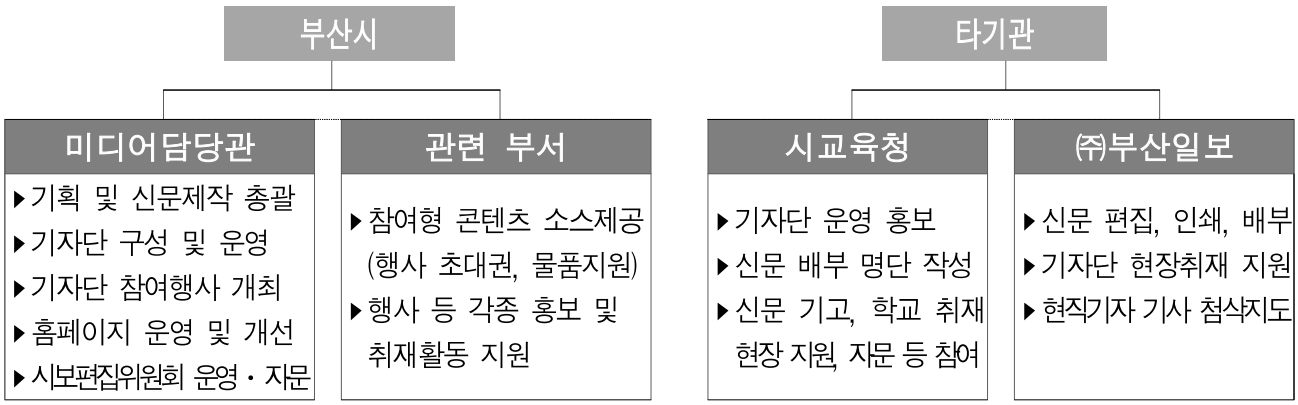
□ ’26년 소요예산

○ 시비 360백만원

- 신문제작 및 기자단 운영 330백만원, 기자단 행사운영 30백만원

□ 추진체계

○ 시 주관·관련 부서, 시교육청, 공공·민간기관, 민간기업간 상시 업무협업체계 구축



□ 추진일정

○ '26. 1월 : 제2기 어린이기자단 구성, 제1기 어린이기자단 수료식 개최(1.31.)

○ '26. 2월 : 어린이신문 제4호 표지 그림 공모전 개최

○ '26. 3월 : 제2기 어린이기자단 발대식 개최(3.7.) 및 취재활동 추진, 어린이신문 사업자 계약 완료

○ '26. 4월~ : 표지 그림 공모전 개최·시상 및 어린이신문 제4~7호 발행(분기별), 어린이기자단 취재활동 및 홈페이지·온라인콘텐츠 운영(계속),

○ '27. 2월 : 제2기 어린이기자단 수료식 개최

□ 홍보계획

○ 市 보유 온·오프라인 홍보매체 등 활용 전방위 홍보(연중)

- 부산시보, 어린이신문 지면 및 홈페이지, 보도자료, SNS 등
- 기자단 취재활동 영상제작, 온라인 가정통신문, 포스터 등

1-3 시민참여형 인구정책 아이디어 발굴 및 정책화 추진

주관부서	기획관 인구정책담당관	협조기관	부산연구원 인구전략연구센터
담당자	윤지영 주무관	연락처	051-888-1114

□ 추진배경

○ (정책 환경 변화) 저출생·청년 유출·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지역 특성을 반영한 체감형 인구정책 발굴 필요성 증대

○ (시민 참여 확대)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공감대 형성과 실효성 제고를 위해 시민 의견의 정책 반영 필요

□ 세부 추진사항

○ 시민참여 기반 인구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운영

- 전국 단위 공모를 통해 시민·청년·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 참여 확대
- 3대 분야(생애주기·정주환경·혁신성장) 중심 정책 아이디어 발굴

○ 단계별 심사 및 정책 검토 체계 구축

- 사전검토, 서면심사, 정책검토, 발표심사로 이어지는 단계별 심사 체계 구축·운영
- 인구전략연구센터의 인구영향 분석을 반영하여 정책 연계성 및 실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

○ 정책화 연계 및 환류 시스템 강화

- 관련 부서(기관) 및 인구변화대응 TF를 통한 실현 가능성 및 정책 적합성 사전 검토 실시
- 우수 제안 과제를 인구영향평가 및 정책 수립 과정에 반영하여 지속적 정책 환류 및 활용체계 구축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시행 전	시행 후
○ 시민 참여 기반 정책 발굴 및 정책 반영 체계 미흡 ○ 정책 아이디어의 실현 가능성 검토 및 환류 체계 부족	○ 공정하고 체계적인 단계별 심사 운영 및 우수 아이디어 8건 선정 ○ 인구영향평가 및 정책 수립 과정과 연계하는 정책 검토 및 활용체계 마련

○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 정책 발굴이 행정 중심으로 이루어져 시민 체감도가 낮은 수준 ○ 정책 아이디어 발굴과 정책 반영 간 연계가 미흡한 상태 ○ 인구정책에 대한 시민 참여 기회가 제한적 ○ 단순 공모 수준으로 정책 실행력 확보에 한계	○ 시민참여 기반 정책 발굴 확대로 현장 수요를 반영한 정책 실효성 제고 ○ 인구영향평가 및 정책 수립 과정과 연계를 통한 정책화 및 환류체계 강화 ○ 전국 단위 참여 확대를 통한 정책 공감대 형성 및 참여 활성화 ○ 정책 검토 및 실행 가능성 검증을 통한 정책 실행력 강화

□ 관련 조례 및 지침 개정계획

○ 해당없음

□ '26년 소요예산

○ 소요예산: 시상금 5,000천원(시비)

□ 추진체계

○ (부산시) 공모전 운영 및 제안 과제 실현 가능성·추진 여건 검토

○ (BDI) 제안 과제에 대한 인구영향 분석 및 정책 연계성 검토

○ (인구정책위원회) 우수 과제 선정 및 정책 적합성 종합 평가

< 아이디어 공모전 추진 절차 >

사전심사	서면심사	정책검토	발표심사	수상작 선정
부산시, 센터 (4월)	심사위원회 (5월)	인구변화대응TF (5월)	인구정책위원회 (6월)	부산시 (6월)

□ 추진일정

○ 공모전 공고 및 유관기관 안내, 홍보: '26. 3~4월

○ 제안 심사 및 수상작 선정: '26. 4~6월

- 접수과제 사전검토 및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서면 발표심사 및 수상작 최종 선정

○ 시상식 개최 및 정책 환류 추진: '26. 7월~

- 시상식 개최, 우수제안 관련 부서 검토 및 인구정책 활용 추진

□ 홍보계획

○ 보도자료 배포, 시 홈페이지 및 온라인 국민소통창구(소통24) 공고

○ 포스터 제작 및 배부, 온라인 홍보 및 구·군, 유관기관 등 홍보

1-4 2026 부산유엔위크 시민참여형 재구조화

주관부서	관광마이스국 국제협력과	협조기관	부산글로벌도시재단, 부산지방보훈청, 유엔기념공원 등
담당자	우혜진 주무관	연락처	051-888-7752

□ 추진배경

○ 세계 유일의 유엔기념공원을 중심으로 '평화도시 부산'을 국내외에 확산하는 대표 국제행사임.

○ 2026년에는 '유엔의 날 기념식'을 시민참여중심 행사로 재구조화하고, '턴투워드부산'과 차별화된 콘텐츠를 운영하여 시민 공감대와 체감도를 높이고자 함.

○ 청년·유학생 참여, 체험형 프로그램, 온라인 확산을 강화하여 참여·소통형 국제행사로 고도화할 필요가 있음.

□ 세부 추진사항

○ 유엔의 날 기념식 시민참여형 재구조화

- 기념식의 상징성은 유지하되, 시민참여형 평화 콘텐츠를 확대하고, 턴투워드부산과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운영
- 추모행사는 상징성과 엄숙성을 유지하고, 시민참여 프로그램은 역사와 평화 체험·서포터즈 등 참여형 콘텐츠로 확대

○ 청년 참여 확대

- 유엔즈(UNs)를 확대 운영하여 청년·유학생의 행사 참여와 홍보 활동 강화

○ 체험형 콘텐츠 운영

- 미래세대 가족 단위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역사체험형 프로그램 운영

○ 현장·온라인 소통 강화

- 홈페이지, SNS 등을 활용한 시민 의견수렴
- 시민 건의사항과 참여 후기를 차년도 행사 기획에 반영

○ 성과중심 운영: 핵심지표를 설정·관리하여 성과를 체계적으로 점검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시행 전	시행 후
○ 유엔의 날 기념식과 턴투워드부산 간 차별성 부족 ○ 시민체감도 낮음 ○ 성과관리 체계 미흡	○ 성과목표 - 유엔의 날 기념식 시민참여형 재구조화 - 유엔즈(UNs) 150명 내외 운영 - 체험형 프로그램 참여 1,000명 내외 - 만족도조사 500건 이상(모바일, 현장) - 온라인 홍보 도달 수 10만회 이상

○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 추모 중심 행사 이미지로 시민 체감도 제한 ○ 국제행사 성과의 시민 확산효과 부족	○ 시민이 함께 만드는 평화도시 브랜드 행사로 전환 ○ 청년·미래세대 참여 확대를 통한 시민 공감대 형성 ○ 참여·소통형 국제행사 모델 정착 및 부산 브랜드 제고

□ '26년 소요예산

○ 250,000천원(시비)

□ 추진체계

○ 국제협력과: 기본계획 수립, 대외협력, 관계기관 총괄 조정

○ 부산글로벌도시재단: 행사 세부 운영, 시민참여 프로그램 기획·집행

○ 부산지방보훈청·보훈단체: 참전용사 및 보훈행사 연계 협력

○ UN기념공원: 행사 장소 운영 협조, 현장 동선·안전관리 지원

○ 대학·청년단체·시민단체: 서포터즈, 토크콘서트, 시민참여 프로그램 협업

□ 추진일정

○ ‘26. 1.~3.: 세부 프로그램 기획 및 유관기관 실무회의 개최

○ ’26. 4.: 기본계획 승인 및 사업비 교부

○ ‘26. 5.: 서포터즈 유엔즈 발대식

○ ‘26. 10.~11.: 2026 부산유엔위크 개최, 만족도 조사 및 성과분석

○ ‘26. 12.: 결과보고(차년도 개선과제 도출)

□ 홍보계획

○ 홈페이지(시, 부산글로벌도시재단), SNS 등 온라인 홍보

○ 시민참여 프로그램 중심 카드뉴스·숏폼 제작

○ 대학, 보훈단체, 국제교류 유관기관 등 대상 맞춤형 홍보 추진

1-5 부산 1,000인의 아빠단 운영

주관부서	여성가족국 출산보육과	협조기관	구·군, 관련 수행기관
담당자	이승휘 주무관	연락처	051-888-1564

□ 추진배경

○ **(국정과제 연계)** 정부의 「국가가 책임지는 아이 돌봄·양육」 기조에 따라 영유아·돌봄 양육의 공공 책임이 강화되고 있으며, 양질의 보육에 대한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음

○ **(아빠 육아 참여 확대 필요)** 양육 부담 완화와 가족 기능 강화에 아빠 육아 참여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에도 참여 기회 및 지속 활동 기반은 부족한 실정

□ 세부 추진사항

○ **(추진전략)**

- 市-구·군 협력 기반 지역 특성 반영 자율적 운영 활성화
- 아빠 육아 경험 공유 및 지속적 참여 기반 마련
- 우수 사례 발굴·공유를 통한 지속 가능한 부산형 육아 공동체 브랜딩

○ **(대 상)** 市 전역 아빠단 1,000명(市 아빠단 100명, 16개 구·군 아빠단 900명)

○ **(내 용)**

- 부산 1,000인의 아빠단 발대식(3.21.)
- 市 및 구·군별 온라인 미션(주1회)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월1~2회)
- 함께육아day 합동행사(9월), 유관기관 협업프로그램(10월), 해단식(12월)

○ **(사 업 비)** 340,000천원 ▸출산기금 300,000천원, 40,000천원(국 20,000 시 20,000)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시행 전	시행 후
○ 市 아빠단 운영 (1개 아빠단 운영)	○ 市 및 16개 구·군 아빠단 구성 및 운영 (총 17개 아빠단 운영)

○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 市 중심의 단일 운영으로 구·군별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아빠단 운영 필요	○ 구·군별 자율운영을 기반으로 시 차원의 연계·지원 기능 강화를 통한 부산 전역 지속적인 아빠 육아 참여 문화 확산

□ '26년 소요예산

○ **(사 업 비)** 340,000천원 ▸출산기금 300,000천원, 40,000천원(국 20,000 시 20,000)

□ 추진체계



□ 추진일정

○ '26. 3.21. 부산 1,000인의 아빠단 발대식 개최

○ '26. 4. 아빠단-유관기관 협업 프로그램 발굴 요청 공문 발송

○ '26. 5.~7. 협업프로그램 기획 및 관련 기관 협의

○ '26. 9. 아빠단 함께육아day 합동행사

○ '26. 10.~11. 아빠단 협업 프로그램 진행

○ '26. 12. 아빠단 합동 해단식

□ 홍보계획

○ 市 공식 SNS(유튜브, 인스타) 활용 홍보

○ 구·군 육아종합지원센터 채널 활용

1-6 거버넌스와 앵커시설을 활용한 찾아가는 15분도시 서비스 제공

주관부서	미래공간전략국 15분도시과	협조기관	자치구·군 등
담당자	이지연, 이미영, 이영준 주무관	연락처	051-888-4531

□ 추진배경

○ 거점시설 중심 15분도시 서비스 공급만으로는 한계가 있음

○ 수요가 있는 곳으로 직접 찾아가는 15분도시 서비스가 필요함

□ 세부 추진사항

① 주민참여 리빙랩 도출 아이디어 실행

- (아이디어 도출) 그룹별 온·오프라인 워크숍을 통해 생활권별 지역 문제를 발굴하고, 주민 주도의 해결 아이디어를 구체화
- (아이디어 실행) 리빙랩을 통해 도출된 아이디어 중 필요성과 실행 가능성을 검토하여 찾아가는 15분도시 서비스 형태로 추진

② 하하센터 동아리 사회공헌 활동 지원

- (수요조사)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생활권별 사회공헌 수요조사
- (매칭 및 지원) 수요 내용에 적합한 하하센터 동아리를 연계하여 재능나눔, 여가·문화 프로그램 등 사회공헌 활동 지원

③ 찾아가는 문화행사 개최

- 부산문화재단과의 협업을 통해 생활권 별 찾아가는 문화행사 개최 (음악회, 전시회, 체험활동 등)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시행 전	시행 후
○ 해피챌린지 대표생활권 내 주민참여 리빙랩 구성 및 실행 ○ 하하센터 동아리 활동 지원	○ 부산시 **전 생활권 대상** 리빙랩 워크숍 개최, 아이디어 도출 및 시행 ○ 하하센터 동아리 활동 및 **사회공헌 활동 지원** ○ **찾아가는 문화행사 개최**

○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 거점시설 중심의 서비스 제공으로 생활권별 서비스 체감도에 차이가 있음 ○ 서비스 공급이 취약한 지역은 15분도시 프로그램 접근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함	○ 지역 주민들이 함께 지역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이웃 간 소통 증진 및 신뢰 구축 ○ 찾아가는 15분도시 서비스를 통해 15분도시 서비스에 대한 지역 격차 완화

□ 관련 조례 및 지침 개정계획

○ 해당사항 없음

□ '26년 소요예산

○ 주민의창구 사업 예산 90,000천원(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시비)

○ 15분도시 행사 개최 관련 예산 60,000천원(행사운영비, 시비)

□ 추진체계

- (부산시) 주민참여 리빙랩 및 하하센터 운영 총괄
- (부산디자인진흥원) 수탁기관으로서 주민참여 리빙랩 구성·운영 전반
- (구·군) 하하센터 운영, 주민의견 청취 및 사업수행 협조
- (부산문화재단) 생활권별 찾아가는 문화행사 운영 협조

□ 추진일정

○ 주민참여 리빙랩 구성, 하하센터 동아리 모집('26.4월)

○ 리빙랩 아이디어 선정, 하하센터 사회공헌 및 문화행사 수요조사('26.5~8월)

○ 찾아가는 15분도시 서비스('26.9월~11월)

□ 홍보계획

○ 리빙랩 단원 모집 등 사업 관련사항 홍보

- 시청 홈페이지 및 SNS를 통한 홍보
- 유관기관(부산디자인진흥원, 구·군) SNS를 통한 홍보
- 동 행정복지센터, 마을공동체, 행복마을 등에 대면·유선 홍보

1-7 시민 참여 공공디자인사업 추진

주관부서	미래디자인본부 도시공공디자인과	협조기관	구·군, 공공기관 등
담당자	윤희정 주무관, 정민주 주무관	연락처	051-888-4342, 4355

□ 추진배경

○ **(정책 패러다임 전환) 행정 주도에서 시민 체감 중심으로**

- 행정 주도의 시설물 정비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이 직접 불편 요소를 발굴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수요자 참여형' 모델 정착

○ **(포용적 가치 실현) 모두를 위한 보편적 환경 조성**

- 다양한 시민(고령자, 장애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 포함)의 특성을 설계 단계부터 적용하여 단절과 소외 없는 '포용적 도시공간 환경' 조성

○ **(사업 성과 고도화) 검증된 모델의 전략적 확산**

- 시민 참여 기반 유니버설 디자인사업을 통해 확인된 공공공간 개선 효과와 높은 이용자 만족도를 도시 전반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고도화 전략' 추진

○ **(정책 효능감 제고) 사업 공감대 형성을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

- 시민의 목소리가 실제 공간의 변화로 이어지는 과정을 통해 행정 신뢰도 제고 및 주민 주도의 '지속 가능한 공공서비스' 체계 구축

□ 세부 추진사항

○ **(시민 참여 공공디자인 활동)**

- (구성) 시민·전문가, 청년 활동가, 유니버설디자인 전문가 등 참여형 협의체
- (역할) 사업 전 과정 참여

사업단계	주요역할
대상지 선정	• 현장 진단 및 개선 아이디어 제안
설계용역	• 디자인 워크숍 참여 및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설계안 의견 반영
공사	• 착·준공 시민 보고회 참여
관리	• 이용 실태 및 접근성·편의성 모니터링 등

○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

- 이용률·접근성이 높고 개선이 시급한 지역 선정
- 시설물 철거・통합・정비 및 보행 및 체류 중심 공간 재구성
- 시민참여 기반 문제 진단 및 디자인개발
- 이용약자를 고려한 동선 체계 개선
- 이용자 특성(고령자, 장애인 등)을 반영한 맞춤형 설계 적용
- 안내체계, 보행환경 등 공공공간 전반에 대한 통합적 개선 추진

○ **(디지털 기반 성과 시각화 및 아카이빙)**

- 사업 전・후 비교 콘텐츠 제작을 통한 시민 이해도 제고
- 유동인구 변화, 보행환경 만족도 등 데이터 확보 및 향후 정책 반영

○ **(홍보 및 성과 확산)**

- SNS, 시 홈페이지, 소식지 등 온라인 홍보 강화
-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을 통한 정책 인지도 제고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시행 전	시행 후
○ 공공공간 활용도 및 접근성·편의성 고려 미흡	○ 시민 참여율 확대 및 만족도 제고 - 시민이 참여하는 공공디자인 활동 3회 이상 운영

○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 노후·중복 공공시설물로 보행 불편 및 공간 효율성 저하 ○ 관 주도의 획일적 시설물 정비	○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및 모두를 위한 포용적 도시환경 조성 ○ 시민 소통 중심의 공공디자인 모델 확립

□ 관련 조례 및 지침 개정계획

○「부산광역시 도시공공디자인 혁신에 관한 조례 」개정 검토(‘26.6.)

- (제2조) 도시비우기 사업 정의 규정
- (제6조) 사업계획 수립 명문화
- (제8조) 무분별한 시설물 설치 방지 기준 명문화

□ ’26년 소요예산(총 17.01억원)

○ (도시비우기사업) 11.01억원

- 2026년 설계비 1억원, 2025년 공사비 10.01억원(이월예산)

○ (유니버설디자인 개선사업) 6억원

- 2026년 설계비 70백만원, 공사비 530백만원

□ 추진체계

○ (부산시) 사업총괄, 정책방향 설정, 제도개선, 성과관리 및 홍보

○ (디자인진흥원) 시민 참여 공공디자인 활동 협조

○ (구・군 및 공공기관) 사업 시행 및 사후관리

○ (시민) 정책파트너(현장진단, 아이디어 제안, 모니터링 및 평가)

□ 추진일정

○ ‘26. 1분기 : 대상지 공모, 시민 인식 조사

○ ‘26. 2분기 : 시민 참여 공공디자인 활동 구성 및 현장 진단

○ ‘26. 3분기 : 설계안 도출 및 착공(시민 보고회)

○ ‘26. 4분기 : 사업 준공 및 성과 확산

□ 홍보계획

○ 디지털 홍보 : SNS, 시 홈페이지, 뉴스레터 활용, 시민참여 후기 등

1-8 세계디자인수도(WDC) 청년 브랜드랩 프로젝트

주관부서	미래디자인본부 디자인산업혁신과	협조기관	부산대학교, 부산대 라이즈사업단 지역혁신본부
담당자	김주연 주무관	연락처	051-888-2761

□ 추진배경

○ 2028 세계디자인수도 부산 선정 계기 **시민 체감형 도시브랜드 홍보 필요성 증대**

- 기존 일방향 홍보 방식에서 최신 트렌드 반영 참여형 홍보 전환 필요

○ **청년 참여 기반 지역혁신 정책과 연계한 지속가능 사업모델 부족**

- 대학-지자체 협력을 통한 청년 인재 양성 및 지역 정착 유도 필요

□ 세부 추진사항

○ **청년 참여형 WDC 캐릭터 콘텐츠 개발**

- 부산대 학생 참여를 통한 캐릭터 발굴·개발 및 콘텐츠 제작

○ **지역 성장 기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 市(부산RISE혁신원)-대학 간 상호 협력체계 구축

○ **시민 참여형 홍보 콘텐츠 확산**

- WDC 캐릭터 연계 굿즈, 소개영상 등 홍보 확산

○ **현장 중심 정책 소통 강화**

- 대학 및 교육 현장 방문 및 사업 제안을 통한 참여 유도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시행 전	시행 후
○ 단순 홍보영상 중심 콘텐츠 개발 ○ 캐릭터 등 다양한 콘텐츠 부족 ○ 청년 참여 기반 콘텐츠 제작 미흡	○ WDC 비전·핵심가치 반영 캐릭터 1종 개발 - 캐릭터 기획·디자인개발 ○ 대학생 참여 기반 캐릭터 개발 및 콘텐츠 제작 참여 확대 - 부산대학교 대학생 참여(프로젝트형 운영)

- 청년 참여형 WDC 캐릭터 콘텐츠 개발
- 온오프라인 홍보 채널 확산(전시관, SNS 등)

○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 일방향 홍보 중심 시민체감도 낮음 ○ 대학-지자체 협력사업 제한적 운영 ○ 청년 참여 및 지역연계 기회 부족	○ 청년 참여형 콘텐츠 제작 시민공감도 향상 ○ 지산학 협력 기반 지속가능한 협력모델 구축 ○ 청년 인재 참여 확대 및 지역정착 기반 마련

- 청년 참여 기반 콘텐츠 제작 시민공감도 높은 도시브랜드 확산
- 지자체-대학 협력 모델 구축을 통한 지역혁신 기반 마련
- 지속가능한 WDC 홍보 콘텐츠 생산·확산 체계 구축

□ '26년 소요예산

○ **사업비: 비예산(부산대 라이즈사업단 지역혁신본부 협력사업 활용)**

- WDC 콘텐츠 제작비 20백만원 재정 지원

□ 추진체계

구 분	주요 역할
부산시 (총괄 · 홍보)	– WDC 캐릭터 사업 총괄 기획 및 운영 – 온 · 오프라인 채널(전시관, SNS, 공공공간 등) 활용 홍보 확산 – 사업 성과관리 및 대외 홍보 추진
부산대학교 (개발 · 콘텐츠)	– WDC 캐릭터 발굴 및 디자인 개발 – 재학생 참여 기반 창의 아이디어 기획 및 콘텐츠 제작 – 지산학 협력 기반 창의인재 참여 및 결과물 도출
라이즈사업단 (재정 · 운영지원)	– 사업비 지원 및 예산 집행 관리 – 지자체–대학 협력사업 운영 지원 및 조정 – 성과 확산 및 RISE 사업 연계 추진

□ 추진일정

○ '26. 4. 참여학생 모집 및 운영계획 수립

○ '26. 5. WDC 캐릭터 아이디어 기획 및 시안 개발

○ '26. 6. 전문가 자문 및 중간 점검회의 추진,
WDC 캐릭터 최종 선정 및 디자인 고도화

□ 홍보계획

○ 시 및 WDC 공식 SNS 채널 활용 콘텐츠 공개 및 확산

- 카드뉴스, 숏폼 영상 등 트렌드형 콘텐츠 제작·운영

○ 캐릭터 개발 및 청년 참여 성과 중심 언론 홍보 강화

- 지역 청년 인재 양성 및 기회 제공 등 기획기사 유도

○ 대외 공모전·어워드 활용 홍보

-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 등 관련 대회 작품 제출 및 브랜드 홍보

○ 주요행사 연계 WDC 부스 전시 등 시민참여 확대

- 캐릭터 전시, 포토존, 체험형 콘텐츠 운영 시민참여 이벤트 추진

○ 캐릭터 활용 AI 이미지 생성 이벤트 추진

- '나만의 WDC 캐릭터 스타일 만들기' 등 시민체험형 이벤트 추진

□ 향후계획

○ 라이즈 사업단 연계 지역혁신 협력사업 지속 발굴·확대

○ 청년 참여 기반 WDC 브랜드 세계관 확장

○ 지역 청년 협업 WDC 브랜드 유니버스 단계적 추진

○ WDC 단계적 추진(안)

구분	2025년 (시범)	2026년 (구축)	2027년 (적용)	2028년 (확산)
콘텐츠	▲ AI홍보영상제작 (동서대)	▲ WDC 캐릭터 개발 (부산대)	▲ WDC 굿즈 제작 (지역 대학)	▲ WDC 응원송 제작 (지역 대학)
홍보·확산	SNS 채널 기반 초기 홍보 및 반응 데이터 확보	캐릭터 활용 콘텐츠 제작 및 홍보	주요행사 연계 체험형 홍보 운영	글로벌 홍보 콘텐츠 제작 및 국내외 확산
협력체계	대학 협업 기반 프로젝트 운영	지자체-대학 협력 운영체계 구축	지자체-대학-기업 협력 확대 및 프로그램 운영	지산학 협력 기반 지속가능 협력모델 정착
활용·적용	WDC 브랜드 기초 콘텐츠 기획	시민 참여형 콘텐츠 제작 프로그램 운영	관광·행사 프로그램 연계 콘텐츠 활용	지속가능 도시브랜드 운영 및 확산

1-9 김해공항 소음피해지역 주민 소통강화를 위한 주민 견학 추진

주관부서	신공항추진본부 신공항도시과	협조기관	한국공항공사
담당자	변영아 주무관	연락처	051-888-4104

□ 추진배경

○ 김해공항 소음지역 주민의 실질적 복지 체감도 제고

- 장기간 소음 피해를 겪고 있는 강서구 주민들에게 단순한 보상을 넘어선 심리적 위안 제공 및 소통 기반의 체감형 행정 제공

○ 주민 요구사항의 다양화 및 맞춤형 소음대책 반영 필요

- 소음대책과 관련한 다양한 주민 의견의 정책 반영 체계화 필요

□ 세부 추진사항

○ 소음지역 주민 대상 견학 프로그램 운영

- 타 공항 소음대책 사례 벤치마킹 및 현장 체험을 통한 심리적 피로감 완화 및 정서적 안정 지원

○ 견학 연계형 현장 소통 강화

- 현장 일정 중 자유로운 대화를 통한 밀착형 소통 및 의견 청취

○ 주민 의견 체계적 관리 및 활용

- 견학 시 수렴된 의견 중 반복·공통 요구사항 중심으로 우선 검토 과제 도출
- 자체 추진 가능사업 검토 및 국토부·한국공항공사 등 관계기관 건의 자료로 활용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시행 전	시행 후
○ 타 기관 방문 중심의 주민 견학 운영	○ 주민 정서 케어 및 정책 발굴 병행한 김해공항 소음지역 주민 견학(연 2회) - 주민 소통 확대를 위한 반기별 현장 견학 횟수

○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 타 기관 방문 중심 견학 운영 ○ 주민 의견 청취 및 관계기관 전달	○ 견학 과정에서의 자연스러운 소통을 통한 주민 의견수렴 활성화 및 행정 신뢰 형성 ○ 현장 사례 기반의 설득력 있는 정책 건의 실효성 제고

□ 관련 조례 및 지침 개정계획

○ 해당없음

□ ’26년 소요예산

○ 김해공항 소음지역 주민 견학 30백만원(시비)

* 한국공항공사 지원금 약 15백만원 별도

□ 추진체계

○ (부산시) 사업 계획수립 및 추진, 주민 요구사항 검토·건의 등

○ (한국공항공사) 주민 견학 행사비 지원

□ 추진일정

○ ‘26. 上. 제1회 김해공항 소음지역 주민 견학 실시

○ ‘26. 下. 제2회 김해공항 소음지역 주민 견학 실시

□ 홍보계획

○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 주민 소통 사례 확산

1-10 가덕도신공항 보상지원 소통자문단 운영

주관부서	신공항추진본부 신공항사업지원단	협조기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담당자	한충훈 주무관	연락처	051-888-4664

□ 추진배경

○ 가덕도신공항 건설 보상 관련 각종 민원 대응* 등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관련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소통자문단 운영 필요

* 감정평가 불만족에 따른 재평가 실시, 이주·재정착 지원대책 요구 등

○ 보상민원(세무, 법무, 감정평가, 법률 등) 자문 등을 통한 신뢰성 확보 및 주민과의 만남(회의·간담) 등 소통 강화를 통한 신속·원활한 보상 추진

□ 세부 추진사항

○ 적기 보상 및 주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주요 사안 자문 등 공무원,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 원만한 보상 진행의 기반 마련

* 구성: 공무원, 민간 전문가 등(18명) / 운영방법: 사안별(분과별) 수시 운영

○ 가덕도신공항 건설 예정지역 내 보상 업무 관련 현안 및 각종 민원사항 등 논의·자문

분과	주요 자문내용	비고
공통	· 보상업무 자문(세무·법무·감정평가·법률 등)에 관한 사항	
육지보상	· 보상협의, 수용재결, 이의재결 등에 관한 사항 등	
어업보상	· 약정체결, 감정평가, 어업피해조사용역 등에 관한 사항 · 어업인 재정착지원사업(생활대책)에 관한 사항 등	
이주·재정착 지원	· 이주대책, 재정착지원사업(생활대책)에 관한 사항 · 임시거주시설에 관한 사항 등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시행 전	시행 후
○ 보상 관련 각종 민원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 구성 필요	○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교수 등 구성 ○ 보상 지원 소통자문단 지속 운영

○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 보상 민원 및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심사 절차에 대한 외부 전문가 검토 절차 필요	○ 보상 민원 및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심사 관련 분야별 전문가 자문을 통한 객관적 신뢰성 확보

□ 관련 조례 및 지침 개정계획

○ 해당없음

□ '26년 소요예산

○ 보상지원 소통자문단 운영 8,000천원

□ 추진일정

○ '26. 1. 소통자문단 자문위원 추가 위촉 구성・운영 계획 보고

○ '26. 上. 보상지원 소통자문단 운영

- 보상지원 소통자문단 분과회의(육지보상/어업보상/이주·재정착 지원) 개최
- 보상 관련 민원(보상 대상 여부,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등) 처리방안 자문

○ '26. 下. 보상지원 소통자문단 자문위원 재위촉 구성·운영

1-11 시민참여 교육과정 연계, 정책 환류 플랫폼 구축

주관부서	인재개발원 전문교육과	협조기관	예산담당관, 자치행정과 등
담당자	박세현, 김보경 주무관 등	연락처	051-366-7512

□ 추진배경

○ **정부혁신 패러다임 변화와 소통 일상화**

- 시민의식 향상으로 정책 전반에 대한 소통·참여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정책의 정당성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과 함께 정책을 만들어가는 참여 거버넌스' 구현이 필수적임
- 「정부혁신 추진전략」의 '국민주도 참여·소통 거버넌스 구현'에 발맞춰, 국민의 의견을 일상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정책으로 즉각 전환하는 시스템이 필요함

○ **시민 성장을 통한 시정 혁신 동력 확보**

- **시민 대상 교육(협치·예산·보조금)을 통해 양성된 숙련된 시민들이 실제 시정의 파트너로서 기여할 수 있는 장(場) 마련**이 시급함
- 단순 지식 전달을 넘어 시민을 정책 소통의 파트너로 육성하는 교육이 시급하며, 이를 통해 돌봄·안전 등 일상의 문제를 주민이 스스로 해결하는 'K-민주주의' 모델을 부산시정에 정착시켜야 함.

○ **교육의 실질적 정책 환류 체계 미흡**

- 인재개발원의 **시민 교육이 학습에만 그치지 않고, 도출된 아이디어가 실제 정책으로 전환되는 '일상적 소통 창구'로서의 기능 강화**가 필요
- 단순 지식 전달에 그쳤던 교육을 정책 발굴의 창구로 재설계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도출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여야 함

□ 세부 추진사항

○ 시민 정책 파트너 육성을 위한 3대 핵심 교육 운영

- **(협치학교)** 민관 공동 사업 실행력 강화를 위한 협치 리더 양성
- **(주민참여예산학교)** 예산 과정의 실질적 참여를 통한 시민 자율 감시 및 제안 역량 강화
- **(보조금 지원단체 직무교육)**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한 공익 파트너 교육

○ 정책 제안 및 아이디어 발굴 교과 편성

- **(내용)** 각 교육과정 내에 '우리 동네 해결사(예시)' 등 참여형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교육생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사항과 개선안을 집중 토론
- **(목표)** 교육 주제(협치, 예산 등)와 연계된 실질적인 시정 개선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전문강사 활용 '정책 큐레이팅' 모의 실습

- **(운영)** 전문강사를 '정책 큐레이터'로 지정하여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정책 언어로 다듬는 실습 지원
- **(실습)** 도출된 의견을 실제 제안서 형태로 작성해 보는 모의실습을 통해 정책 제안의 실현 가능성을 자가 검토함

○ 디지털 소통 플랫폼 활용 리터러시 학습

- **(내용)** '소통24', '주민e참여' 등 디지털 플랫폼 사용법을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교육 종료 후에도 일상적 시정참여가 가능하도록 지원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시행 전	시행 후
○ **교육-정책 연계 미흡:** 시민 교육이 일회성 지식 전달에 그쳐 교육 중 도출된 참신한 아이디어가 정책화되지 못하고 사장됨. ○ **단방향 교육 방식**: 강사 위주의 이론 강의로 인해 시민들의 능동적인 시정 참여 유인 및 역량 강화 기회 부족. ○ **디지털 접근성 격차:** 공공정책플랫폼(소통24 등)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교육 종료 후 지속적인 의견 개진이 단절됨.	○ **교육과정 운영:** 총 7회 - 3개 핵심 교육(협치·예산·보조금) 운영기수 확대 ○ **교육 참여 인원:** 총 152명 - 교육 수료증 발급 인원 (이수율 80% 산정) ○ **교육 만족도**: 88점 이상 달성 - 참여형 실습 도입을 통한 효능감 증대 - 인재개발원 교육평가기준 S등급(88점 이상) 준용 ○ 전문강사와 함께 하는 숙의·토론 중심 교육을 통해 시민의 아이디어를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환류하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함

○ 기대효과

- **(대시민)** 교육-참여-환류의 일체화된 경험을 통해 '시민이 주인인 부산'에 대한 효능감 증대.
- **(내부혁신)** 시민의 시각에서 정제된 제안을 확보함으로써 정책 사각지대 해소 및 시정 수용성 강화
- **(사회적 가치)** 투명한 보조금 집행과 주민참여예산 활성화를 통해 행정의 신뢰도 및 청렴도 제고
- **(혁신확산)** 교육기관이 정책 소통 플랫폼으로 진화하는 새로운 정부혁신 모델 제시

□ '26년 소요예산

○ 교육과정 운영예산 10,500천원 ► 1,500천원×7회

□ **추진일정**

- **'26. 1~2월** 시민 소통형 교육과정 재설계 및 전문강사(정책 큐레이터) 인력풀 확보
- **'26. 3~11월** 3대 핵심 교육과정 운영(기수별 정책 제안 워크숍 및 모의 실습 병행)
- **'26. 12월** 교육 연계 우수 정책 제안, 시 본청 유관 부서 전달

□ **홍보계획**

- **(온라인)** 인재개발원 누리집 내 '시민 참여 교육' 안내 게시
- **(오프라인)** 구·군 민원실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안내 리플릿 비치
- **(맞춤형)** 기존 수료생 및 시민참여위원 대상 교육안내 문자 발송

1-12 건설현장 안전점검 및 현장의 소리 소통·협력 강화

주관부서	건설본부 총무부	협조기관	-
담당자	박수현 주무관	연락처	051-888-6054

□ 추진배경

○ 발주처와 현장 근로자(하도급사, 일반 근로자 등) 간의 직접적인 소통 채널을 구축하여 현장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해결

○ 안전취약 시기별 정기·수시 점검을 통해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 의식 고취

□ 세부 추진사항

○ 건설본부 홈페이지상 「현장의 소리 소통방」 운영 및 현장방문 강화

- (운영방법) 건설본부 홈페이지 내 소통 전용 창구 상시 운영 및 본부장 주재 현장 대면 미팅 병행
- (대상사업) 본부 전 건설현장
- (대 상 자) 원·하도급 근로자, 현장대리인, 감리자 등 현장 관계자
- (소통내용) 현장 애로사항 청취, 건설현장 안전확보 관련 요청사항, 하도급사 당면 문제 및 고충, 대금체불 신고 등
- (현장방문) 2026년 1월 ~ 12월(연 17회 실시)
- (처리절차) 공정안전팀에서 접수 및 애로사항 확인·검토 후, 관련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개선대책 마련 및 해결

○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체계 강화

- (점검시기) 연간 총 6회 실시 (정기점검 5회, 수시점검 1회)
  * 정기점검: 설 연휴, 해빙기, 여름철(폭염), 추석 연휴, 동절기 대비
  * 수시점검: 태풍, 집중호우 등 기상 특보 발생 시 선제적 대응 점검
- (점검대상) 건설본부 주요 공사장 (1회 점검 시 약 40개소 내외)
- (점 검 자) 공정안전팀, 사업담당자 및 민간전문가 합동 점검반 구성

- (점검내용)

  • 시기·계절별 안전취약 요인 점검 및 현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확인

  • 민·관 합동점검을 통한 전문적 현장 진단 및 위험요소 사전 제거

  • 타 현장 관계자 교차 점검을 통한 안전관리 노하우 및 사례 공유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시행 전	시행 후
○ 감리단, 현장소장 등 일부 관계자 중심의 제한적 소통 ○ 현장 근로자의 직접적인 소통 창구 및 공간 부족 ○ 해빙기 등 취약시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안전점검 시행	○ 건설현장 소통강화 현장방문 확대 운영 (연 17회) ○ 근로자 대면 미팅 및 홈페이지 소통방 상시 운영 ○ 정기·수시 안전점검 체계 명확화 및 정례화 (연 6회)

○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 현장 최일선 근로자의 애로사항을 수렴할 수 있는 직접적인 소통 창구 및 공식적인 건의 통로 부족 ○ 소통 부재로 인한 현장 문제점 파악 지연 및 특정 시기에 편중된 점검으로 인한 안전 관리 사각지대 존재 ○ 현장 고충 처리 지연 및 관계자 간 정보 불균형으로 인한 행정 효율 저하 우려	○ 현장 밀착형 핫라인(홈페이지 소통방, 근로자 대면 미팅) 구축을 통해 자유로운 의견 개진 및 공감하는 건설 문화 조성 ○ 소통과 점검의 병행(연 23회 수준)으로 각종 애로사항을 적기에 처리하고 선제적 위험 예방을 통한 안전한 건설 환경 구현 ○ 실시간 소통 피드백과 주기적 현장 방문으로 공정 지연 요소를 사전 해소하여 효율적이고 신뢰받는 건설 행정 실현

□ 관련 조례 및 지침 개정계획

○ 해당사항 없음

□ '26년 소요예산

○ 비예산 사업

□ 추진체계

○ 해당사항 없음

□ 추진일정

○ ‘26. 2월~ : 건설공사장 근로자 대면 미팅(월1~2회)

○ ‘26. 4월 :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및 집중안전점검

○ ‘26. 6~8월 : 폭염・태풍・장마 등 재난 대비 건설현장 안전점검

○ ‘26. 9월 : 추석연휴 대비 건설현장 안전점검

○ ‘26.11월 :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안전점검

□ 홍보계획

○ 건설본부 홈페이지 내 「현장의 소리 소통방」 이용 방법 안내 및 현장 근로자 대상 적극적인 의견 수렴 홍보

○ 현장 방문 및 대면 미팅 시 안전 점검 결과 공유 및 계절별(온열・한랭질환) 안전 수칙 준수 안내

○ 건설현장 안전점검 결과 등 사례 전파를 통한 현장 관계자의 안전 경각심 고취 및 안전대응 역량 제고

2.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통해 지방정부 투명성 강화

2-1 한눈에 보는 '부산민원통계' 대시민 공개

주관부서	행정자치국 통합민원과	협조기관	빅데이터과
담당자	마관희 주무관	연락처	051-888-1462

□ 추진배경

○ 통합민원 데이터 대시민공개로 시민의 알권리 및 행정 투명성 제공

○ 통합민원(내부용) 자료를 활용한 시민맞춤형 시각화 서비스 제공 필요

□ 세부 추진사항

○ 통합민원통계 시각화 서비스 구축(외부 대시민용)

- 통합민원(내부용) 데이터 공동활용체계 마련
- 시스템 기반 개인정보 자동 비식별화 처리 기능 구현
- 통합민원 주기적 민원추이 및 발생패턴 분석
- 민원업무별(일·월·연간) 민원접수·처리 상세 현황 분석
- 민원데이터 분석결과 시각화 서비스(대시민) 체계 구축

○ 통합민원통계 시각화 자료 업데이트(매월)

- 자료수집 : 민원업무 담당자별 자료 추출 및 취합(매월말)
- 자료갱신 : 개인정보 항목을 제외한 CSV파일 변환 업로드

통합민원통계 시각화 화면(예시)

《통합민원 현황》 《국민신문고 현황》 《120콜센터 현황》



※ 공개위치 : Big-데이터웨이브(https://data.busan.go.kr, 데이터활용▸시각화서비스▸통합민원)

※ 통합민원(8종) : 국민신문고, 120콜센터, 민원상담, 여권, 정보공개, 서식민원, 어디서나, 즉결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시행 전	시행 후
○ 분기별 통합민원 분석 및 내부활용 ○ 통합민원 통계 시각화 도구 부재	○ 통합민원 분석현황 외부공개 주기 : 매월 ○ 데이터 취합·분석·시각화·공개 이행률 : 100%

○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 민원데이터의 통합 관리체계 부재 ○ 민원통계 내부공유 및 정책결정 활용	○ 데이터 시각화 구축으로 시정 가시성 극대화 ○ 대시민 공개를 통한 쌍방향 정보 공유

□ '26년 소요예산

○ 비예산사업

□ 추진체계

○ 통합민원과

- 민원 통계 개방 지표 확정 및 데이터 비식별화 기준 마련
- 민원 데이터의 정기적 수집, 통합 관리 체계 운영 및 관리 등

○ 빅데이터과

- 분산된 민원 데이터의 원천 소스 확인 및 추출 방식 설계
- '대시보드형 시각화' 구축, 데이터 업데이트 자동화 로직 구현 등

□ 추진일정

○ 한눈에 보는 통합민원통계 시각화 구축 계획 수립 : '26.1월

○ 민원업무별 데이터 취합, 개인정보 비식별화, 자료 분석 등 : '26.1. ~ 3월

○ 빅데이터웨이브 홈페이지의 시각화 서비스 구축 : '26.3. ~ 4월

○ 통합민원통계 홈페이지 정식 서비스 개시 : '26. 5월중

2-2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주관부서	환경물정책실 환경정책과	협조기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사하구, 강서구, 사상구, 기장군
담당자	장정호 주무관	연락처	051-888-3654

□ 추진배경

○ **쾌적한 생활환경 보장**에 대한 시민 요구 증대 및 **이해당사자간의 환경오염피해분쟁 사전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 필요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시, 민·관 합동점검을 추진하여 **환경감시 채널 확대** 및 **지도·점검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

□ 세부 추진사항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분기별 민·관 합동점검** 실시

- (점검대상) 공단(공업)지역 소재 대기 및 폐수 배출사업장
- (점 검 반) 5개반 16명(市 1, 구·군 및 경자청 10, 민간인 5)/1일
- (점검내용) 오염물질 배출시설 적정 운영 등 환경관련법 준수 여부

○ 오염물질 불법 배출사업장 근절과 배출사업장의 환경인식 고취를 위한 현장 점검 연계 수행 및 실태점검 병행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시행 전	시행 후
○ 행정기관 중심, 단속 위주 점검실시 ○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이 혼재된 부산의 주거 특성에 따른 환경민원 다수 발생 - 기존 조성된 공단·공업지역 인근에 완충지대 없이 신규 아파트 등이 건립되어 비산먼지, 악취 등 생활밀착형 환경 민원 다수 발생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분기별 **민·관 합동점검** 실시 - **분기별 125개소** 점검, **연간 총 500개소** 점검실시

○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 (시민) 환경피해 발생 시, 단순 신고 수준의 소극적 역할 ○ (사업장) 일시적 단속 대응 및 행정처분에 대한 민원 제기	○ 환경오염 배출시설이 밀집해 있는 **공단(공업)지역 인근 거주 주민에게 점검업무 참여 기회 제공**을 통한 행정 신뢰도 제고 ○ 이해당사자인 지역 주민이 직접 오염시설 확인·단속에 참여하여 **점검의 투명성 제고 및 공정성 강화**

□ '26년 소요예산

○ 행사실비지원금 3,000천원 = 연 4회 $^{\text{분기별}}$ $^{125\text{개소}}$ × 750천원

- (지원대상) 합동점검 참여 시민에 대한 교통비 등 실비 지원

□ 추진체계

○ (환경정책과)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민·관 합동점검 총괄

○ (경자청, 구·군) 합동점검 대상 사업장 선발, 위반사업장 조치 및 사후관리, 합동점검 참여 시민 모집 등

□ 추진일정

○ '26. 3월 : 1분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민·관 합동점검 실시

○ '26. 5월 : 2분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민·관 합동점검 실시

○ '26. 9월 : 3분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민·관 합동점검 실시

○ '26. 11월 : 4분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민·관 합동점검 실시

□ 홍보계획

○ 환경오염 감시활동 시민참여 유도를 위한 환경신문고 제도 홍보

- 홈페이지, SNS 카드뉴스 등

○ 환경관련법 위반사업장 적발 시, 행정처분 내역 및 주요 위반사례 등 홈페이지 등 공개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경각심 고취 및 위반행위 재발방지 유도

3. 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생활 속 문제해결

3-1 자산학과 함께하는 사회공헌 모델구축을 통한 시민공감형 홍보추진

주관부서	대변인 미디어담당관	협조기관	• (민간기업) 이케아 • (NGO) 월드비전, 사랑의 열매 등 • (학 계) 부산대학교
담당자	정미영 주무관	연락처	051-888-1374

□ 추진배경

○ 파급력이 뛰어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사회문제 해결 및 사회가치 실현

○ 지·산·학 협업 및 콘텐츠 생산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 모델 확립

□ 세부 추진사항

○ 지·산·학 다자간 협업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 모델 확립

- (프로세스) 지속 가능 사회공헌 모델 확립을 통한 운영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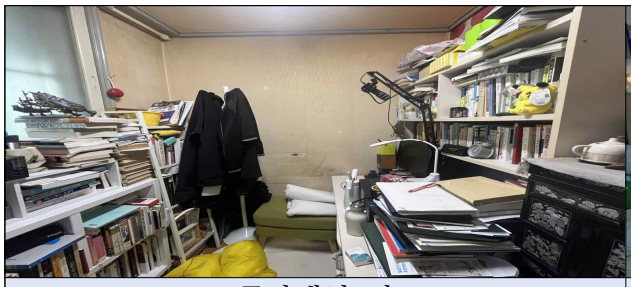
다자 협업체 구성	⇒	사업분야 및 계획수립	⇒	사업 수혜자 발굴	⇒	사업추진 (협업)	⇒	환류
·지·산·학 협의체		·공간개선 분야 ·학습개선 분야 등		·자립 준비청년 ·가족 돌봄청년 등		·온·오프라인 홍보 ·자문 및 사업추진		·사회 인식개선 추진 ·삶의 질 개선

❖ 지자체 등 기관별 추진 역할

(지자체) 온.오프라인 홍보, SNS 콘텐츠 제작 (사업 취지와 공공 메시지 전달)
(민 간) 각종개선 관련 자문 및 지원, 사업 수혜자 등 대상자 발굴, 기부금 모금 등
(학 계) 학생 참여형 프로젝트 추진 (아이디어 발굴 및 개선참여 과제 부여 · 사업실행)

<2025년도 사회공헌 모델 구축을 위한 초기 추진사례 >

❖ 프로젝트 : 부산시×오늘의집, <청년러브(LUV):오늘부산>
❖ 사업내용 : 관내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 5년 이내) 대상 주거공간개선 사업 추진 (2가구)
❖ 추진방법 : (지자체) 대장자 모집·선정, 온·오프라인 홍보, 사연소개 SNS 콘텐츠 제작
(민 간) 주거공간 개선 및 기록영상 제작
❖ 추진성과 : 언론사 기획취재 등(25건), 1·2차 사업 콘텐츠 게시 (조회수 300만뷰, 댓글1,535건)



공간개선 전



공간개선 후

○ 2026년도 사업추진 계획

- (프로젝트) 가족돌봄청소년 생활공간 개선 프로젝트 '러브(LOVE)부산'
- (사업목적) 가족돌봄청소년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삶의 질 및 만족도를 제고하고, 안전한 거주환경 및 정주여건 제공
- (사업기간) 2026. 3. ~ 7.

※ (4월초) 사례자 선정 → (5월) 공간 기획 및 디자인 → (6월) 공간개선 → (7월) 콘텐츠 공개

- (사업대상) 가족돌봄청소년 중 주거공간 개선이 필요한 대상자 1세대

※ 가족돌봄청소년 : 보호자의 부양능력 상실 및 부재로 실질적인 가계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

- (사업내용) 주거공간 개선, 사업홍보(SNS콘텐츠 및 기록영상 제작 등)
- (참여기관) 부산시, 부산대학교, 이케아(IKEA), 한국월드비전, 사랑의열매
- (추진방법) 市를 주축으로 월드비전·사랑의 열매, 글로벌 라이프스타일 기업 이케아(IKEA), 부산대학교 실내환경디자인 관련 학과와 협업하여 가독돌봄청소년의 생활공간을 개선하는 사회가치 실현형 프로젝트 추진

2022년 가족돌봄청년의 36.6%는 가족돌봄으로 인해 미래 계획을 세우기 어려움

○ 2020년 기준 13~34세 인구의 1.3%인 15만 3천 명이 가족돌봄청년으로 추정됨(인구총조사 자료 활용)

○ 2022년 가족돌봄청년의 41.2%는 직접 돌봄과 함께 경제적 부양을 동시에 책임짐(2022년 실태조사 결과)

- 가족돌봄청년의 61.5%가 우울한 것으로 평가되며, 주 15시간 이상 돌봄인 경우 우울 수준이 매우 높음



【"한국의 사회동향 2024" (통계청 통계개발원, 서울대 한국사회과학자료원 공동 발간)】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시행 전	시행 후
○('25년) '자립 청년' 공간개선 프로젝트 추진 (1건) ▸ 민간기업 '오늘의 집(버킷 플레이스)' 과 협업	○('26년) 다자간 협업 통해 지속가능 사회공헌 모델 구축 위한 '가족돌봄청소년' 공간개선 프로젝트 추진 (1건) ▸ 민간기업, NGO, 학계 등 다자간 협업 - 지 자 체 : 부산광역시 - 민간기업 : 이케아 (IKEA) - 비영리민간단체(NGO) : 한국월드비전, 사랑의 열매 - 학 계 : 부산대학교 (실내환경디자인 관련 학과)

○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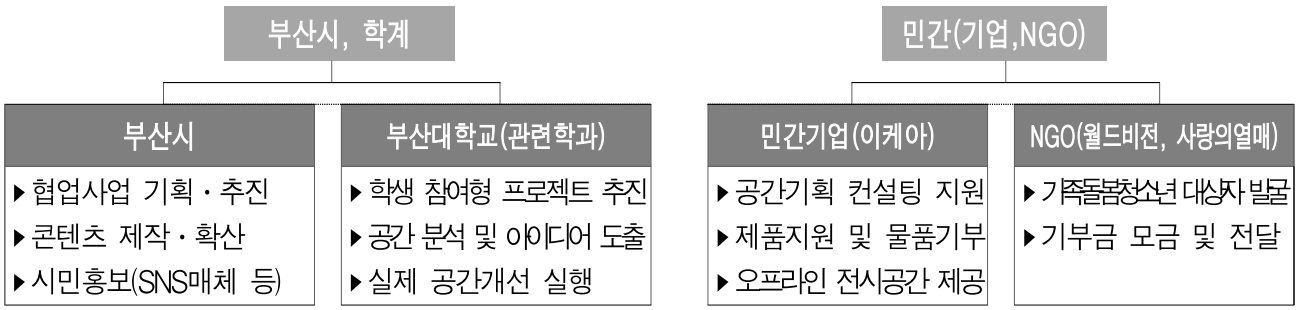
시행 전	시행 후
▸ 관 주도의 단방향 홍보메시지 전달 ▸ 시정에 대한 시민의 낮은 관심과 공감대 ▸ 단방향, 일회성 딱딱한 정책 홍보 중심 ▸ 낮은 출산율, 고령화 등 부정적 도시 이미지	▸ 자산학 및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여 사회가치 실현 ▸ 시민 사연 중심 감성적·매력적 콘텐츠 제작 ▸ 생활환경 개선 프로젝트를 통해 돌봄메시지 전달 ▸ 시민과의 소통 활성화 및 시정 공감대 제고 ▸ 청년(전공자) 역량을 사회문제 해결에 연계 ▸ 부산시 가족돌봄청소년 정책 인지도 및 공감대 확산

□ '26년 소요예산 : 25,000천원 (시비)

○ 사회가치 실현형 프로젝트 추진 비용 : 25,000천원

- 콘텐츠 제작비 ▷ 20,000천원 (일러스트 작가료, 영상 제작료 등)
- 행사이벤트 진행비 ▷ 5,000천원 (응원댓글 이벤트 등)

□ 추진체계



□ 추진일정

○ '26. 4월 : 지·산·학 협업 '러브(LOVE)부산' 사업 기획 및 콘텐츠 제작·확산, 가족돌봄청소년 가구 등 사례자 선정

○ '26. 5월 : 공간 디자인 기획 및 아이디어 도출

○ '26. 6~7월 : 공간개선 추진 및 프로그램 콘텐츠 공개 및 확산

□ 홍보계획

○ 홍보방법 : 시 보유 온·오프라인 홍보매체 등 활용 전방위 홍보

- 온라인 : 시 공식 SNS, 유튜브, 바다TV, 홈페이지 등
- 오프라인 : 옥외전광판, 부산시보, IPTV 등
- 방송·언론사 : 보도자료 배포, 인터뷰, 기획기사, 기획방송 등

○ 홍보내용 : 사업홍보(시민사연 모집 등), 제작 콘텐츠 홍보·확산 등

3-2 유료도로 불편민원처리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주관부서	도시혁신균형실 건설행정과	협조기관	부산시설공단, 민자유료도로법인
담당자	김형준 주무관	연락처	051-888-2702

□ 추진배경

○ 유료도로 관련 불편민원이 매년 처리기관별 다수 접수·처리되고 있으나 접수 기관별로 처리함에 따라 공통민원에 대한 파악이 어렵고, 처리기관별 처리 내용이 상이하여 추가 민원발생 우려

- 국민신문고는 부산시 처리, 도로별 별도 민원 접수 및 처리

< 민원발생 사유별 현황 >

(단위: 건 / 출처: 국민신문고, 전화민원 제외)

계	부가통행료	면제감면	시설	교통혼잡	미납	요금일반	사고	낙하물	기타
66	15	11	12	5	7	4	3	4	5

* 터널별 현황: 백양 1, 수정산 5, 을숙도 12, 거가 6, 부산항 6, 산성 20, 천마 6, 광안 4, 공통 6

□ 세부 추진사항

○ 유료도로 불편민원처리 협의체 구성

- (구성) 부산광역시, 부산시설공단, 민자유료도로 법인
  * 위원장: 부산광역시 건설행정과장
- (내용) 도로별 공통불편민원에 대한 처리방안 논의
  * 매월 처리기관별 민원내역 파악 후 논의대상 공통민원 선정
- (회의개최) 분기별 1회 정기 개최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시행 전	시행 후
○ 접수기관별 민원처리로 공통민원에 대한 일관성 있는 대응 부족	○ 분기별 회의개최를 통한 공동 대응 - '26년 3회(6,9,12월)

- 매월 처리기관별 민원 처리 현황 취합 및 공통민원 선정
- 분기별 회의개최를 통한 공통민원 처리방안 논의

○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 도로별 내부규정 및 처리방법이 상이하여 추가 민원 발생 우려	○ 공통민원에 대한 일관된 대응으로 추가 민원 발생 방지

- 공통민원에 대한 정보 공유로 시민불편사항 인식공유
- 도로별 상이한 처리방식에 대한 일관성 확보로 민원

□ '26년 소요예산

○ 비예산 사업

□ 추진체계

○ **(부산시)** 계획수립, 협의체 운영 및 회의 개최 주관

○ **(부산시설공단, 민자법인)** 기관별 민원처리내역 제출(매월), 회의참석

□ 추진일정

○ **('26. 5.)** 관련기관 사전협의, 협의체 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

○ **('26. 6.)** 제1회 회의 개최

○ **('26. 9.)** 제2회 회의 개최

○ **('26.12.)** 제3회 회의 개최

3-3 부산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민관협의체 운영

주관부서	미래공간전략국 생활공간혁신과	협조기관	부산시, 경찰청, 부산교통공사, 민간단체 등
담당자	최민호 주무관, 조민정 주무관	연락처	051-888-1235

□ 추진배경

○ 보행·자전거 기반 근접성 향상을 위한 우리 시 정책 기조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인프라는 전국 최하위 수준

○ 15분도시 고도화 및 레저문화 확산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사용자 중심의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전문가·기관·시민 참여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필요

□ 세부 추진사항

○ 부산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 추진목표 : 민관협의체 구성('26년 상반기), 협의체 회의 연 2회

○ 민관협의체 운영(안)

- 목 적 :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 인프라 조성과 대중교통 연계성 향상,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발굴 및 자문
- 대 상 : 부산시 관련 부서, 경찰청, 부산교통공사, 부산자전거연맹, 시민·이용자, 비영리민간단체 등
- 역 할 :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등
  - ·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 및 사업 과제 발굴·제안, 중장기 전략 방향 설정
  - · 자전거도로 등 인프라 구축 및 개선에 대한 전문 자문과 우선순위 검토
  - · 자전거와 대중교통(지하철·버스) 간 연계 강화 방안 논의 및 개선안 제시
  - ·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교육·홍보 콘텐츠, 캠페인 기획 자문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시행 전	시행 후
○ 자전거 인프라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사용자 중심의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민관 협력 필요	○ 자전거 이용 활성화 민관협의체 구성 ('26년 상반기) ○ 민관협의체 회의 개최 : 2회

○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 행정기관 중심의 자전거 정책 수립 및 단편적인 인프라 확충 사업 과제 발굴	○ 자전거 이용 활성화 협의체를 통한 시민 체감형 자전거 정책 수립 및 일상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는 실효성 있는 사업 과제 발굴

□ '26년 소요예산

○ 비예산사업

□ 추진체계

○ (부산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 및 사업 발굴, 중장기 전략 방향 설정

○ (경찰청, 부산교통공사) 인프라 구축 및 개선에 대한 전문 자문 및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등) 연계 방안 검토 등

○ (민간) 시민·이용자 의견 수렴 및 민간 주도 자전거 활성화 프로그램 검토 등

□ 추진일정

○ 부산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민관협의체 구성('26.5월)

○ 민관협의체 발대식 및 1차 회의 개최('26.5월)

○ 민관협의체 2차 회의 개최('26.11월)

□ 홍보계획

○ 자전거 이용 활성화 민관협의체 구성 보도자료 배포·홍보

3-4 지역문제 해결 역량 강화를 위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신설

주관부서	감사위원회 청렴담당관	협조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담당자	예효선 주무관	연락처	051-888-1727

□ 추진배경

○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불합리한 행정제도 등으로 시민의 권리·이익이 침해될 경우 제기되는 '고충민원'의 처리 절차 강화

○ 시민 권익구제 의식 향상에 대응하여 고충민원의 적극적인 해소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운영 필요

□ 세부 추진사항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체계 구축

- 의회 동의 후 위원 위촉 등 위원회 출범
- 운영세칙 마련

○ 위원회 고충민원 처리

- 접수 → 조사 → 심의·의결 → 결과통보 → 사후관리 체계 구축
- 조사기간 60일, 결과통보 10일 이내 처리

○ 고충민원 심의·의결

- 시정권고, 의견표명, 제도개선 권고 등 적극적 권익구제 수행
- 다수·집단민원에 대한 조정 및 합의권고 기능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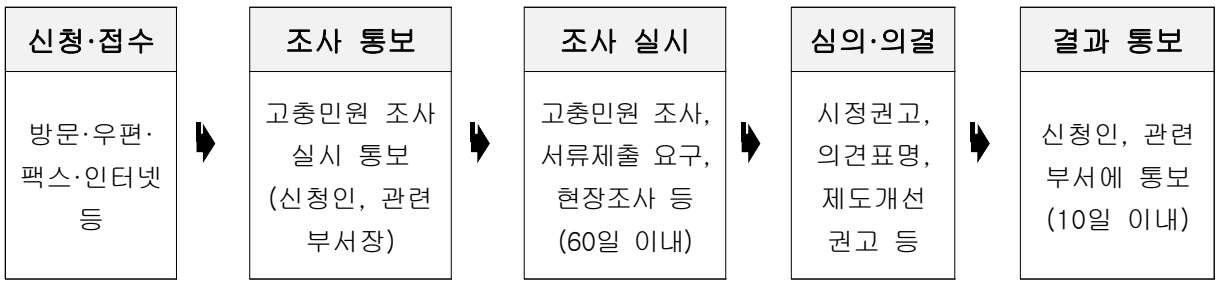
○ 시민 접근성 제고를 위한 소통창구 운영

- 방문, 우편, 팩스 등 다양한 접수 채널 운영

○ 제도개선 중심의 운영 강화

- 반복 민원 및 구조적 문제 발굴 → 제도개선으로 연계
- 민원 처리결과 분석 등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안건 처리 흐름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시행 전	시행 후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미설치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 위원회 개최 및 고충민원 심의·의결

○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 민원 조사 담당자 직접 조사 수행	○ 전문분야 위원 참여로 객관적인 조사·검토 ○ 위원회를 통한 독립적·전문적 권익구제

□ 관련 조례 및 지침 개정계획

○「부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완료

□ '26년 소요예산 ('26년 7월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예정)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및 심사수당 5,600천원

□ 추진일정

○ '25. 10.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정

○ '26.2. ~ 3. 위원 추천 접수

○ '26. 4. 「위원 위촉 동의안」 심사(시의회)

○ '26. 6. 위원 위촉

○ '26. 6. ~ 위원회 개최 및 안건 심의·의결

□ 홍보계획

○ 위원회 출범 보도자료 작성

○ 향후 청렴부산 시민소통시스템(감사위원회 SNS) 통한 위원회 활동 홍보

4. 사각지대 없는 포용적 공공서비스 체계 구축

4-1 서부산권 영상·미디어 접근성 확대를 통한 문화사각지대 해소

주관부서	문화국 영상콘텐츠산업과	협조기관	서부산영상미디어센터
담당자	송진현 주무관	연락처	051-888-5145

□ 추진배경

○ 서부산권은 영화·영상·미디어 관련 분야 공공 인프라 및 프로그램 접근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문화사각지대 발생의 우려가 있음.

○ '25년 12월 서부산권(강서구)에 개관한 「서부산영상미디어센터」를 통해 문화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강구하고자 함.

□ 세부 추진사항

○ 서부산영상미디어센터를 활용하여 서부산권 시민의 영화 관람 및 영상·미디어 교육 참여 기회 확대

- 모두극장 정기상영(독립예술영화) 외 시니어극장, 가치봄극장 등 문화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획상영전 지속추진
- 연령별, 수준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외 학교 등 지역 내 기관 연계 프로그램 제공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시행 전	시행 후
○ 서부산권 영화·영상·미디어 특화 공공 인프라 부재로 문화 향유 및 교육 참여 기회 부족	○ 「서부산영상미디어센터」 운영을 통해 서부산권 시민의 문화사각지대 해소 - 모두극장 관람객 : **연 6천명** - 교육프로그램 수강생 : **연 1천명**

○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 서부산권 시민의 문화서비스 접근 기회 부족 ○ 문화사각지대 발생 우려	○ 서부산 생활권 영화·영상·미디어 향유 기회 확대 ○ 문화사각지대 완화 및 지역 간 문화 접근성 격차 해소 기여

□ '26년 소요예산

○ '26년 서부산영상미디어센터 총사업비 600백만원(자체수입 70백만원 포함)

- 인건비 270백만원, 운영비 129백만원, 위탁수수료 25백만원
- 사업비 176백만원(영화 48백만원, 교육 90백만원, 기타사업비 38백만원)

□ 추진체계

○ (부산시) 서부산영상미디어센터 운영사무 행정지원

-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적기 편성, 사업계획 대비 운영실적 지속 점검 등

○ (서부산영상미디어센터) 영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유관기관 협력 추진

- 강서구 · 북구 진로교육지원센터, 학교, 복지관, 지역단체 등과 연계한 관람 ·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지역 예술영화관, 부산영상위원회,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등과 연계하는 공동 프로그램 발굴 및 사업홍보 협력

□ 추진일정

○ (1분기)

- 2026년 운영계획 수립,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교육 강좌 개설 및 수강생 모집, 상설 체험 프로그램 운영

○ (2분기)

- 시니어극장, 가치봄영화, 직장인 대상 프로그램 등 기획전 상영
- 지역연계 콘텐츠 제작, 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밀착형 사업 운영

○ (3분기)

- 학부모 서포터즈 운영, 진로센터 네트워크 등 운영 내실화
- 관람객 · 수강생 실적 중간 점검 및 프로그램 보완 추진

○ (4분기)

- 연간 운영실적 및 만족도 조사 결과 분석
- 관람객 및 수강생 목표 달성 여부 점검

□ 홍보계획

○ (온라인)

-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6개 SNS 채널 관리, 자체제작 콘텐츠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 시행 (우리동네CF 등)
- ‘관람예절 트레일러’, ‘극장 우체통’ 등 시민참여형 공모전 개최

○ (오프라인)

- 강서구·북구 아파트 미디어보드 송출, 인근지역에 소재한 공공기관·도서관 대상 포스터 배부 등을 통해 지역민 노출도 강화
- 인근 지역 학교, 축제 현장 등을 활용한 현장 홍보와 홍보물품 대면 배부

○ (지역연계)

- 강서구청 SNS 채널 및 강서구보를 활용하여 인접 구민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 및 상영일정 정기 안내
- 지역 내 초중고교, 복지관 등과 연계하여 지역민의 교육 수요 확인 및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4-2 경계선지능 아동·청소년「유소년축구교실」운영

주관부서	사회복지국 복지정책과	협조기관	부산사회서비스원
담당자	김재헌 주무관	연락처	051-888-3145

□ 추진배경(목적)

○ 경계선지능인의 느린 인지속도와 사회성 부족은 또래와의 관계형성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이는 정서적 위기·사회적 고립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음

○ 아동·청소년기 경계선지능인에게 단체활동 및 또래와 어울릴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조기에 단체규칙 준수, 상호협력, 소통 등 사회적응 및 관계 형성을 위한 능력 향상 도모

* 경계선지능인 : 지적장애(IQ 70이하)에 해당하지 않는 경계 구간 지능(IQ 71-84)

□ 사업개요

○ **(사업명)** 경계선지능 아동・청소년 유소년축구교실

○ **(대 상)** 경계선지능 아동・청소년 40명

○ **(장 소)** 부경고등학교 운동장(서구), FC리틀슛 실내축구장(북구)

○ **(내 용)** 2개 권역, 주1회 축구교실 운영 ▸ 감독·전문코치 2~3명 지도

□ 세부계획

○ **(일정 및 프로그램)**

일정		프로그램 내용
3~4월	기초 적응	· 라포형성 및 기초 체력 훈련 · 개별인지 특성 파악 및 상담, 공과 친숙해지기, 기초 신체 밸런스 운동 등
5~7월	기술 습득 및 협동	· 팀워크 훈련(기초 축구 기술(패스, 드리블) 습득 · 4인 1조 게임을 통한 타인 배려 및 협력 연습
8~11월	실전 및 소통	· 경기운영 및 사회성 강화(정규 규칙을 적용한 미니게임 진행, 승패 수용 교육 및 감정조절 훈련 등)
12월	성과공유	· '희망 숏돌이' 페스티벌(가족 초청 친선경기 및 수료식, 성장 기록 공유 및 우수 참여자 시상 등)

○ **(운영 특화전략)**

- 맞춤형 코칭 매뉴얼 개발: 경계선지능인의 인지 속도에 맞춘 쉬운 설명과 시각 자료 활용
- 정서지원 병행: 운동 전후 상담을 통해 정서적 안전 도모 및 학부모 자조모임 지원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시행 전	시행 후
○ 시행 전	○ (참여률) 80% 이상 ○ (만족도 조사) 90% 이상

○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 시행 전	○ (개인) 신체건강 증진, 자존감 회복, 우울감 감소 및 기초 사회성 습득 ○ (사회)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시민 인식 개선, 잠재적 사회 부적응 비용 절감 ○ (시) '복지 사각지대 제로' '안녕한 부산' 정책 브랜드 강화 및 선제적 복지모델 정립

□ '26년 소요예산

○ **(소요예산)** 50,000천원(고향사랑기금)

- 감독 및 코치 인건비, 교구 및 물품비, 홍보 및 가족캠프 행사비

□ 추진체계

○ 추진 주체별 역할

시 <사업총괄>	→	부산사회서비스원 <운영총괄>	→	FC리틀슛, 서부유소년축구단 <사업실행>
• 유소년축구교실 계획수립, 사업총괄 • 예산교부 등 업무지원 • 유소년축구교실 홍보 등		• 유소년축구교실 운영 총괄 • 대상자 모집 및 선발 • 사례관리 • 성과분석 및 모니터링		• 대상자 맞춤형 축구 커리큘럼 개발 • 전문 코칭 인력 파견 및 교육 • 권역별 및 통합 경기 운영

□ 추진일정

○ (추진일정)

※ 기상 등으로 인한 일정조정 가능

과업명	2026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사업계획 수립 및 협의	■	■										
참여자모집 및 수행기관 선정		■	■									
사업운영			■	■	■	■	■	■	■	■	■	■
중간점검 및 권역별 리그전								■	■			
성과평가 및 만족도 조사											■	■
성과공유회												■

□ 홍보계획

○ (온·오프라인 홍보)

- 부산시 및 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 SNS활용, 보도자료 배포
- 교육청 및 복지관, 지역아동센터 연계 홍보

○ **(대상자 맞춤 홍보)** 학부모 커뮤니티 활용, Wee센터 및 상담기관 연계 안내

4-3 의료급여 수급자 방문형 복약상담 추진

주관부서	사회복지국 복지정책과	협조기관	구군, 부산시약사회,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당자	이아름 주무관	연락처	051-888-3176

□ 추진배경

○ 의료급여 보장성 확대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증가와 진료비 증가로 인한 재정 부담 강화

- 의료급여 수급자 전년대비 9.49% 증가('24년 148,493명→'25년 154,516명)
- 의료급여 진료비는 매년 상승(증가율: '25. 12월 전국 평균 10.22%, 부산 9.40%↑)
  * '25년 부산시 의료급여수급자 입원진료비 7.3% 증가됨 (전국 평균 6.7%)
  * '25년 부산시 1인당 외래진료비 5.3% 증가됨 (1인당 연간 입원 진료비 14백만원)

○ 여러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등 의료 이용의 비중이 높은 의료급여 수급자의 맞춤형 복약 상담 등을 통한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필요

* '25년 부산시 다빈도 외래이용자('25년 3, 9월 통보): 97,055명(의료기관 10곳↑ 이용 691명)
* 동일성분 중복투약자수('25년 6월, 12월 통보): 108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6년 4월 ~ 12월

○ 사업대상: **의료급여수급자 중 다빈도 외래이용자 40명**

○ 사업내용: 다빈도 외래이용자 약물오남용 예방을 위한 복약지도

* 2인 1조(시, 구·군 의료급여관리사/약사) 가정방문 및 상담

○ 소요예산: 15,000천원(시비) *보건위생과 예산 활용 : 활동보상비 12,000천원, 사무관리비 3,000천원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시행 전	시행 후
○ (신설)	○ 의료급여 수급자 방문형 복약상담 추진 - 다빈도 외래 이용자 : 40명

○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 다빈도 외래 등 의료급여 수급자 대상 사례관리 추진 중이나 중복약물 이용에 따른 전문가(약사)의 방문복약상담 지원은 없음 ○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다제약물관리사업을 실시중이나, 의료급여 수급자는 대상에서 제외되어, 건강관리의 사각지대 우려가 있음	○ 의료 이용의 비중이 높은 의료급여 수급자의 맞춤형 방문 복약 상담 추진 ○ 전문가(약사)의 복약 지도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의 합리적 의료 이용 유도

□ 소요예산

○ (소요예산) 15,000천원(시비) * 보건위생과 방문 약손 사업 예산 활용

- 활동보상비 12,000천원, 사무관리비 3,000천원

□ 추진체계 (기관별 역할)

기 관 별		주 요 역 할	비 고
市	복지정책과	• 계획수립 및 사업 홍보, 상담기록지 등 서식 제작 • 개인정보 및 사업참여 동의서 징구(미참여 구 수행) • 사업 참여 의료급여수급자 홍보물품 제공, 의료급여 제도 안내 • 참여일정 조정 등 기관 협의, 가정방문 및 상담 기록 • 보건위생과, 부산시 약사회, 구군 등 사업추진관련 현안사항 협의 • 만족도조사, 의료이용행태변화 분석 및 결과 보고	
	보건위생과	• 참여약사 수당지원(부산광역시 약사회) • 사업 지원 및 부산시 약사회 등 기관 협의	
구군		• 의료급여수급자 중 대상자 추천 및 생활실태 파악 • 개인정보 및 사업참여 동의서 징구, 의료급여 제도 안내 • 참여일정 조정 등 기관협의, 가정방문 및 상담 기록	
부산시 약사회 (약손다제사업본부)		• 참여약사 추천 및 구군별 약사 인력풀 구성 • 중복 투약 및 부작용 검토(약물 간의 상호작용 및 오남용 여부 확인) • 대상자 눈높이에 맞춘 올바른 복약 상담 • 1,2차 사업참여자 건강관리약품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		• 다제약물관리사업 노하우 등 공유	

□ 추진일정

○ ’26.3.24.(화) 약사회 사전 실무 협의

○ ’26.3.24.(화)~3.27.(금) 사업 참여 구군 사전 조사

○ ’26. 4. 1.(수) 2026년 복약아님, 건강한 동행사업 추진계획 수립

○ ‘26. 4. 6.(월) 대상자 모집 (→ 구·군)

○ ‘26. 4. 중순. 대상자 선정, 참여 약사 추천

○ ‘26. 4. ~10. 대상자 가정 방문 상담, 모니터링

□ 홍보계획

○ ‘26. 4. 보도자료 배포

4-4 [대표과제] 전국최초 장애인 특화 공유 오피스 시범 조성

주관부서	사회복지국 장애인복지과	협조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담당자	여금연 주무관	연락처	051-888-3242

□ 추진배경

○ **장애인 채용기업의 편의시설 조성 부담 완화로 고용 향상 및 ESG경영 지원**

- 기업 입장에서 장애인 채용 의사가 있어도 장애인 관련 시설 조성 부담으로 채용을 꺼리고, 채용시에도 재택근무 비중이 높은 실정
- 「장애인고용법」상 민간기업 장애인 의무 고용률 상향에 따른 기업 부담 완화 및 장애인 채용 활성화 붐업 조성

※ 민간기업(상시근로자 50인이상) 의무고용률 : '26년 3.1% → '27년 3.3%→ '29년 3.5%

○ **장애인 근로자 생산성 증대 및 사회성 향상 상생방안 모색**

- 장애인 근로자의 실질적인 생산성 향상으로 기업 이윤 창출 기여 및 자존감 향상, 소통환경 조성으로 장애인의 사회적 고립 방지

□ 사업개요

○ **(시 설 명)** "B(Busan Barrier-Free)-워크스테이션"(가칭)

○ **(위　　치)** 해운대구 센텀북대로 60(재송동) 센텀IS타워 內(예정)

○ **(수용규모)** 일 10명 내외

○ **(사업내용)** **전국 지자체 최초** 장애인 자영업자(1인기업) 및 **재택근무자를 위한 업무 공간 조성,** 입주기업과 장애인에게 필요 **서비스 지원 등 지속가능한 일자리 생태계 조성**

○ **(추진방법) 민·관 협력체계 구축, 사회공헌기업 참여** 유도

- **(시)** 장애인 특화 공유 오피스 시범 조성 및 원활한 운영 지원
- **(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고용 기업에 최적화된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상공회의소 및 경영자총협회)** 장애인 특화 공유 오피스 홍보
- **(사회공헌기업)** 조성 공간 무상 제공 및 조성운영비 지원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시행 전	시행 후
○ 장애 친화 시설을 구축한 공유 오피스 등 업무공간 부족	○ 장애인 특화 공유 오피스 1개소 조성 (3년 시범)

○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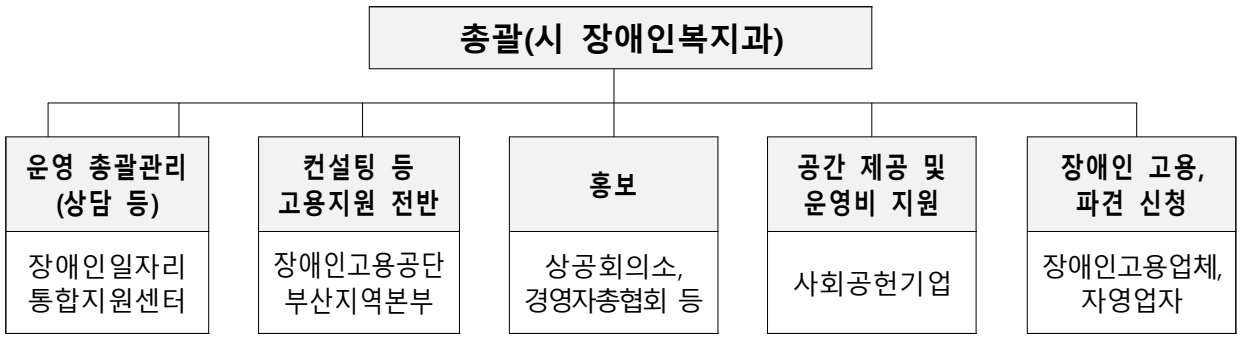
시행 전	시행 후
○ 장애인 관련 시설 조성 부담으로 장애인 채용에 대한 부담이 높음	○ 민간기업 장애인 채용 부담 완화 ○ 장애인근로자 사회적 고립 방지

- **전국 지자체 최초** 기업이 별도의 장애 친화 시설을 구축하지 않아도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 구축**으로, **기업부담 완화 및 장애인 취업 활성화**
- 장애인의 자립 기반 제공 및 자존감 향상, 소통기회 제공

□ '26년 소요예산

○ 비예산 ▸ 민관협력체계 구축, 사회공헌기업 참여 유도

□ 추진체계



□ 추진일정

○ ‘26. 3. 5. : 2026년 부산장애인일자리 창출 종합계획 수립

○ ‘26. 3. : 장애인고용공단, 경영자총협회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협의, ㈜필즈 등 사회공헌기업 방문 설명

○ ‘26. 4. 3. : 장애인일자리 창출 민관협업 거버넌스(별칭: 일사천리단) 구축 및 장애인 특화 공유 오피스 시범 조성 업무협약(4개기관)

○ ‘26. 6. : 운영계획 수립 및 입주 장애인 모집

○ ‘26. 7. : 개소식 개최

○ ‘26.~’29. : 시범 운영

□ 홍보계획

○ 장애인 일자리 정책 브랜드 로고 제작(‘26.3.) ▸미디어담당관 협업

- 의미 : 민관협업체를 구성하여 일하려는 장애인(Person)에게 적합 직무(Job)를 신속하게 발굴하여 연결하는 장애 차별없는 부산(Busan Barrier Free)

- 로고 ▸ 휠체어 탄 장애인 형상화, 일과 장애인을 연결



○ 부산시 운영 SNS 등 홍보 의뢰(‘26.3.) ▸ 미디어담당관

○ 보도자료 작성·배부(’26.4.)

○ 상공회의소 및 경영자총협회 통한 기업 홍보

4-5 광역최초 찾아가는 외국인 감염병 예방 통합 검진 시범사업 추진

주관부서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협조기관	대한결핵협회, 한국한센복지협회, 한국건강관리협회, 한국에이즈퇴치연맹, 부산외국인주민지원센터, 부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구·군 보건소 등
담당자	최시영 주무관	연락처	051-888-3321

□ 추진배경

○ 부산시 관내 외국인 주민의 유입 증가

- '26. 1월말 기준 내국인 320만명 대비 외국인 7만명 전체인구의 2.1% 차지 및 꾸준한 내국인 감소에 대비한 외국인 증가세

○ 국내 감염병 중 한센병, 결핵, 에이즈 등 외국인 감염병 발생률 증가로 선제적 감염병 검진을 통한 지역사회 내 감염 전파 차단

○ 언어적, 경제적, 문화적 장벽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공공보건 사각지대 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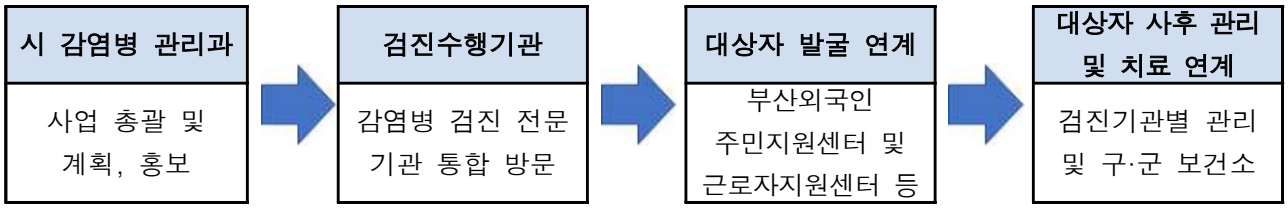
□ 세부 추진사항

○ **외국인 감염병 검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 관련 유관기관 및 검진기관, 외국인 지원 관련 담당 부서 등 단체장 참여 협의회 구성·운영 ▷ 실무자 간담회 별도 상시 운영
- 대상 사업장 발굴 및 운영 사항 협의, 성과 결과 및 환류

○ **수요자 중심 찾아가는 외국인 통합 검진 운영**

- **(추진기간)** '26년 분기별 운영(3, 6, 9, 12월) ※ 1분기 질병관리청 통합 검진 사업 연계
- **(대　　상)** 외국인근로자(미등록 포함), 이주민 및 다문화 가정, 유학생 등
- **(검진기관)** 한센복지협회, 결핵협회, 한국건강관리협회, 구·군 보건소 등
- **(검진내역)** 한센병, 결핵, 기생충감염병, 에이즈, B·C형 간염
- **(운영방법)** 전문 검진기관 통합 현장 방문 검진 실시※익명가능·무료검진



- **(설문조사)** 검진 참여 외국인 대상자 만족도 조사 실시

○ **감염병 예방 홍보 부스 병행 인식 개선 및 예방 행태 강화**

- 주요 감염병 국적별 번역본 배부, 손씻기 체험 교육 등 실시
- 감염병 예방 물품(마스크, 소독티슈 등) 배부 지원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table>
<tr><th>시행 전</th><th>시행 후</th></tr>
<tr><td>○ 신규 시범 사업
○ 기존 검진 기관 개별 단발성 운영</td><td>○ 성과목표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목표(A)</th><th>실적(B)</th><th>달성률(%)</th><th rowspan="2">비고</th></tr>
<tr><th>-</th><th></th><th>85% 이상</th></tr>
<tr><td>검진자 수</td><td>200명</td><td></td><td></td><td rowspan="4">※ 검진 및 홍보 인원 중복 가능</td></tr>
<tr><td>예방 홍보 참여인원</td><td>300명</td><td></td><td></td></tr>
<tr><td>참여 기관</td><td>7개소 이상</td><td></td><td></td></tr>
<tr><td>만족도 조사</td><td>4.5 이상 (5점 만점)</td><td></td><td></td></tr>
</table></td></tr>
</table>

- 기존검진기관 개별 단발성으로 운영되던 외국인 검진을 통합 운영
- 감염병 검진 및 예방 홍보, 교육 등 병행하여 참여 인원 확대

○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 **각 검진 기관별 개별 외국인 검진 단발성 진행** - 결핵, 한센, 에이즈, 기생충감염병 등 관련 검진기관 개별 단발성 검진 실시 - 민간기관의 방문 검진으로 대상자 비협조	○ **광역 단위 거버넌스로 검진 기관을 하나로 묶어 외국인 검진 편의성 향상** - 일정 정례화, 민간검진기관 및 외국인주민센터 등 단체 광역 단위 검진 주관으로 효율성 증대 ○ **외국인 감염병 검진 표준모델 제시 및 감염병 예방 정책의 모범사례 창출** - 외국인근로자 감염병 조기차단 및 예방 통한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 현장 중심의 통합적 검진 및 홍보로 대상자 확대

□ '26년 소요예산

○ 비예산

* 부산시 기존 민간위탁 사업 및 지방보조사업 운영, 협회 운영 연계로 별도 예산편성 불요

□ 추진체계

○ 사업 운영 체계



□ 추진일정

○ 협의회 구성 및 운영

- 1차: '26. 3. 9. 협의회 구성 동의 및 협의회 실시
- 2차: '26년도 시범사업 운영 종료 후 실시 예정, 사업 결과보고 및 향후 운영 방안 논의

○ 통합 검진 운영 일정

구분	일정(안)	장소	비고
1/4분기	'26. 3.29.(일)	부산 외국인주민 지원센터 (사상구)	부산 외국인주민 지원센터 1차 ※ 질병관리청 연계
2/4분기	'26. 6.28.(일)	부산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연제구)	-
3/4분기	'26. 9.13.(일)	부산 외국인주민 지원센터 (사상구)	부산 외국인주민 지원센터 2차
4/4분기	'26.11.29.(일)	부산 관내 사업장	부산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연계

□ 홍보계획

○ 홈페이지 및 SNS 등 게시, 검진 안내서 제공 등 검진 안내 홍보

- 시 감염병 포털 및 구·군 보건소, 검진 의료기관 및 검진 대상 기관의 홈페이지 등 통합 검진 홍보 요청
- 검진 장소 내 사전 검진 안내서 비치(1개월 전) 및 검진 예약 안내, 대상자 참여 문자 발송

4-6 부산시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

주관부서	여성가족국 아동청소년과	협조기관	시·구·군 청소년 수련시설
담당자	김수진 주무관	연락처	051-888-1626

□ 추진배경

○ 도심 내 청소년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전용 활동공간 부재로 건전한 여가·문화 활동에 제약 발생

○ 유휴공간을 활용한 청소년 친화 공간 조성을 통해 안전한 활동 환경 및 자기주도적 성장 기반 마련 필요

○ 청소년의 정서 안정 및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안전한 오프라인 활동공간 확충 필요성 증대**

❖ 부산 청소년 자살 및 정신건강 위험
* 15~19세 자살률(10만명당) : '21 5.9명→'22 7.6명→'23 11.5명→'24 14.8명
* 중고생 우울감 경험률 : '21 24.2%→'22 24.6%→'23 21.5%→'24 24.1%

□ 세부 추진사항(주요내용)

○ **유휴공간(공실A·B) 리모델링을 통한 청소년 전용 복합활동공간 조성**

- 공실A : 자유이용 휴식공간, 스터디존, 소규모 모임공간
- 공실B : 문화·예술 체험공간, 디지털 댄스실, 3D 체험관, 다목적 활동공간

○ 휴식·소통·문화·체험 기능을 갖춘 열린 커뮤니티 공간 구축

○ 청소년 참여형 프로그램 및 자율 이용 공간 운영

- 청소년 기획 프로그램, 동아리 활동, 진로·디지털 체험 프로그램 등

※ 민간후원 연계 :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 GIVE N RACE 기부 협력사업 추진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시행 전	시행 후
○ 청소년수련시설 외 전용공간 부족	○ 청소년 전용 활동공간 신규 조성(1개소)

○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 청소년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머물 공간의 부재로 인한 건전한 여가 활동 저해(단순한 소비나 배회 형태)	○ 청소년 참여 활성화 및 건강한 성장 지원 ○ 청소년수련시설 연계를 통한 전문적·지속가능한 운영체계 구축 및 프로그램 질 향상

□ '26년 소요예산

○ 500백만원(민간자본* 100%) *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기금

- 리모델링 공사비 : 300백만원 ▷ 전기, 통신, 조명, 방음 및 인테리어 공사 등
- 집기 및 물품 구입 : 200백만원 ▷ 휴식·커뮤니티 가구, 디지털 장비 등

□ 추진체계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	부산시	⇔	운영기관
ㅇ 재원 지원(기부금) ㅇ 공간 조성		ㅇ 사업계획서 수립 등 행정절차 이행 ㅇ 운영기관 선정		ㅇ 공간 운영 및 프로그램 기획·관리

□ 추진일정

○ '26. 3. 20. : 메르세데스 벤츠 GIVE N RACE 협력사업 제안(市→벤츠)

○ '26. 4. ~ : 협력사업 선정(벤츠→市) 및 세부사항 협의 추진

○ '26. 5. ~ : 기금 전달식 및 계획 수립, 사전 행정절차 이행

○ '26. 7. ~ 12. : 공사 착공 및 준공 ※ '27. 상반기 개소 및 운영

□ 홍보계획

○ 시 SNS, 홈페이지 등을 통한 적극 홍보

○ 기존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등 연계 추진

4-7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 추진

주관부서	푸른도시국 반려동물과	협조기관	16개 구·군
담당자	여현진 주무관	연락처	051-888-5001

□ 추진배경

○ 부산시 사회적 약자가 기르는 반려동물의 진료비 지원으로 사회적 약자의 심신 재활 및 반려동물의 적정보호 기여

○ 부산광역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으로 사회적 약자의 범위와 등록방식에 따른 지원 확대

□ 세부 추진사항

○ 근　　거 : 「부산광역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추진체계 : 16개 구·군에서 추진

○ 사 업 비 : 50,666천원(시비 19,000$^{37.5\%}$,, 구·군비 19,000$^{37.5\%}$, 자부담 12.666$^{25\%}$)

- 산출근거: 253명 × 200천원(연간 지원한도) × 37.5%^{시비} ≒ 19,000천원

○ 주요내용 : 동물등록을 완료한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심한 장애를 가진 사람, 차상위층, 생계·의료·**주거·교육**^{추가} 수급자)에게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시행 전	시행 후
○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 추진	○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 완료 및 정산

○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동물복지 사업 저조	○ 동물복지 시민 인식개선 효과 제고 ○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 홍보 효과 제고

□ 관련 조례 및 지침 개정계획

○ 부산광역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25.12.일부 개정)

□ '26년 소요예산

○ 소요예산 : 19,000천원(시비)

- 사 업 비 : 50,666천원(시비 19,000$^{37.5\%}$, 구·군비 19,000$^{37.5\%}$, 자부담 12.666$^{25\%}$)

□ 추진체계

○ 16개 구·군에서 추진

- 사업계획 수립 및 시비교부

□ 추진일정

○ '26. 1. 사업 추진계획 수립

'26. 3. 구·군 보조금 교부 및 사업 수행

'26. 12. 보조사업 정산 및 평가

□ 홍보계획

○ 시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홍보 예정

4-8 노후아파트 안전취약계층 소방안전물품 무상 보급('26~'28, 3개년)

주관부서	소방재난본부 재난예방담당관	협조기관	
담당자	소방교 손상현	연락처	051-760-5714

□ 추진배경

○ **부산 지역 노후아파트**에서 **화재로 아동 4명이 사망**하는 사고 발생

○ 두 아파트 모두 **15년 이상된 노후 공동주택**으로 **세대 내 스프링클러 및 경보기 부재**로 초기 대피·진압이 어려워 **인명피해 초래**

○ 이에 **대책회의 등을 거쳐 범정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본 사업 추진**

□ 세부 추진사항

○ (대상) **노후아파트***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 **소방안전물품 보급**

* '04. 12. 31. 이전 건축허가 받은 스프링클러 미설치 아파트
** 만 13세 아동,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 (내용) **소방안전물품**(감지기, 자동소화 멀티탭 등) **무상 보급** 및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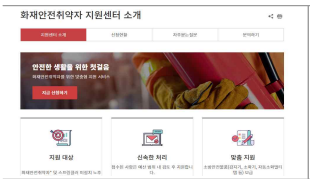
○ (방법) 온·오프라인 연계 **찾아가는 현장 밀착형 보급·교육**

❶ 온라인 : 전용 플랫폼인 「**화재안전취약자 지원센터**」 **본격 운영, 대국민 접근성을 높이고 시민의 자발적 신청 유도**

온라인 센터 **화재안전취약자 지원센터**

▌(**소개**) 소방재난본부 누리집 접속 또는 QR코드 통하여 민원인이 온라인 접수

▌(**지원**) 민원인이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담당자 검토 후 소방안전물품 보급·교육



지원센터 홈페이지



문의하기


관리자 홈페이지



신청 QR코드

❷ 오프라인 : **의용소방대 및 시니어클럽** 등 지역사회 네트워크와 협력하여, **대상 세대 방문 설치·교육 병행**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목표) ’26년 50,000여 가구 소방안전물품 보급

구분	3개년 보급 목표	`26년	`27년(안)	`28년(안)	비고
보급 가구(수)	108,000	50,000	29,000	29,000	※ 감지기 단가 8천원 기준
예산(천원)	2,116,926	980,926	568,000	568,000	
감지기(개수)	264,615	122,615	71,000	71,000	

※ 소방서별로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노후아파트 거주 취약계층 19만여 세대 명단 확보

○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 심야 시간 화재 발생 시 **초기 인지 지연으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 우려** ○ 관 주도의 **수동적 대상자 선정으로 사업 효율성 저하**	○ 감지기를 통한 **화재 조기 인지로 골든타임 확보** 및 멀티탭 보급으로 **전기 화재 예방** ○ **온라인 자발적 신청 유도** 및 **의소대·시니어 협력 보급**으로 **행정 효율 극대화**

□ 관련 조례 및 지침 개정계획

○ 해당없음

□ ’26년 소요예산

○ **소요 예산 13.3억여 원**(감지기 9.8억 + 자동소화 멀티탭* 3.5억)

* 市 재난관리 기금 활용 5억 원 배정, ’25년 1.5억 사용 후 ’26년 잔여분 3.5억 사용

□ 추진일정

○ ’26년 사업 종합계획 수립 ····· ’26. 1.

○ 소방안전물품 조달 구매 및 배부 ····· ’26. 3.

○ 시니어클럽·의용소방대 연계 물품 보급 ····· ’26. 4. ~ 11.

○ 사업 성과 분석 및 차년도 추진계획 수립 ····· ’26. 11.

4-9 「SELF생존전략」 장애인 소방안전교육 강화

주관부서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서	협조기관	-
담당자	소방위 장순정	연락처	051-760-5291

□ 추진배경

○ 재난 취약계층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여 화재 등 재난 피해를 최소화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필요

○ 장애인의 구조적 화재 대응 취약성과 사망위험을 고려할 때, 체계적인 교육 및 체험을 통한 자율적 대피·대응 역량 강화 필요

* (2025) 광주 아파트화재 시각장애인 사망, (2022) 서울 빌라 화재 시각장애인 사망

□ 현황(문제점) 진단

○ 장애 유형별 맞춤 교육의 부족

- 현재 소방안전교육은 비장애인 기준으로 구성된 내용이 많아, 장애인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

○ 교육 접근성 및 지속성 부족

-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대부분 단발성 행사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학습이 곤란

□ 세부 추진사항

○ 교육기간: 2026. 2월 ~ 11월

○ 교육대상: 관내 장애인 관련 시설

○ 교육과정: 기관별 2회

┌ 1회차: 119히어로즈 인증 프로그램 체험

└ 2회차: 장애특성별(시각, 청각, 발달 등) 소방안전교육

※ 대상처 여건 및 사정을 고려하여 1회차 또는 2회차 중 1개 과정만 실시 가능

○ 운영목표: 「SELF 생존전략」 소방안전교육 또는 체험 횟수 **연 10회 이상**

※ 동일기관이나 대상자가 상이한 경우 다회 실시 시 회차별 각 1회 운영으로 인정

○ 세부내용

	교육과정	장소	주요내용
1회차 (체험)	119히어로즈 인증프로그램	• 북부소방서 본서 4층 소방안전체험장	• 3개 미션(숨잡이, 불막이, 살피미) 순환 체험 및 개인 인증 마그넷 지급
2회차 (교육)	장애특성별 소방안전교육	• 대상처	• 화재 발생 시 인지요령 • 상황별 화재대피 방법 • 초기 화재 대응 요령, 응급처치 등

119히어로즈 인증 프로그램(북부서 자체) ※대상처 여건에 따라 변경가능

○ **(운영부서)** 북부소방서 구조구급과

○ **(장　　소)** 북부소방서 안전체험장(본서 4층)

○ **(체험방법)** 2~3개조 편성 / 미션별 동시 진행

○ **(미션구성)** 숨잡이(심폐소생술), 불막이(화재안전, 연기대피체험), 살피미(생활안전)

○ **미션 완료 시** 자체제작 보상품(배지) 및 최종 개인 인증 마그넷 제작 및 지급

숨잡이(10종)	불막이(10종)	살피미(10종)	인증 마그넷(5종)
			

□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 화재 인지 지연 및 대응 미숙으로 인한 초기 대처 능력 부족 ○ 장애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 부족으로 상황별 대피요령 이해도 저조 ○ 반복 교육 기회 부족으로 안전행동 습관 형성 미흡	○ 화재(연기, 냄새, 경보 등) 인지 능력 향상 ○ 장애 특성에 맞는 상황별 대피요령 습득을 통한 자율적 대피능력 확보 ○ 반복 교육 및 인증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안전행동 생활화 및 행동 습관 형성

□ ’26년 소요예산

○ 1,750천원(화재예방홍보활동 – 일반운영비 - 사무관리비)

□ 추진일정

○ 관내 대상처 체험 및 교육 일정 협의 (~‘26. 5월)

○ 장애특성별 소방안전교육 교보재 자체 제작 (‘26. 4월)

○ 결과분석 및 개선사항 반영 (체험 후 설문조사 실시)

- 매회 체험 종료 후 설문조사를 통한 보완점 및 개선사항 도축 및 차회차 체험(교육) 반영

□ 홍보계획

○ SNS, 유튜브, 홈페이지 등 활용한 소방안전교육 홍보

○ 언론보도를 통해 주민 안전의식 향상 및 관심도 증대 도모

4-10 사회적 약자 대상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

주관부서	농업기술센터 시민농업팀	협조기관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과
담당자	조지영 주무관	연락처	051-970-3741

□ 추진배경

○ 부산은 치유(도시)농업의 선도 도시로서 시 가구의 18.8%인 296천 가구가 치유(도시)농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교육 수요도 매년 증가함

○ 「부산광역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24.4.3.)」 제정과 「도시형 치유농업 거점센터」 선정('23.6.) 및 2025~2026년 치유농업센터 구축과 함께 치유농업 확산을 부서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공공서비스의 확대 필요

□ 세부 추진사항

○ 추진목적 : 대상별·유형별 치유목적에 맞는 치유농업 프로그램의 시범 운영으로 실질적인 치유 효과를 검증하고 적용 가능한 시설 및 기관에 확산하기 위함

○ 사업기간 : '26. 1. ~ 12.

○ 사업내용: 사회적 약자 대상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5분야 75회 655명)

프로그램명	대 상	개소수 (횟수/인원)	예산액 (천원)	비 고
다문화 치유농업 프로그램	다문화 및 취약계층	10회 200명	10,000	
발달장애인 치유농업 시범	발달장애인	30회 30명	16,000	
인지건강개선 치유농업 시범	경도인지장애인	15회 15명	8,000	
특수직업군 치유농업 프로그램	특수직업군	5회 150명	4,500	
치유농업센터 홍보 프로그램	장애인, 노인 등	15회 260명	6,800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 대상별·유형별 치유농업 프로그램 참여 인원 및 만족도

시행 전	시행 후
○ 사회적 약자, 소외계층, 특수계층 대상의 치유농업 프로그램 서비스 부족 및 계층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필요	○ 사회적 약자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검증을 통한 치유농업 서비스 확산 ○ 참여인원 655명, 만족도 90%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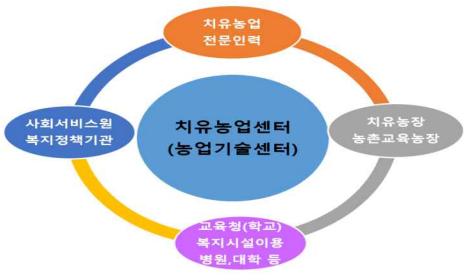
○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 부산은 초고령사회로 치매, 유형별 장애, 우울감 증가 등 사회적 문제 다발생 ○ 사회 공동체와의 소통 부재로 소외계층 및 특수계층의 사회적 고립 증가	○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통한 신체적, 정서적 건강 증진 ○ 소외계층 및 특수계층의 사회참여와 치유 기회 제공으로 사회 연결성 증진

□ '26년 소요예산

○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 45,300천원(시비 100%)

□ 추진체계



○ 치유농업센터(농업기술센터) 중심 치유농업 확산
- 사회서비스원, 복지정책기관
- 치유농장, 농촌교육농장
- 교육청(학교), 복지시설이용 등
- 치유농업사 등 치유농업 전문인력

□ 추진일정

○ '26. 1.~ 3. : 프로그램 운영계획, 대상자 선정, 운영자 구성 등

○ '26. 3.~11. : 프로그램 운영, 스트레스 측정, 만족도 조사

○ '26. 11.~12. : 치유농업 프로그램 결과 분석 및 평가

□ 홍보계획

○ 언론매체 및 디지털 콘텐츠(SNS 카드뉴스, 영상)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치유농업 및 프로그램 검증 효과 집중 홍보

4-11 외국인 자동차 등록 안내 책자 배포

주관부서	차량등록사업소	협조기관	-
담당자	진승규 주무관	연락처	051-290-5403

□ 추진배경

○ 부산시 외국인 주민 증가에 따른 자동차 행정 불편 해소 필요

- 복잡한 행정 절차와 언어 장벽으로 인해 이전·변경 등록을 기한 내 이행하지 못하는 사례 증가
- 매매(15일), 상속(6개월) 등 등록 기한을 인지하지 못해 최대 50만원의 범칙금 및 과태료 부과 사례 다수 발생

○ 외국인 대상 자동차 행정 안내 체계 수립

- 기존 안내 자료는 한국어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한국어 능숙도가 낮은 외국인 주민이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실정
- 부산시는 중국·베트남·러시아 등 다국적 외국인이 많아 다국어 안내 수요가 높을것으로 판단됨

□ 세부 추진사항

○ 5개 국어 「외국인 자동차 등록 안내」 책자 제작·배포

- 한국어·영어·중국어·베트남어·러시아어 등 5개 국어로 제작하여 언어 장벽 해소
- 각 페이지에 QR코드 삽입, 스마트폰을 통한 실시간 정보 접근 가능

○ 외국인 주민 접점 주요 거점 배포

- 차량등록사업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출입국외국인청, 행정복지센터, 중고차 매매단지 등 외국인 방문 빈도가 높은 기관에 비치

○ 온라인 배포 병행 : 시 홈페이지(SNS)를 통해 다국어 PDF 파일 게시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시행 전	시행 후
○ 한국어 중심의 단일 언어 행정 안내로 인한 정보 접근 불평등 발생	○ 외국인 자동차 관련 행정 민원 만족도 향상을 위한 안내 책자 제작 - 500장 * 20개 유관기관 = 총10,000장

○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 언어 장벽으로 등록 절차 이해 곤란 ○ 동일 민원 반복 응대로 업무 부담 증가	○ 모국어로 된 안내자료로 자기주도적 행정 처리 가능 ○ 사전 안내 강화로 창구 민원 감소 및 업무 효율 향상

□ 관련 조례 및 지침 개정계획

○ 별도 조례 개정 사항 없음

- 향후 필요시「부산광역시다문화가족지원조례」,
「부산광역시외국인주민지원조례」개정 요청 예정

□ '26년 소요예산

○ 6개 국어 안내 책자 제작비 : 약 300만원

- 번역 용역비(6개국어) : 150만원
- 인쇄·제본비(10,000부) : 150만원

□ 추진체계

○ 주관 :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 홍보 및 협조요청기관

- 부산광역시 출입국·외국인청, 부산광역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6개구·군 등

□ 추진일정

○ 안내문 작성 및 검토 : 2026. 상반기 중

○ 안내문 제작 및 발송 : 2026. 연내

□ 홍보계획

○ 부산광역시

- 市 홈페이지·SNS 게시 및 안내문 실물 배치

○ 유관기관

- 16개구·군, 출입국외국인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실물배치 및 홍보 요청

5. 모두가 기본적 삶을 보장받는 사회 안전망 구축

5-1 시민안전보험 보장체계 고도화 및 사각지대 해소

주관부서	시민안전실 안전정책과	협조기관	행정안전부, 구·군
담당자	신혜정 주무관	연락처	051-888-2894

□ 추진배경

○ 시민안전보험은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시민 피해를 지원하는 대표적인 사후 안전망으로 자리잡고 있음

○ 다만, 일부 보장항목은 실효성이 낮고, 신종 재난(지반침하 등) 증가에도 불구하고 기존 보장체계는 한계 존재

○ 또한, 구·군별 안전보험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생활형 보장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광역 차원의 재난보장과 역할분담을 통해 사각지대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시민안전보험은 지급률 85.8% 수준으로 실질적 수혜가 확대되고 있으나, 보다 체감도 높은 보장항목 중심 개편 필요

□ 세부 추진사항

○ **시민 체감형 보장항목 확대 및 구조 개선**

- 시민 수요 및 사고 통계 기반 보장항목 재설계
  - 자연재해·사회재난 사망 보장금액 상향(1,300만 원 → 2,000만 원)
  - 지반침하 상해 사망·후유장해 보장항목 신설(1,000만 원)
  - 성폭력범죄 피해 보상금 대상연령 확대(12세 이하 → 전연령)
  - 실효성 낮은 항목 정비(감염병, 상해진단비 등)

○ **사각지대를 위한 역할분담을 통한 안전보장 체계 구축**

- 시와 구·군 간 역할 분담 체계 구축
  - 시 : 자연재난·사회재난 등 대형 재난 중심 보장
  - 구·군 : 생활밀착형 사고 중심 보완 보장

→ 보장 중복 최소화 및 사각지대 없는 안전보장 체계 구축

○ **시민 체감도 제고를 위한 홍보·접근성 강화**

- 2026년도 신규 보장항목 및 변경사항 집중 홍보
  - ◆ 증액·신규·확대 된 보장항목 중심 홍보 강화

- 온라인 중심 홍보를 통한 시민안전보험 인지도 제고
  - ◆ 시 홈페이지, '안전하이소' 5개 채널 SNS 온라인 홍보
  - ◆ 구·군 홈페이지 및 구·군 SNS 홍보

-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홍보 효과 극대화
  - ◆ 구·군, 소방, 경찰 등과 협업하여 다각적 홍보 추진
    - * 구·군 : 전광판 게시, 보건소·병원·약국 홍보물 배포
    - * 소방서·경찰서 : 민원실 등 포스터·리플릿 등 홍보자료 배포
    - * 교육청 : 학교·학부모 대상 홍보자료 배부
    - * 공사·공단: 도시철도, 공원시설, 장사시설 등 홍보 포스터 게시

- 안전문화운동과 연계한 생활 밀착형 홍보 추진
  - ◆ 안전문화 캠페인 및 '안전한바퀴' 연계 홍보
  - ◆ 버스정보안내기, 공동주택 미디어보드 등 영상·포스터 송출

○ **시민 참여 기반 정책 개선 체계 구축**

- 시민 체감도 조사 및 정책 반영
- 지급 사례 분석을 통한 보장항목 지속 개선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구분	시행 전	시행 후
시민체감도 조사 및 정책반영 보장 체계 개선	○ 상해진단비(12세미만) 10만원 ○ 급성감염병사망 100만원	○ 실효성 낮은 보장항목 정비 ○ 신규 재난 항목 추가 및 확대 - 지반침하 사망·후유장해 1,000만원 - 자연·사회재난 사망 2,000만원(증액) - 성폭력범죄 피해보상 대상 확대 (12세미만→전연령층)
보장항목 구·군별 사각지대 해소	○ 구·군별 안전보험 편차 존재 - 온열질환 진단비(8개 구군 가입) - 익사(7개 구군 가입)	○ 시와 구·군 간 중복 보장항목 정비 - 온열질환 진단비(16개구군 가입) - 익사(16개구군 가입)

○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 보장항목 일부 비효율 ○ 구·군별 편차 존재 ○ 보험 인지도 낮음	○ 실질 보장 중심 구조 ○ 시와 구군간 역할분담으로 안전보장 체계 구축 ○ 시민 체감도 상승

□ 관련 조례 및 지침 개정계획

○ 「부산광역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 '26년 소요예산 ▸ 879,000천원

○ 시민안전보험가입비(민간이전/보험금) 870,000천 원

○ 시민안전보험 홍보자료 제작 등(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9,000천 원

※ 전년대비 확대 반영(25년 예산: 799,000천원)

□ 추진체계

○ 부산시 : 재난 중심 보장체계 운영

○ 구·군 : 생활형 사고 보완 보장
→ 광역-기초 협업형 안전망 구축

□ 추진일정

○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 개편 및 운영**

- '26. 1월 : 시민안전보험 운영계획 수립 및 계약 체결
- '26. 2월 : 시민안전보험 시행 및 보장 개시

○ **홍보 콘텐츠 제작 및 배포**

- '26. 2월 : 리플릿·포스터 등 홍보물 제작 및 배부
- '26. 2월 : 구·군 및 유관기관 협조 공문 발송

○ **온라인 홍보 및 시민 참여 확대**

- '26. 2~12월 : 시 홈페이지 및 SNS(안전하이소 등) 상시 홍보
- '26. 3~10월 : 카드뉴스·영상 콘텐츠 제작 및 게시
- '26. 4~10월 : 시민 참여형 이벤트(퀴즈, 캠페인 등) 운영

○ **오프라인 홍보 및 현장 연계**

- '26. 2~12월 : 안전문화캠페인 및 행사 연계 홍보
- '26. 2~12월 : 도시철도, 버스정보안내기 등 홍보 송출

○ **성과관리 및 개선**

- '26. 11월 : 연간 운영성과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 홍보계획

○ 온라인 중심 시민 접근성 강화

- 시 홈페이지, 공식 SNS(안전하이소 등)를 활용하여 보장항목, 청구 절차 등 시민 맞춤형 정보 제공
- 카드뉴스, 영상 등 시각 콘텐츠 제작을 통해 시민 이해도 및 참여도 제고

○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홍보 확대

- 구·군, 경찰·소방, 교육청 등과 협업하여 다중 채널 홍보 추진
- 도시철도, 버스정보안내기, 공동주택 미디어보드 등 생활밀착형 매체 활용

○ 안전문화운동과 연계한 체감형 홍보

- 안전문화 캠페인, 박람회 등 현장 행사와 연계하여 시민 참여형 홍보 실시
- 찾아가는 안전교육 및 캠페인과 병행하여 보험 제도 안내

○ 2026년 확대·변경사항 집중 홍보

- 자연재해·사회재난 보장금액 상향
- 지반침하 사고 보장 신규 도입
- 성폭력 피해보상 대상 확대 등 주요 변경사항 중점 안내

5-2 에이지테크 기반 지역밀착형 건강돌봄 플랫폼 보급

주관부서	미래기술전략국 바이오헬스과	협조기관	(재)부산테크노파크
담당자	이수진 주무관	연락처	051-888-3494

□ 추진배경

○ **(현실태)** 부산시의 높은 고령인구 비중과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의료비 부담 증가로 예방적·통합적 건강관리 필요성 대두

○ **(필요성)** 부산시 고령층의 높은 건강관리 서비스 수요도 조사 결과 반영, 데이터 기반 '에이지테크 표준 도시 모델' 구축이 필요한 시점

□ 세부 추진사항

○ **(사업목적)** 고령자의 건강지표 변화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측정(평가) 기반 예방 중심 건강관리 운영모델 표준화

○ **(사업기간)** '26.~'28.(3년)

○ **(사 업 비)** 100억(국비 70, 시비 30) ※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지역자율계정)

○ **(위치/규모)** 부산시 전역/10개소(구·군 복지관 등 지역 내 거점 역할 기관)

○ **(주요내용)** 고령층 대상 예방적·통합적 건강관리를 위한 측정·모니터링 기반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신체 건강: 신체 노쇠 예방을 위한 측정 기반 중재 프로그램 운영
- 인지 건강: 인지 저하 예측 및 인지 향상을 위한 중재 프로그램 운영
- 정신 건강: 정신건강 측정 및 마음챙김을 위한 뇌과학 기반 명상프로그램 운영
- 디지털 소통: 화상시스템 및 예약시스템 운영
- 통합 플랫폼 및 데이터 분석 가능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소통방안)** 지역사회 연계·확산 방안 마련

- 고령자: 건강 측정 통한 현장 소통, 만족도 조사 실시 등 의견 수렴
- 구·군: 지역사회 연계·확산 위한 구군 역할 분담
- 지역대학: 대학 자체 사업추진으로 구축지 인력 파견·실증 지원
- 민관협의체: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전문가 자문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시행 전	시행 후
○ 구축지 수, 이용자 수 중심 성과 설정	○ 기본 성과지표: 만족도 조사 추가 - 구축지 수: '26년 2개소 - 이용자 수: '26년 300명 - **만족도 조사**: (고령자) 100점 만점 80점 이상(무작위 20%) * '25년 시행 유사 사업 결과보고 기준 목표 설정

- 중재 프로그램 이용자 대상 만족도 조사 실시

○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 장비 보급 중심 ○ 건강관리 피드백 부족	○ 부산시 특화 건강지표 기준 마련 ○ 사용자 대상 건강관리 피드백 제공 가능 ○ 플랫폼 연동 장비 보급으로 데이터 수집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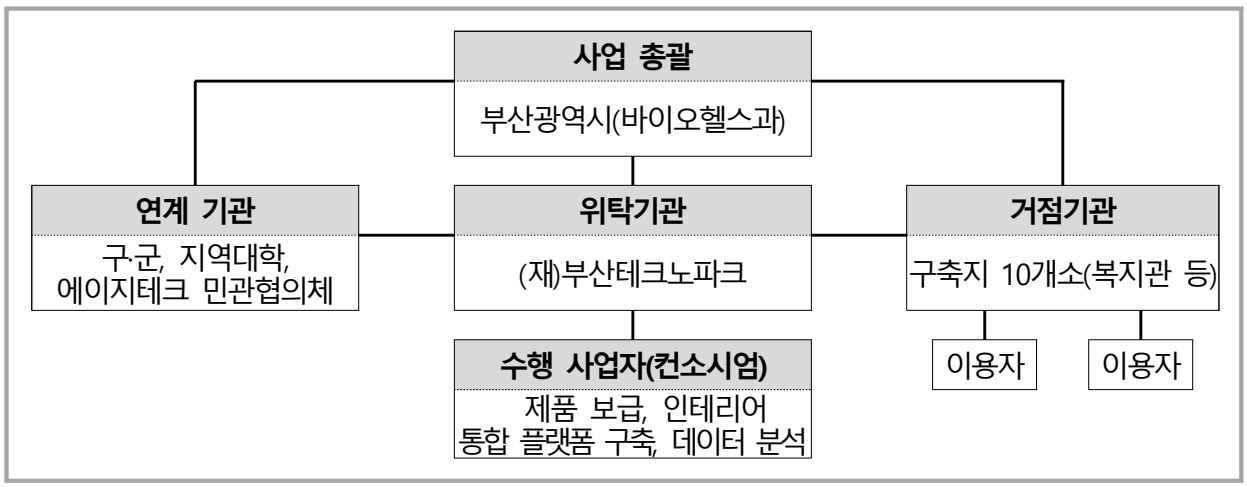
- 고령자 대상 예방적 건강관리 및 건강관리 개선 결과 확인
- 데이터 기반 정책·산업 생태계 기반 마련: 활용가능한 데이터의 자원화

□ '26년 소요예산

○ 2,943백만원(국비 2,060 시비883)

- 컨소시엄 사업비 2,385.5, 연구활동비(전문가 활용비, 지급수수료, 행사비, 인쇄비) 95, 연구과제 추진비(소모품비, 교통비, 회의비) 19
- 공기관 위탁에 따른 인건비 383.5, 간접비 60

□ 추진체계



□ 추진일정

○ ‘25. 2. 부산광역시↔(재)부산테크노파크 위탁계약 체결
○ ‘25. 3. 16개 구·군 부단체장 회의 안건 상정
○ ‘25. 4. 구축지 사업설명회, 구축지·수행사업자 선정 공고
○ ‘25. 5~6. 구축지·수행사업자 선정 평가 및 선정 완료
○ ‘25. 6. 착수보고회 개최(계획 보고)
○ ‘25. 9. 중간보고회 개최(경과 보고)
○ ‘25. 9~10. 구축지 인테리어 및 장비 보급
○ ‘25. 11. 시범운영 및 관리자 교육
○ ‘25. 12. 최종보고회 개최 및 개소식, 만족도 조사 및 1차년도 평가

□ 홍보계획

○ **(홍보방법)** 보도자료 및 구·군 공문 배포 통한 지역사회 홍보
- 홍보물 제작: 안내 브로셔 및 홍보영상 제작

5-3 부산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및 대출이자 지원 확대·개선 추진

주관부서	청년산학국 청년정책과	협조기관	부산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담당자	김현령 주무관	연락처	051-888-4614

□ 추진배경

○ **(주거지원 강화)** 부산 청년에게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안정된 주거환경 및 정주 여건 조성

□ 세부 추진사항

○ **(추진근거)** 「부산광역시 청년기본 조례」 제17조, 제17조의2

○ **(사업기간)** 2026년

○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부산거주 19~39세 무주택 청년

- 소득기준 : 본인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1억원 이하
- 주택기준 :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 **(지원내용)** 임차보증금 대출 및 대출이자 지원

- 대출한도 : 최대 1억원 이내 (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
- 이자지원 : 연소득 45백만원이하 2.5%(자부담 1%), 45백만원초과 2%(자부담1.5%)

○ **(지원규모)** 1,630명

○ **(사 업 비)** 2,500백만원(시비)

○ **(협약기관)** 부산광역시, 부산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 **(개선사항)**

❶ **(취약계층 이자지원 확대)**

- **(소득기준추가)** 연 소득 25백만원* 이하 청년 이자지원 확대

* 2025년 최저임금(시급 10,300원)을 연봉으로 산출 시, 약 25백만원 산정

➡ **(시 지원강화)** 2.5%→3% (0.5%↑), **(청년 부담완화)** 1%→0.5% (0.5%↓)

❷ (대출 심사기간 단축)

ㄱ (기존) 신청매월 1~10일→ 시)심사.선정11~30일→ 은행)대출실행2주 (총45일 소요)

ㄴ **(개선)** 신청매월 1~10일→ **시)심사.선정11~15일**→ 은행)대출실행2주 (총30일 소요)

➡ 심사기간 20일 →5일(15일 단축), 사업 참여자 조기 대출실행 적극 지원

❸ (서류제출 간소화)

ㄱ (기존)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임대차계약서 총 3종

ㄴ **(개선)** 가족관계등록부, 임대차계약서 총 2종

➡ 행안부 주민등록전산망 활용, 주민등록등본 미징구로 신청편의 제공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시행 전	시행 후
○ 대출 및 대출이자 지원 1,380명	○ 대출 및 대출이자 지원 1,630명

○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 높은 주거비 부담은 청년유출 원인 ○ 주거비 부담 증가로 인한 청년자립 약화	○ 대출이자지원으로 청년 주거비 부담 경감 ○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사업으로 청년의 삶 개선 제고

□ 관련 조례 및 지침 개정계획 : 해당없음

□ '26년 소요예산

○ (사업비) 2,500백만원(시비)

□ 추진체계

○ 기관별 역할

부산광역시		부산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업계획 수립, 대상자 선정 및 대출이자 지원	⇔	임차보증금 대출심사 및 대출실행	⇔	임차보증금 대출보증

○ 사업 절차

1 사업신청 (청년→시)	2 심사 및 선정 (시→청년)	3 대출신청 (청년→은행)	4 대출금 지급 (은행, 보증공사)	5 이자지원 (시→은행)
부산청년플랫폼 온라인접수 기간 : 매월 1~10일	적격심사 후 통보 매월 15일 전후	대출가능여부 상담 약정서 작성 및 구비서류제출	대출자격, 임차주택 및 보증자격 등 심사 후 대출실행	월별 대출이자 지원

□ 추진일정

○ '26. 1. ~ : 사업대상자 접수・선정・대출실행 및 이자지원

- (심사기간 단축) 기존 20일 →5일(15일 단축), 조기 대출실행 적극 지원
- (서류제출 간소화) 행안부 전산망 활용, 주민등록등본 미징구(3종→2종)

○ '26. 3. ~ : 취약계층 이자지원 확대 관련 사회보장협의 추진

○ '26. 9. : 취약계층 이자지원 확대 관련 업무협약변경 완료

○ '26. 11. : 사업 참여자 대상 체감도 조사 실시

○ ’27. 1. : 취약계층 청년 이자 지원 확대 시행

□ 홍보계획

○ (온 라 인) 청년G대 홈페이지, 부산청년플랫폼 SNS 운영 등

○ (오프라인) 부산시보 게재, 보도자료 배포, 지하철 등 홍보물 제작・배부

○ (핀셋홍보) 구・군, 청년공간, 부산은행 등

5-4 부산형 통합돌봄 추진

주관부서	사회복지국 돌봄복지과	협조기관	지역사회 전체 (건보공단, 연금공단, 의료기관, 사회복지기관 등)
담당자	김태석 주무관	연락처	051-888-1222

□ 추진배경

○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돌봄수요 증가**

- '21.9월 초고령사회 진입, 돌봄·의료욕구 급증하는 후기고령 인구(75세 이상) 지속 증가
- 저출산 고착화에 따른 인구감소, 기대수명 대비 짧은 건강수명

○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고립 및 단절 심화**

- 혼인·부양 가치관 변화, 1인가구 증가 등 가족돌봄 약화
- 개인주의 문화 확산 등으로 사회 구성원 간 고립·단절 심화

○ **수요 대비 불충분한 서비스**

- 의료-복지 연계체계 미비 등으로 돌봄서비스 받기 위한 사회적 입원 발생
- '살던 곳에서 계속 살기 위한' 장기요양급여 등 재가서비스 부족

○ **기관별 분절적 서비스 제공으로 통합돌봄 제한**

- 정보접근의 한계, 서비스별 신청에 따른 불편으로 서비스 누락
- 구심점 역할 기관 부재 및 기관별 연계 부족

○ **의료·요양 등 돌봄의 통합제공을 위한 부산형 통합돌봄 추진 필요**

- 기존)'부산, 함께돌봄' 기반, 신규)'돌봄통합지원' 추진으로 "부산형 통합돌봄" 완성
- 의료, 요양, 주거 등 포괄한 부산형 통합돌봄 체계구축* 및 서비스 제공

* 市 특화기관 활용한 지역완결형 의료·돌봄서비스 제공 체계

□ 세부 추진사항(4대 핵심전략 및 주요 추진과제)

○ **부산형 통합돌봄 시행기반 조성**

- **(부산형 지역계획 수립)** 市 특성을 반영한 부산형 통합돌봄 마스터 플랜 수립

- **(통합지원협의체 운영)** 보건의료, 사회복지 등 민·관 협력 기반의 심의·자문 기구 구성·운영
- **(민원대응 체계)** 제도 시행 초기 혼선 방지 위한 시-구·군-전문기관 간 대응체계 구축

○ **부산형 통합돌봄 협력체계 구축**

- **(광역 돌봄생태계 조성)** 보건의료, 요양, 주거 등 포괄적 협력체계 구축 및 수평적 협업 강화
- **(지역사회 중심 돌봄체계 구축)** 市 특화기관 활용, 지역완결형 의료·돌봄서비스 제공
  ▹ **(지역완결형 의료)** 예방-관리-치료까지 대상자 건강상태에 따른 맞춤형 건강·의료서비스 제공
  ▹ **(지역밀착형 돌봄)** 발굴-연계·지원-관리까지 기관별 역할 분담으로 빈틈없는 돌봄서비스 제공
- **(보건의료 분야 협력강화)** 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 확충(28개소), 퇴원환자 지역사회연계 협약 추진(53개 병원)

○ **지자체 역량강화 지원**

- **(맞춤형 교육 실시)** 구·군 및 읍·면·동 담당자 대상 기본·심화 역량강화 교육(연 22회)
- **(통합돌봄 컨설팅)** 구·군별 추진 사항 점검 및 우수사례 확산(연 2회)
- **(정례 점검회의)** 시-구·군 간 온라인 점검회의를 통한 현장 애로사항 소통

○ **부산형 통합돌봄 서비스 확대**

- **(대상 확대)** 우선관리대상자(약 15만명) + 돌봄이 필요한 시민 누구나
- **(소득 기준 완화)** 비용지원 대상 중위소득 100% 이하로 대폭 확대
- **(서비스 확충)** 전국 공통 서비스(30종) 연계, 특화서비스 8종 제공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시행 전	시행 후
○ 기관별 분절적 서비스 제공으로 대상자가 직접 찾아서 신청	○ **한번의 신청**으로 대상자 욕구에 맞는 보건의료, 요양, 주거 등 **돌봄서비스 통합제공** ○ (대상자 수) 50천명 (지원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市 특화서비스) 8종

- 구·군, 건보공단 및 의료기관 등 기관별 분절적 서비스 제공 및 대상자가 직접 찾아서 신청하는 구조로 대상자 욕구에 맞는 서비스 제공에 한계
- 공공, 민간, 의료, 복지 등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생태계 조성**으로 한번의 신청으로 대상자 욕구에 맞는 **보건의료, 요양, 주거 등 돌봄서비스 통합제공 체계 구축**

○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 기관별 분절적 서비스 제공 ▹돌봄사각지대, 사회적 입원 등 돌봄수요 증가 대응 한계	○ **부산형 통합돌봄** 추진으로 **지역완결형 의료·돌봄 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및 **보건의료, 요양, 주거 등 돌봄서비스 통합제공** ▹ 시민 누구나 사는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15분 돌봄도시 구축**

- 인구·사회구조 변화 등에 따른 돌봄수요 증가 대응에 한계
- 市 특화기관을 활용한 **지역완결형 의료·돌봄 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및 **보건의료, 요양, 주거 등 돌봄서비스 통합제공**으로 시민 누구나 사는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15분 돌봄도시"** 구축

▹ **(지역완결형 의료)** HAHA마을건강센터, 보건소, 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 연계

▹ **(지역밀착형 돌봄)** 인적안전망,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복지관 등 협력

□ 관련 조례 및 지침 개정계획

○ 부산광역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대비 부산광역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조례 전면 개정('25.12.10.)
- 보건복지부 발표 기본계획 등에 따라 조례 개정여부 검토

○ 2026년 부산형 통합돌봄 매뉴얼 제작·배포

-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라 보건복지부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 안내'에 근거하여 사업체계 일원화
- 기존 '부산, 함께돌봄' 사업이 의료·요양 통합돌봄 체계 내에서 효과적으로 기능하도록 지원
- 부산형 통합돌봄 사업 운영방향, 기준 및 절차 재정비를 통한 실행력 확보
- 사업 시행 후 구·군, 제공기관 의견수렴 등을 통한 매뉴얼 수정·보완

□ '26년 소요예산 ▷ 13,511백만원(국 5,925, 시 3,133 구·군 4,453)

○ '부산형 통합돌봄'사업(보조) : 9,000백만원(국 4,500, 시 2,250, 구군 2,250)

- 14개구 국비 300백만원, 2개구·군 국비 150백만원 지원

  * 보조비율 - 국비 50 : 시비 25 : 구비 25

○ '부산형 통합돌봄'사업(자체) : 1,636백만원(시 818, 구군 818)

- '26.1~3월 사업추진 시비 지원 518백만원
- 2개구·군(강서, 기장) 시비 150백만원씩 지원

  * 보조비율 - 시비 50 : 구군비 50

○ '부산형 통합돌봄'사업 체계 구축비 : 160백만원(국 80, 시 40, 구군 40)

- 16개 구·군 국비 80백만원 지원

  * 보조비율 - 국비 50 : 시비 25 : 구비 25

○ '부산형 통합돌봄'사업 인건비 : 2,690백만원(국 1,345, 구군 1,345)

- 16개 구·군 국비 1,345백만원 지원(6개월분)

  * 보조비율 - 국비 50 : 구·군비 50

○ 지역 의료·돌봄 연계 체계 구축 : 25백만원(시비)

-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광역 통합지원 체계 구축

□ 추진체계

○ **(부산광역시 ▹ 광역 컨트롤타워)** 市 지역계획 수립, 구·군 실행계획 조정 및 역량강화 등 구·군 지원, 광역단위 협력체계 구축 등

○ **(구·군 ▹ 지역 컨트롤타워)** 전담조직 설치, 인력확보 등 추진기반 마련, 지역 내 자원현황 파악 및 서비스메뉴 작성,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통합지원회의 운영, 모니터링 등

○ **(읍·면·동 ▹ 실행 창구)** '통합돌봄 창구' 운영, 통합돌봄사업 정보제공 및 안내, 대상자 발굴, 상담 및 신청 접수, 사전조사 실시, 통합판정조사 의뢰, 자체조사 실시,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등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 서비스 연계<특화>)**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른 서비스 신청, 연계, 제공여부 확인, 서비스 누락 방지 등

○ **(복지관(종합, 노인, 장애인) ▹ 대상자 사례관리<특화>)** 통합돌봄 대상자 사례관리 수행, 퇴원환자 대상 일상생활복귀 지원, 1인가구 등 관계맺기 통한 사회적 고립 방지

○ **(마을건강센터 ▹ 지역사회 건강관리·연계 거점<특화>)** 건강측정, 상담 등 서비스 제공,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운영, 보건소 사업 연계

○ **(보건소 ▹ 지역 내 보건의료, 건강관리 총괄)** 구·군 통합돌봄 지역계획 참여, 대상자 발굴, 연계, 모니터링 지원, 통합지원회의 참석 등

○ **(통합지원 관련기관 ▹ 서비스 제공기관)** 대상자 상담 및 발굴,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제공, 대상자 모니터링 등

○ **전문기관**

▹ **(사회서비스원)** 정책 연구, 매뉴얼 개발, 서비스 품질 관리

▹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데이터 기반 대상자 발굴, 통합판정 조사 지원

▹ **(국민연금공단)** 장애인 종합판정 및 발굴 지원

□ 추진일정

○ '26. 3.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 '26. 3. 부산형 통합돌봄 실행계획 및 매뉴얼 알림

○ ’26. 4. 부산형 통합돌봄 매뉴얼 수정·보완

○ ’26. 4. 부산형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MOU 체결

* 주거환경개선 - 부산광역자활센터, 방문운동 - 사)대한물리치료사협회 부산지부, 사)대한작업치료사협회 부산·울산·경남회

○ ’26. 4. 부산형 통합돌봄 구군 추진현황 점검

○ ’26. 4.~ 부산형 통합돌봄 유관기관 간담회 등 협력체계 구축

○ ’26. 4.~ 부산형 통합돌봄 실태조사 실시(부산복지실태조사 병행)

○ ’26. 4.~ 부산형 통합돌봄 역량강화 교육(구군, 읍면동 등 대상)

○ ’26. 5. 부산형 통합돌봄 추진 실무간담회*

* 구군, 읍면동, 전문기관 등

○ ’26. 7.~ 부산형 통합돌봄 지역계획 수립

○ ’26. 10.~ 부산형 통합돌봄 구군 컨설팅

□ 홍보계획

○ **(추진방향)** 온라인 및 오프라인 병행 홍보로 정보 접근경로 다각화, 지속적·단계적 홍보를 통한 대시민 인지도 확산

○ **(추진방식)** 시기별 단계적 추진

컨텐츠 제작 및 전달체계 구축	➡	집중홍보기간 지정 · 운영	➡	지속적 · 단계적 홍보
'26. 3. 11.(수) ~ 3. 20.(금)		'26. 3. 23.(월) ~ 4. 24.(금)		'26. 4. 27.(월) ~

○ **(홍보 컨텐츠 제작 및 체계 구축)** '26. 3. 11.(수) ~ 3. 20.(금)

- 홍보영상, 리플릿 등 홍보 컨텐츠 제작
  - ‘부산형 통합돌봄 비전선포식’ 메이킹 필름 등 활용 홍보영상 제작
  - 복지부 리플릿 활용 ‘부산형 통합돌봄’ 홍보물 제작
  - 구·군 현수막 일제 게시를 위한 현수막 시안 제작
- 서비스 제공기관, 병원 등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홍보체계 구축

○ **(집중홍보기간 지정·운영)** '26. 3. 23.(월) ~ 4. 24.(금)

- **(온라인 홍보)**
  - 시 SNS(부산튜브, 비비빅 등) 활용, 사업시행 중심 홍보

· 시 누리집 활용, 사업 정보제공 중심 홍보(메뉴 개설 및 배너 연동)

- **(오프라인 홍보)**

· 홍보매체(옥외전광판, 버스안내기 등) 활용 다중이용시설 집중홍보

· 서비스 제공기관, 병원 등 유관기관 내 리플릿 등 홍보물 비치

· 구·군 현수막 게시 및 읍·면·동 '통합돌봄 창구' 설치

· 돌봄 활동가,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인적 네트워크 활용 홍보

· 정례 반상회 홍보자료 게재

- **(언론 홍보)**

· TV, 라디오 등 언론 인터뷰, 지역신문 게재 등

○ **(지속적·단계적 홍보)** '26. 4. 27.(월) ~

- 사업 시행, 정보 제공 중심 → 우수 사례 소개 중심

▷ 대시민 인지도 확산 및 정책공감대 형성

5-5 통합돌봄 연계 세대통합 케어-브릿지 노인일자리 창출

주관부서	사회복지국 노인복지과	협조기관	구·군,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담당자	조현선 주무관	연락처	051-888-3297

□ 추진배경

○ 부산은 특·광역시 중 고령인구 비중이 가장 높고, 1인 가구 중 60세 이상 비중이 43%로 역대 최고에 달하는 등 **돌봄 수요가 계속해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

○ 특히 올해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등 국가 정책 변화와 지역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기존 **'환경정비' 중심 공익활동 일자리를 '지속 가능한 돌봄' 일자리로 다양화 필요**

⇒ **부산시민 4명 중 1명이 노인! 인구변화·지역수요 대응 노인일자리 패러다임 대전환**

□ 정책비전 ➡ 리 : 본 🎀 프로젝트

노년의 **재도약**(Re-Born)과 이웃·세대 간 **연결**(Ribbon)의 의미를 함께 담아,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을 만들기 위한 '돌봄 중심 노인일자리'로 대전환

☞ **노인일자리를 단순 소득 보전 수단을 넘어,**
돌봄 · 관계 · 존엄을 회복하는 도시 핵심 정책으로 재정의

□ 세부 추진사항

○ 추진방향 : **'환경정비' 중심 공익활동을 '지속가능한 돌봄' 일자리로 다양화**

○ 목 표 : **세대통합 케어-브릿지 노인일자리 1만 개 창출**

노인	아동	고독사	장애인	취약계층	계
5,290	4,010	427	949	457	**11,133**

○ 대 상 : 60세 이상 구직자

○ 내 용 : 내편돌보미*로 파견되어, **신체 건강 + 정신 건강 + 사회적 관계 + 일상생활의 균형**을 모두 아우르는 부산형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

* **내** 집 가까이에서 **편**하게! 나의 일상을 돌봐주는 파트너! 내편~돌보미

○ 지원대상 : 돌봄이 필요한 부산시민 누구나

○ 수행기관 : 78개소(시니어클럽,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등)

○ 현장 모니터링, 정책소통창구(간담회, 만족도 조사 등) 운영 등



<Before- 환경정비 공익활동>



<After- 내편돌보미 노노케어>

챗GPT 생성이미지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시행 전	시행 후
○ **환경정비 중심** 공익활동 일자리 지원 (환경정비 일자리 지속 증가 추세)	○ **지속가능한 돌봄 일자리로 다양화** - **케어-브릿지 노인일자리 1만 개 이상 창출** ▹ 전년대비 노인일자리 사업량 총 5,499개 증가하여 돌봄 일자리 3,442개 신규·확대 창출(62%)
○ (신규사업)	○ 부산형 **세대통합 돌봄 일자리 2개 이상 신규 발굴·추진**(수행기관 등 협업)

○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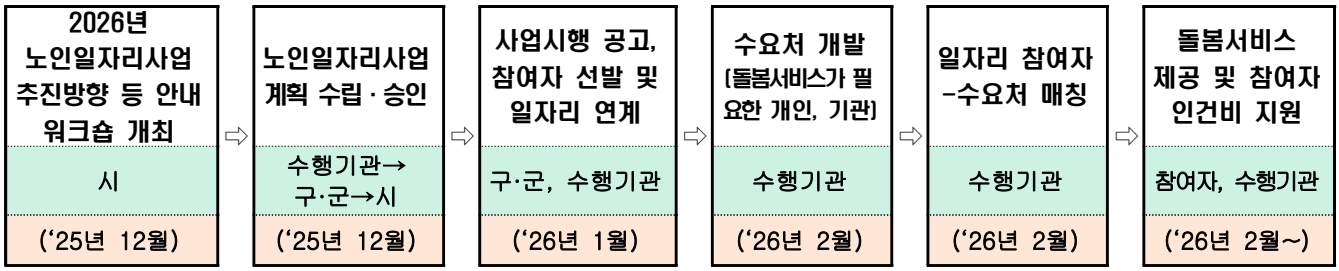
시행 전	시행 후
○ 단순 노동 일자리 창출 - 단순 소득보전 수단으로 전락	○ 역량활용 + 세대통합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지역사회 문제 해결형 도시 핵심 정책으로 재정의 - 동일 예산 투입 대비 정책 효과 2배로
○ 돌봄 수요 대응 애로, 안부확인·말벗 위주 돌봄서비스 제공 - (대상) 주로 65세 이상 어르신 - (내용) 안부 확인, 말벗 제공 중심	○ 돌봄 수요 적극 대응, 다양한 돌봄 욕구에 맞춰 돌봄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 - (대상) 돌봄이 필요한 부산시민 누구나 - (내용) 신체·정신 건강, 일상생활 등 통합지원
○ 시니어=보호의 대상, 노인일자리=시간 때우는 일자리, 예산낭비 등 부정적 인식	○ 시니어=사회적 자산, 노인일자리=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을 위한 일자리를 넘어 시민복지로 연결되는 지역사회 문제 예방·해결 정책! 긍정적 인식 전환

□ ’26년 소요예산

○ 595억원(국비 297, 시비 149, 구·군비 149)

□ 추진체계

○ 절차개요



○기관별 역할

기관	구분	주요내용
부산광역시	부산 노인일자리사업 추진방향 및 추진전략 수립, 사업총괄	① 부산 노인일자리사업 총괄계획 수립·시행 (정책비전(리본 프로젝트) 및 케어-브릿지 일자리 기획) ② 케어-브릿지 노인일자리사업 계획 승인 ③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행정 지원 ④ 사업계획 승인, 추진현황 모니터링 ⑤ 신규 노인일자리사업 발굴·사업화 추진·관리 등
자치구군	사업시행 공고, 사업량 배정	① 수행기관 선정, 수행기관별 프로그램 및 사업량 배정 ② 사업시행 공고, 사업 추진현황 모니터링 등
수행기관	사업계획 수립·시행	① 케어-브릿지 노인일자리사업 계획 수립·시행 ② 참여자 모집·선발, 수요처 개발, 참여자-수요처 매칭 ③ 참여자 출결·돌봄활동 관리, 시스템 상 실적 등록 ④ 참여자 월별 인건비 지원, 노인일자리 만족도 조사 ⑤ 신규 노인일자리사업 발굴·사업화 추진·관리 등

□ 추진일정

○ ’25. 11. ~ 12. 케어-브릿지 노인일자리사업 기획 및 사업화 준비, 노인일자리 워크숍 개최(구·군, 수행기관 참석, ‘26년 추진방향 등 안내)

○ ’25. 12. 사업계획서 제출 및 심사·승인

○ ’25. 12. ~ ’26. 2. 사업시행 공고, 참여자 모집·선발, 수요처 개발

○ ’26. 3. 리본 프로젝트 선포 및 1만 내편돌보미 발대식, 업무간담회 개최

○ ’26. 3.~ 12. 돌봄서비스 제공, 인건비 지급, 사업 모니터링, 만족도 조사 등

□ 홍보계획

○ 홍보내용: 케어-브릿지 노인일자리사업 홍보

○ 홍보방법

- (3월) 리본 프로젝트 선포 및 1만 내편돌보미 발대식 개최로 대대적 홍보
- (4월~) 시·구군·수행기관 누리집, 블로그 등을 통해 보도자료 배포, 홍보영상 제작·배포 등

5-6 존엄한 생애말기돌봄 지원 강화

주관부서	시민건강국 건강정책과	협조기관	부산시 호스피스완화케어센터 부산권역 호스피스센터, 구군보건소, 의료기관등
담당자	김자연 주무관	연락처	051-888-3401

□ 추진배경

○ 부산의 고령인구 비중은 25.5%로 광역시 중 최고치이며, 암·심혈관·퇴행성 질환 등 만성·복합 질환 생애 말기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고령 1인 가구(23.7%) 및 노인 부부 가구(24.3%) 확대로 생애 말기 시 가족 내 자원이 부족하여 사회적 고립 위험 및 돌봄 부담이 가중됨.

○ 보건소 중심의 생애 말기 돌봄 모델 구축·운영이 필요함.

□ 세부 추진사항

○ 보건소 중심 생애말기 돌봄 전달체계 구축·운영

- 보건소·센터·유관기관 간 역할을 명확히 하고 부산형 호스피스·완화케어 표준 운영 모델 확립·운영
- 대상자의 중증도(경증·중등도·중증)에 기반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위기 상황 대응을 위한 '24시간 On-Call' 체계 운영

○ 대상자 발굴 및 사별 가족 지원 강화

- 일반 시민 상담 활성화 및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연계를 통한 생애 말기 대상자 조기 발굴
- 사별 전·후 가족을 포괄하는 돌봄(사별편지, 집단 프로그램 등) 제공으로 심리 사회적 회복 지원

○ 지역사회 거버넌스 및 전문성 제고

- 생애말기지역협의체 운영(연 2~4회) 및 의료·복지·요양기관과의 MOU 확대를 통한 자원 연계 강화
- 종사자(간호사, 사회복지사) 역량 강화 교육 및 시민 대상 웰다잉(기본·심화) 인식 개선 교육 실시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시행 전	시행 후
○ 현황 및 문제점 - 의료, 요양, 복지 서비스 간 연계 및 조정 기전이 결여 - 퇴원 후 지역사회 내 연속적 돌봄 및 사별 가족 지원 공백 발생 ○ 운영 및 협력 체계 - 보건소 팀 회의 16회 ○ 생애말기 돌봄 서비스 - 방문 서비스 14,826회 ○ 웰다잉 인식 및 연명의료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937건	○ 분절된 서비스를 유기적인 협력 체계로 통합하여 서비스 간 연계 및 조정 기전을 강화 ○ 지역사회 중심으로 돌봄 구조를 전환하고, 24시간 대응 및 사별 관리 체계를 통해 퇴원 후 돌봄 공백을 해소 ○ 운영 및 협력 체계 - 보건소 팀 회의 50회 ○ 생애말기 돌봄 서비스 - 방문 서비스 15,400회 ○ 웰다잉 인식 및 연명의료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800건

○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 의료, 요양, 복지 서비스가 각 제도(연명의료결정법,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별로 분절되어 있어 서비스 간 연계 및 조정 기전이 결여됨. ○ 호스피스 서비스가 여전히 병원 중심에 치중되어 있어, 퇴원 후 지역사회 내 연속적 돌봄 및 사별 가족 지원에 공백이 발생함.	○ 병원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 돌봄으로의 구조적 전환 및 부산형 돌봄 전달체계 구축·운영 ○ 돌봄 단절 및 불필요한 응급실 이용 감소를 통한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 ○ 사별가족 돌봄의 공공 영역 확장 및 시민의 자기결정권 강화를 통한 존엄한 생애말기 문화 정착

□ 관련 조례 및 지침 개정계획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 부산광역시 호스피스·완화케어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웰다잉 문화 조성 조례

□ '26년 소요예산

○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780,000천원

○ 사업 운영비 150,000천원

○ 여비 및 업무추진비 60,000천원

○ 예비비 및 기타 10,000천원

□ 추진체계

○ 부산광역시: 사업 총괄 및 재정 지원

○ 16개 구 · 군 보건소: 전담 간호사 파견 및 운영 협조, 대상자 연계 및 홍보

○ 호스피스완화케어센터: 사업 수행, 유관기관 연계, 지역기반 방문 케어, 인력 교육 및 연구

○ 유관기관: 완화의료전문기관(의료 지원), 복지·요양기관(복합 서비스 연계)

□ 추진일정

○ 1월~12월: 지역사회 대상자 등록 및 상시 방문 케어, 24시간 On-Call 운영

○ 3월, 9월: 생애말기지역 협의체 정례 회의 개최

○ 4월~11월: 웰다잉 교육 및 사별 가족 집단 프로그램 집중 운영

○ 7월: 호스피스 및 웰다잉 시민 인식 조사 실시

○ 12월: 사업 성과 평가 및 연차 보고서 발간

□ 홍보계획

○ 다각적 매체 활용: 블로그, SNS, 홈페이지 등 온라인 채널 홍보를 강화하고, 보도 자료 배포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대외 인지도를 제고

○ 체험형 인식 개선: 호스피스 인식 확산 캠페인(12회)과 시민 대상 학술세미나 및 웰다잉 교육(50회)을 통해 존엄한 생애말기 돌봄 문화를 정착

○ 맞춤형 정보 제공: 호스피스 가이드북, 리플릿, 연차보고서 등 인쇄물 15종을 제작·배포하여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유관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활성화

5-7 출산 가정 맞춤형 건강 돌봄 서비스 제공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주관부서	시민건강국 건강정책과	협조기관	산모신생아 제공기관, 교육기관, 구·군보건소 한국사회보장원
담당자	허만혜 주무관	연락처	051-888-3365

□ 추진배경

○ 출산 이후 산모의 신체 회복 및 신생아 돌봄에 대한 전문적 지원 수요 증가

- 핵가족화 및 맞벌이 증가로 산후 돌봄 공백 확대
- 산후 우울, 산모 건강 악화 등 산후 관리 미흡 문제 지속 발생

○ 저출생 문제 대응, 출산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 저출생 심화, 출산 양육에 대한 경제적 ·심리적 부담, 기피현상
- 초기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필요

□ 세부 추진사항

○ **소득과 상관없는 서비스 제공**

- 서비스를 신청하는 출산 가정(소득무관)을 대상으로 지원
- 출산 후 일정기간 동안 전문 건강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 및 신생아 돌봄 서비스 제공
- 다자녀, 취약계층 등 우선지원 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

○ **서비스 신청 및 이용 체계 운영**

- 보건소 및 온라인 시스템(정부24)을 통한 신청 접수 및 대상자 기준 선정
- 서비스 이용 전·후 절차 안내 및 이용 편의성 제고

○ **제공기관 관리 및 서비스 품질 제고**

-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관리 및 정기 평가 실시
- 건강관리사 교육 이수 및 자격 기준 준수 여부 점검
- 이용자 만족도 조사 및 결과 환류를 통한 서비스 품질 개선

○ **교육기관 지정 및 관리 감독**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제공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14개소 지정
- 표준 교육과정에 따른 이론·실습 교육 운영 점검, 외부출장교육 승인 등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시행 전	시행 후
○(60%) 건강관리서비스 지원율 65% ○(40%) 이용자 만족도 80%	○(60%) 건강관리서비스 지원율 70% ○(40%) 이용자 만족도 80%

○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 산후 돌봄 공백 발생 및 가족 부담 증가 ○ 전문적인 산후관리 서비스 이용 기회 부족으로 건강관리 사각지대 발생 ○ 출산초기 양육 부담으로 인한 심리적 경제적 부담 가중 ○ 서비스제공기준 및 품질관리 미흡으로 이용만족도 편차 발생	○ 전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통해 산모의 신속한 건강 회복 및 신생아 돌봄 지원 강화 ○ 가정 방문형 서비스 접근성 향상 ○ 표준화된 서비스 제공 및 지속적인 품질 관리로 이용자 만족도 제고 ○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을 통한 저출생 대응 기반 마련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통해 출산가정의 초기부담을 완화하고 건강한 출산·양육 환경 조성에 기여

□ 관련 조례 및 지침 개정계획

○ 해당 없음

□ '26년 소요예산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전환)**(중위소득 150%이하, 둘째아 지원)

- 금 17,062,072천원[시비 14,502,761천원(85%), 구군비 2,559,311천원(15%)]
- 건강관리 제공 인력 인건비 지급 (각 구군 전자바우처 시스템 예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자체)**(중위소득 150%초과, 첫째아 지원)

- 금 800,000천원[시비 14,502,761천원(50%), 구군비 2,559,311천원(15%)]

※ 2021. 9월부터 시행 (시장 공약사업)

□ 추진체계

구분	내용
부산광역시	사업 총괄 및 지침 수립, 예산 지원, 사업점검 및 평가
구·군 보건소	관내 제공기관 관리·지도·감독, 서비스 신청·배정, 이용자 불편 사항 처리
제공기관 (50개소)	건강관리사 채용·교육·배치, 서비스 품질관리, 이용자 만족도 관리
교육기관 (14개소)	부산광역시 지정 14개소 (신규자 60시간 교육, 경력자 40시간 이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예탁금 보전 및 관리, 전자바우처 시스템 운영

□ 추진일정

○ ’26. 1.~2. : 사업계획 수립 및 지침 배부

○ ’26. 1.~12.: 사업 추진 및 대상자 지원

○ ’26. 연중 : 교육기관, 제공기관 점검(연2회) 및 현장 지도

○ ’26. 12. : 사업성과 평가

□ 홍보계획

○ 부산시 및 각 구군 홈페이지 홍보

○ 산부인과, 조리원 등 연계 홍보

○ 대상자 맞춤형 홍보 강화, 출산 예정 가정 대상 사전 안내
보건소 방문 및 전화 상담 시 적극 홍보

5-8 AI디지털배움터 운영

주관부서	행정자치국 정보화정책과	협조기관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담당자	모진철 주무관	연락처	051-888-2354

□ 추진배경

○ AI 등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확산으로 AI·디지털 활용역량 격차 심화

-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AI·디지털 활용능력 부족으로 정보 접근 및 사회참여 제한

○ 기존 디지털 교육은 기초 중심으로 운영되어 AI 활용 교육이 미흡

- 실생활 및 경제활동과 연계된 AI 이해·활용 역량 강화 필요

○ 전 시민 대상 AI 활용 교육 및 체험 중심 교육환경 구축 필요

- 지역 기반 거점센터 확대 및 찾아가는 교육 강화 요구

□ 세부 추진사항

○ AI디지털배움터 운영체계 구축(거점+파견+체험)

- **(거점센터)** '26년 2개소 추가 조성으로 2개소 → 4개소* 확대 운영

  * 부산유라시아플랫폼, 부산도서관, 부산진우체국, 우1동 우체국

- **(파견교육)** 구·군 정보화교육장, 복지관, 경로당 등 찾아가는 현장 교육

- **(AI디지털체험존)** 구·군 17개소 + 찾아가는 에듀버스 운영

○ AI 중심 교육과정 확대 운영

- (기초) AI 이해, 윤리, 위험대처

- (활용) 생성형 AI 도구 활용, AI 기반 앱 활용

- (생활) 키오스크, 스마트폰 앱, 금융·피싱 예방

- (확장) 온라인 콘텐츠 제작(사진·영상 등)

※ AI 활용 역량 교육 비중 확대 및 단계별 교육 운영

○ 대상별 맞춤형 교육 운영

- (전 시민) AI 활용 중심 교육 확대
- (취약계층) 스마트폰·키오스크 등 생활밀착 교육 집중
- (지역맞춤) 구·군 수요 기반 교육 운영

○ 체험·상담 중심 교육환경 조성

- AI 기기 체험시설, 스마트폰 활용, 앱 사용법 등 상담소 운영
- 실습 기반 교육 및 즉시 활용 가능한 교육 제공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시행 전	시행 후
○ AI·디지털 교육 기회 제한 ○ AI 활용 교육 부족	○ 거점·체험·파견 통합 교육체계 구축 ○ AI 이해 및 활용 교육 확대

- 디지털 역량 향상도 24.5% 달성 ▹ 산출근거 : {(교육 후 – 교육 전 점수) / 14점} × 100
- 교육생 이수율 80% 달성 ▹ 산출근거 : (교육 이수자 / 교육 참가자) × 100
- 교육 만족도 80점 이상 달성 ▹ 산출근거 : 교육생 대상 설문조사

○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 디지털 격차 심화 ○ AI 활용 미흡	○ 디지털 포용사회 기반 구축 ○ 시민 AI 활용 역량 전반적 향상

-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성 및 사회참여 확대
- AI 활용 역량 강화를 통해 일상 및 업무 편의성 증대
- 체험 중심 교육 확산으로 실질적 활용능력 제고
- 지역 기반 AI·디지털 교육 생태계 구축

□ ’26년 소요예산

○ 총사업비 3,608,000천원 ▹ 국비(지특) 2,886,000천원, 시비 722,000천원

- AI디지털배움터 거점센터(4개소) 514,628천원
- AI디지털체험존(19개소) 866,895천원
- 찾아가는 파견교육 1,707,568천원, 사업관리비 등 518,909천원

□ 추진체계

○ (과기정통부/NIA*) 정책 총괄 및 가이드라인 제공

* (NIA)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대구 소재, AI·디지털 정책 수행 공공기관)

○ (부산시) 사업 총괄, 예산 확보·배분, 성과관리

○ (부산정보산업진흥원) 교육 운영 및 위탁 수행

○ (구·군) 교육 수요 발굴 및 현장 운영 지원

□ 추진일정

○ ‘26. 1~ 4월 : 위탁기관 협약체결 및 사업 발주

○ ‘26. 5~12월 : AI디지털배움터 운영

- 거점센터, 체험존, 찾아가는 교육 및 에듀버스 운영

○ ‘26. 12월 : 성과평가 및 결과보고

□ 홍보계획

○ 온·오프라인 홍보 병행

- AI디지털배움터 플랫폼, 시·구군 홈페이지 및 SNS 활용

○ 현장 중심 홍보 강화

- 주민센터, 복지관 등 지역 거점 홍보, 교육 참여자 대상 맞춤형 안내

○ 사업 참여 확대 유도

- AI 교육 프로그램 집중 홍보 및 체험형 이벤트 운영

5-9 동백패스와 K-패스 연계 개선

주관부서	교통혁신국 교통혁신과	협조기관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한국교통안전공단
담당자	박준영 주무관	연락처	051-888-3906

□ 추진배경

○ 정부 정책 변경에 따른 연계 조정으로, **두 제도간 중복 및 시민혼란 방지**

○ K패스와 동백패스 융합으로 **더 폭넓은 혜택 제공,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 사회보장위원회 협의에 따라 교통약자 돌봄 강화 및 **중복 지원 방지**

□ 세부 추진사항

○「동백패스와 K-패스 연계 개선」개요

- (시행시기) ’26. 4. 1. ※ 홍보 개시일: ’26. 3. 4.(수)
- (개선혜택) 부산 대중교통 이용금액, **월 4만 5천원 초과 분 무제한 환급**
- (이용방법) 동백전 교통카드 발급, 동백패스와 K패스 **동시 회원가입** 필수
- (환급방법) 월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해 동백패스와 K-패스의 **환급금을 자동으로 계산**하여 이용자에게 유리한 금액으로 자동 환급

○ 연계 개선(안)

- **시민 혜택 늘리고, 재정 절감 가능한 협의안 제시** ‣ 대광위, 사회보장위(협의 완료)

(기 존) K패스(정률제) 환급금과 **동백패스** 환급금 비교 후 **큰 금액 환급**

(변 경) “K패스 정액제**(모두의 카드)**”, “K패스 정률제” **환급액 크기에 따라 K패스-동백 환급방식 다름**

환급액 비교	**(변 경) 환급방식**
모두의 카드 < K패스(정률제)	**현행 동일** ※ K패스(정률제)와 동백패스 환급금 비교 큰 금액 환급
모두의 카드 >= K패스(정률제)	**① K패스 先지급**, ② 환급 기준금액 **차액(5.5-4.5만원) 동백전 지급**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시행 전	시행 후
○ 동백패스 가입자 85만명	○ 동백패스 가입자 90만명

○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 동백패스 최초 시행 이후 지속적 고도화 하여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확대. 다만, 시비 예산 증가에 따른 부담으로 지속가능성 확보가 중요 과제	○ 시민 혜택 확대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 두 제도간 중복 및 시민 혼란 방지 ○ 정부 정책 대응한 적극 협의로 市 재정 절감 ○ 동백패스 지속 개선으로 도시 이미지 제고

□ '26년 소요예산

○ 대중교통 통합할인제(동백패스 + K패스) 시비 1,100억원

* 동백패스(시비), K패스(국비:시비 = 50:50)

* 산출근거: 매년 가입자 증가하고 환급 예산이 증가하는 구조이나, 연계 개선에 따라 재정 절감으로 전년도 수준 소요 추정 (※25년도 예산(억원) 동백패스 899, K패스: 225)

□ 추진체계

○ (부산시) 동백패스와 K패스 연계 개선 시스템 개발 및 동백패스 운영

○ (대광위) 동백패스와 K패스 연계 개선 시스템 개발

○ (K패스 운영 용역업체 및 한국교통안전공단) K패스 운영 및 환급금 정산

□ 추진일정

○ '25. 12. 정부 K패스 정액제(명칭: 모두의 카드) **최종안 확정**·발표

○ '25. 1. **연계안을 제시**하여 **협의완료**(국토부 대광위, 사회보장위원회)

○ '25.1.~3. 동백패스 - K패스(모두의 카드) **연계 개선 시스템* 개발**

* K패스 이용 데이터 수집·관리 시스템, 카드사 정산·환급시스템 개발 등

○ '26. 3. **대시민 홍보** 개시 및 시스템 연계 개선 **적용 테스트**

○ '26. 4. 동백패스 - K패스(모두의 카드) 연계 개선 **대시민 서비스 시행**

○ '26. 4~ 모니터링**(상시)**, 재정절감 효과 분석 및 피드백**(분기별)**

□ 홍보계획

○ **(대중교통)** 버스안내기 영상 송출, 시내버스 안내방송, 도시철도 공익게시판 도시철도 역사 내 행선안내기 등

○ **(온 라 인)** 市 SNS, 유투브, 인플루언서 광고, 별도 온라인 안내 페이지

○ **(오프라인)** 홍보 캠페인, 구·군(주민센터) 협조 홍보, 옥외전광판 등

○ **(기 타)** 동백전 앱 팝업 공지, 신문 광고, TV방송 광고, 인터뷰 등

5-10 7분 화재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출동환경 개선

주관부서	소방재난본부 방호조사과	협조기관	구·군
담당자	소방교 김강현	연락처	051-760-3055

□ 추진배경

○ 도심 외곽지역 및 도심 내 정체지역에 의한 **7분 도착률 지연**

- 차량 등록수 매년 증가 및 교통량 증가로 차량정체 다수

○ 불법 주정차 및 좁은 골목길 등 **소방차 진입곤란지역 다수 존재**

- '25년 소방차 7분이내 화재현장 도착률* 86.8% 달성하였으나 강서, 기장과 같은 외곽지역 평균 도착률은 60%대로 여전히 부족함

* 화재 현장 7분 이내 도착률('18년 도입) : 구획건물의 화재 최성기 단계 도달시간(8분)을 토대로함

□ 세부 추진사항

○ **'26년 소방차 화재현장 7분이내 도착률 상향 목표**

- 소방차 진입곤란지역 해소('25년 108개소)
- 진입곤란지역 등 비상소화장치 보강으로 자율진화체계 구축
- 공동주택 소방차 노면 유도선(표지판) 설치 추진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시행 전	시행 후
○ 대규모 공동주택 등 화재 출동 시 목표지점 파악 곤란	○ 공동주택 유도표시 24개소 설치 (소방서별 2개소 이상)
○ 불법주정차, 도로환경(좁은골목) 등 소방차 진입곤란지역 다소 존재	○ 소방차량 진입곤란지역 2개소 이상 해소
○ 화재안전 사각지대(진입곤란지역 등)에 대한 자율진화체계 구축 필요	○ 진입곤란지역 내 비상소화장치 설치(6개소)

○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 소방차 진입곤란지역 다수(108개소) ○ 외곽지역 등 출동시간 지연	○ 7분내 도착률 향상 및 진입곤란지역 감소 ○ 화재피해(인명·재산) 감소

□ '26년 소요예산

○ 비상소화장치 설치 60,000천원(1개소당 1천만원)

□ 추진체계

○ 노면유도표시 설치 협의(건축심의) → 부산시청 건축기획과

○ 불법 주·정차 단속, 긴급차통행로 노면 표시 등 → 각 구청 교통과

□ 추진일정

○ 「2026년 화재 현장 골든타임 확보 종합대책」 수립('26. 2.)

- 진입곤란지역 2개소 해소 : 연 중
- 공동주택 내 노면 유도표시 24개소 설치 : 연 중

○「2026년 소방용수시설 운용 기본계획」 수립('26. 2.)

- 진입곤란지역 내 비상소화장치 6개소 설치 : 연 중

□ 홍보계획

○ 불법 주·정차 단속 및 소방출동로 확보 훈련 : 연중

○ 원활한 소방출동을 위해 TBS교통방송(소방차 길터주기) 라디오 홍보 : 연중

5-11 미술관 기반 지역 연계 문화돌봄 프로그램 운영 확대

주관부서	부산현대미술관	협조기관	부산광역치매센터, 치매안심센터
담당자	김성희 학예연구사	연락처	051-220-7341

□ 추진배경

○ **고령화 심화 및 치매 환자 증가**에 따라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관계 회복**을 위한 **문화 기반 돌봄 수요 증가**

- 기존 치매 대상 서비스는 의료·복지 중심으로 운영되어 감각·정서 중심 경험 제공에 한계 존재

○ 미술관 교육 프로그램의 접근성 제한

- 거동이 불편하거나 기관 중심 생활을 하는 대상자의 경우 미술관 방문이 어려워 문화 향유 기회 부족

○ 공공기관 간 협력 기반 문화복지 모델 필요

- 미술관 - 부산광역치매센터 간 연계 운영을 통해 지역 기반 문화돌봄 체계 구축 필요

□ 세부 추진사항

○ **미술관 - 부산광역치매센터 연계 운영 모델 구축**

- 미술관 방문 교육과 치매안심센터 방문 교육을 연계한 순환형 프로그램 운영
- 참여자의 이동 부담을 고려한 이원화 운영 체계 구축

○ 감각 중심 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색, 촉각, 자연, 신체 활동 중심의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 구성
- 기억 회상이 아닌 현재 감각 경험 중심 활동으로 정서 안정 유도

○ 지역 협력 기반 운영 확대

- 치매안심센터와 협력하여 참여자 모집, 이동 지원, 사후 활동 연계 운영
- 프로그램 종료 후 센터 내 반복 운영 가능 구조 마련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시행 전	시행 후
○ 치매 환자 대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부족 ○ 미술관 방문 중심 운영으로 참여 대상 제한	○ 프로그램 운영 횟수: 4회기 이상 ○ 참여 인원: 회당 8~10명, 총 200명 이상 ○ 참여기관: 치매안심센터 5개소 이상 연계 ○ 산출근거: 회기별 참여 인원

- 회당 평균 8~10명 × 연간 운영 횟수 기준
- 참여기관 확대에 따른 누적 참여 인원 산정

○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 단편적·일회성 문화체험 중심 운영 ○ 문화 향유 기회 제한 ○ 기관 간 협력 체계 미흡 ○ 정서 지원 프로그램 부족	○ 지속 가능한 문화돌봄 프로그램 운영 체계 구축 ○ 치매 환자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 및 접근성 개선 ○ 미술관–치매안심센터 간 협력 기반 강화 ○ 감각 중심 활동을 통한 정서적 안정 및 참여도 향상

- 공공기관 협력을 통한 지역 기반 문화돌봄 모델 정착
- 프로그램 표준화 및 확산을 통한 지속 운영 기반 마련

□ '26년 소요예산

○ 소요예산: 금15,100,000원(금일천오백십만원)

- 강사비 및 원고료 8,100,000원
- 교육 콘텐츠 및 홍보물 제작, 물품 구입 등 7,000,000원

□ 추진체계

○ 부산현대미술관

-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총괄
- 교육 콘텐츠 개발 및 현장 운영

○ 부산광역치매센터

- 프로그램 자문 및 운영 기준 제공
- 참여기관 협의 및 피드백

○ 치매안심센터

- 참여자 모집 및 관리
- 현장 지원 및 사후 활동 연계

□ 추진일정

○ 2026. 3월: 프로그램 기획 및 협력기관 협의

○ 2026. 4월: 강사 및 운영 인력 사전 교육

○ 2026. 5월 ~ 9월: 프로그램 운영

○ 2026. 10월: 결과 분석 및 개선안 도출

□ 홍보계획

○ 미술관 홈페이지 및 SNS 채널을 활용한 프로그램 홍보

○ 치매안심센터 및 유관기관 대상 참여 안내

○ 전시 관람객 대상 현장 안내 및 홍보물 비치

6. 자율과 혁신을 통한 지역균형성장 체계 구축

6-1 지역 소재 스타트업 실리콘 밸리 진출 지원

주관부서	금융창업정책관 창업벤처담당관	협조기관	플러그앤플래이*, 부산창경
담당자	윤원재 주무관	연락처	051-888-4395

* Plug&Play :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 중심에 위치해 Google, Paypal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을 포함한 다수의 유니콘 기업을 육성한 글로벌 최대 액셀러레이터

□ 추진배경

○ 플러그앤플래이(Plug&Play)와 협업을 통해 지역 스타트업의 글로벌 협업·성장 기회 제공

- 지역 스타트업의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실리콘밸리 현지 밋업·네트워킹 프로그램 참여 →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과 투자 유치 지원

* 지역 스타트업의 경우 전국 단위 글로벌 진출 지원사업에서 다소 소외되고 있어 지역균형성장 차원에서 市 자체 글로벌 진출 지원체계 마련 필요

□ 세부 추진사항

가. 참여 스타트업 모집 및 홍보

1) 모집기간 : 2026. 2. 23.(월) ~ 3. 6.(금) ▶ 2주

2) 모집대상 : 부산 소재(본점 또는 지사) 창업 7년 이내 스타트업

3) 모집방법 : 부산창업포털 내 신청서 및 제출서류 접수

나. 참여 스타트업 선정

1) 평가기간 : 2026. 3. 9.(월) ~ 3. 20.(일) ▶ 2주

가) 서류평가(1차) : 2026 3. 9.(월) ~ 13.(금) 중 1일

나) 발표평가(2차) : 2026 3. 16.(월) ~ 20.(금) 중 2일

2) 평가방법

가) 서류평가를 통해 고득점 순으로 20개사(2배수) 내외 1차 선정 이후 영어인터뷰를 포함한 발표평가를 통해 고득점 순으로 최종 10개사 선정

나) 사업성(20점), 기술성(25점), 시장성(25점), 글로벌 사업성(30점) 등 종합적 검토

다. 참여 스타트업 온보딩 및 사전 설문조사

1) 운영기간 : 2026. 4. 1.(수) ~ 10.(금) ▶ 1주

2) 주요내용 : 참여 스타트업별 사업 현황, 글로벌 진출 단계, 투자 유치 이력 및 니즈파악을 위한 사전 설문조사 실시 등

라. (온라인AC)* 오리엔테이션 및 1:1 인테이크 인터뷰

1) 운영기간 : 2026. 4. 13.(월) ~ 16.(목) ▶ 1주
   * 온라인 AC 기간 동안 매주 금요일은 커스터마이징 오피스아워 진행

2) 주요내용 : 스타트업 오리엔테이션 및 프로그램 안내 및 스타트업 인터뷰를 통한 개별 프로그램 및 목표 설정

마. (온라인AC) 실리콘밸리 마인드셋 & 제품 전략

1) 운영기간 : 2026. 4. 20.(월) ~ 23.(목) ▶ 1주

2) 주요내용 : 가치 제안(Value Proposition) 워크숍, 미국 시장 확장을 위한 GTM 전략, 세일즈 전략 워크숍 등

바. (온라인AC) 킥오프 및 Go-To-Market 전략

1) 운영기간 : 2026. 4. 27.(월) ~ 30.(목) ▶ 1주

2) 주요내용 : 미국 내 비즈니스 설립 및 이민법 등 인사이트 공유, 실리콘밸리 투자 환경 이해 및 피칭 발표 스킬(바디랭기지) 워크숍

사. (오프라인) Plug&Play Summit* 참여 및 네트워킹

1) 운영기간 : 2026. 5. 18.(월) ~ 22.(금) ▶ 1주

4) 주요내용 : Plug&Play Summit 기간(5. 19. ~ 21.) 참여를 통한 관계자 밋업 및 네트워킹 진행, 선정 기업 대상 피칭 기회 제공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시행 전	시행 후
○ 현황 및 문제점 - 실리콘 밸리 진출 지역 스타트업 없음	○ 성과목표 - 실리콘 밸리 진출 지역 스타트업 10개사 지원

○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 지역 스타트업의 글로벌 기업과의 협업 기회 제공 한계 ○ 글로벌 투자사와의 밋업 기회 제한	○ 지역 스타트업의 글로벌 기업과의 협업으로 오픈이노베이션 기회 창출 ○ 실리콘 밸리 현지 투자사와의 대면 밋업으로 지역 스타트업의 투자 유치 기회 확대

- Plug & Play 글로벌 네트워크 및 Summit 연계로 지역 스타트업의 글로벌 기업·투자자와의 실질적 협업 및 투자 연계 기회 확대

□ '26년 소요예산

○ 지역 스타트업 실리콘 밸리 진출 지원 2.8억

□ 추진체계

구분	부산창경센터	Plug&Play
역할	사업 계획 및 홍보, 예산 관리 및 행정지원, 기업 모집 및 선정, 참여기업 성과 관리	사업 홍보 및 기업 관리, 온오프라인 액셀러레이팅, 서밋 운영 및 참여, 성과 관리 등

□ 추진일정

참여 스타트업 모집 및 선정	온보딩 및 사전 교육	오리엔테이션 및 1:1 인터뷰
· 프로그램 계획 수립 · 서류 및 발표평가 진행	· 맞춤형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방향 설정	· 프로그램 안내 · 개별 목표 설정 및 멘토링
2. 23.(월) ~ 3. 20.(일)	4. 1.(수) ~ 10.(금)	4. 13.(월) ~ 17.(금)

▶ ▶ ▼

Plug&Play Summit 참여	킥오프 및 Go-To-Market 전략	실리콘밸리 마인드셋 & 제품 전략
· 관계자 밋업 및 네트워킹 진행, 피칭기회 제공 · 현지 유명 기업 방문	· 미국 비즈니스 인사이트 공유 · 투자 환경 및 발표 스킬 워크숍 · B2B세일즈, GTM 오피스아워	· 가치 제안, 세일즈 전략 워크숍 · 피치덱 고도화 1:1 멘토링
5. 18.(월) ~ 22.(금)	4. 27.(월) ~ 5. 1.(금)	4. 20.(월) ~ 24.(금)

◀ ◀

□ 홍보계획

○ 참여기업 모집, 프로그램 홍보(SNS, 유튜브, 보도자료 배포) ▷ '26.2.

○ 기업 선정 결과 발표(SNS, 유튜브, 보도자료 배포) ▷ '26.4.

○ 현지 성과 및 참여기업 홍보(SNS, 유튜브, 보도자료 배포) ▷ '26.5.

6-2 AI · BC 융합 디지털금융 혁신생태계 구축

주관부서	금융창업정책관 금융블록체인담당관	협조기관	부산국제금융진흥원, 부산대학교
담당자	강치권 주무관	연락처	051-888-4212

❖ 새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국정과제(48번)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

○ (블록체인산업 지원 강화) **디지털자산 혁신 서비스**를 자유롭게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성장을 위한 지역 인프라를 확충**하여 블록체인 특구 실효성 제고 추진

□ 추진배경

○ (기술적·구조적 한계) 부산 블록체인 특구가 **실증 위주 성장**에 따른 **원천 기술 확보** 및 **기술 고도화**를 위한 **연구 역량**이 **부족**한 상황

※ **AI(인공지능)·BC(블록체인)** 기업 **기술적 난제 해결** 위한 「**전문 연구인력 현장 상주형 기술 거점**」 **필요**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추진 현황]

추진근거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사업목적	**블록체인 기술**의 응용산업과 관련한 **규제특례** 및 **실증·시범서비스**를 **지원**하여 시장출시 신속화 및 블록체인 시장 선도
사업기간	(1차) '19.~'21. (3차)'21.~'22. ※ (연장)'23.~'24. (임시)'25.~'27.
사 업 비	348억원(국200, 시86, 민62) ※ (1차)189억(국105, 시45, 민39), (3차)159억원(국95, 시41, 민23)

○ (AI·BC 기반 디지털금융 대전환 대응) AI의 급격한 발전으로 **금융분야**에서도 **AI·BC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금융 서비스**와 **보안기술** 요구 증대

※ ST(토큰증권), 양자보안 등 **디지털금융 환경의 대 전환 시대**에 걸맞는 **대응체계 마련**

○ (지역 인재 유출) **산·학 간 기술협력, 현장 기반 R&D 역량, 디지털 금융** 기업 수요 **실무형 인재 등 부족** 및 지역 인재의 **수도권 유출 우려**

※ **문현금융단지 내** 금융 관련 공공기관 및 관련 기업 **근무인력 10,000여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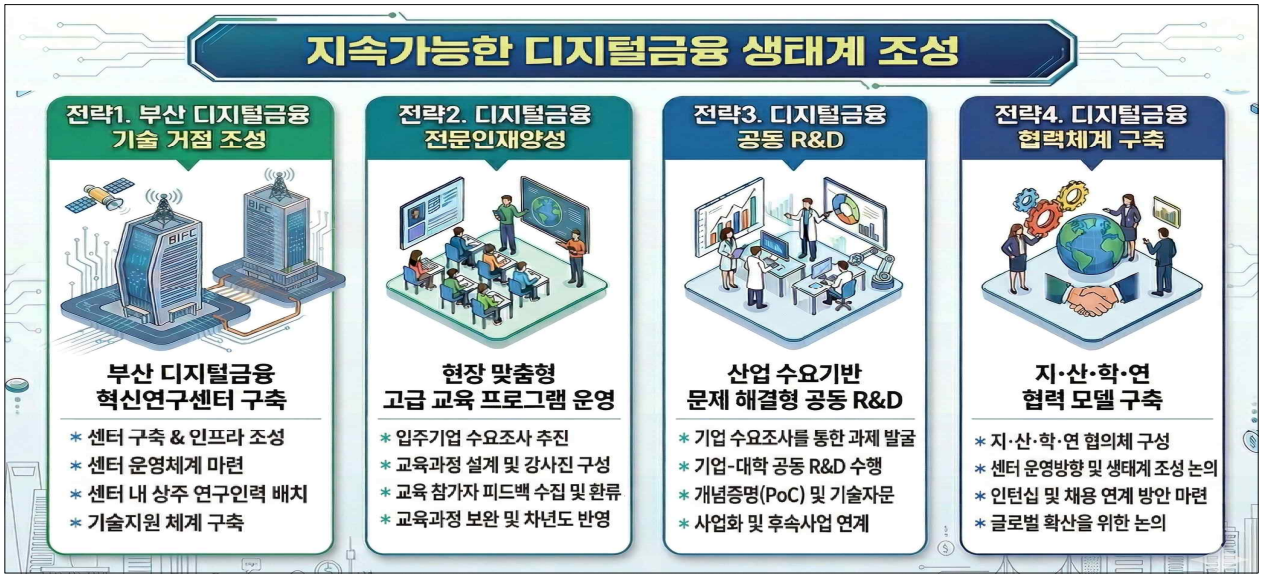
[문현금융단지 내 입주기관 및 근무인력 현황]

구 분	BIFC I(1단계, '14.8.)	BI CITY(2단계, '18.11.)	BIFC II(3단계, '25.12.)	개별 금융기관
규 모	지하 4층 / 지상 63층	지하 7층 / 지상 49·36층	지하 5층 / 지상 45층	-
근무인력	**약 3,500여 명**	**약 500여 명**	**약 4,000여 명 (예상)**	**약 1,500여 명**
주요특징	36개 금융기관 및 블록체인 기업 입주	핀테크 기업 입주 및 주거상업 복합 시설	지식산업센터 입주 및 디지털 금융 거점	기술보증기금, 한국은행 부산본부, 부산은행

□ 세부 추진사항

○ 사업기간 : (계속) 2026년 ~

○ 비전 및 추진전략



○ 주요 추진내용

- (현장 상주형 기술 거점 구축) BIFCⅡ 내에 「AI·BC 융합 디지털금융 혁신 연구센터*」 구축, 전문 연구진(교수, 석·박사 등) 상주

  * **AB-DIRC**(**A**I·**B**lockchain - **D**igital Finance **I**nnovation **R**&D **C**enter)

- (오픈캠퍼스형 고급 인재양성) **현업 밀착형** 심화 교육 과정 운영, **기업 수요 대응** AI·BC 융합 디지털금융 **전문 인재 양성**

- (AI · BC 융합 R&D 및 기술지원) 기업의 기술적 **병목현상 해결**을 위해 AI, 블록체인 등 융합기술 활용 **공동 R&D** 및 **개념증명(PoC)** 수행

- (지·산·학·연 협력체계 마련) **실무협의체** 운영, R&D과제 발굴, 입주기업 대상 정기 **수요조사** 실시, 교육 커리큘럼 반영, **취업 연계** 등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3개년)

시행 전	시행 후
○ **AI·BC 디지털금융 기술 거점 부재** ○ 디지털금융 **기술적 병목 해결**을 위한 **공동 연구 부재** ○ 급변하는 글로벌 디지털금융 시장 대응 **전문인력 부재** ○ 지·산·학·연 협의체 부재	○ **AI·BC 융합 디지털금융 혁신 연구센터 구축**('26) ○ **실무 역량**을 갖춘 **전문인력 양성** - 20명('26.) → 50명('27.) → 70명('28.) ○ **공동 연구개발(R&D) 및 기술자문** - 5건('26.) → 10건('27.) → 20건('28.) ○ 지·산·학·연 **실무협의체 구성**

○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 블록체인 특구 생태계의 구조적 한계 및 선순환 부재 ○ 기업 지원 기술 거점 부재 및 기술적 병목현상, 기술 개발 한계 ○ STO, 디지털자산 등 글로벌 환경 변화 대응 및 기술력 부족 ○ 대학 연구성과와 산업 현장 간 구조적 괴리, 지역 우수인재 역외 유출 우려	○ **AI·BC 융합 디지털금융 산업 선순환 (인재양성-R&D-사업화) 생태계 조성** ○ **연구센터 기반**으로 고급 기술자산 공유, 기술장벽 해소로 **기술 경쟁력 강화** ○ 산학연 공동 연구 역량 향상으로 **글로벌 수준의 원천기술 확보, 연구 성과 창출** ○ 지역 특화 **현장 맞춤형 교육, 지역 인재 양성 및 채용 등으로 지역 선순환 구조 정착**

□ 관련 조례 및 지침 개정계획 : 해당사항 없음

□ '26년 소요예산

○ 총200백만원 : 센터구축(100), 임대·관리비(70), 운영비(30) ※ 인건비 별도 150(대학교 부담)

□ 기관별 역할

구 분	부산광역시	부산국제금융진흥원	부산대학교
역 할	정책 총괄 및 행정 지원	운영 총괄 및 협력체계 마련	기술 R&D 및 전문 교육
세부업무	• 추진체계 마련 및 정책 총괄 • 센터 구축 및 예산 지원 • 성과 모니터링 및 관리	• 센터 운영 총괄 •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인턴십·채용 연계 • 세미나 및 글로벌 진출 지원	• 연구인력(교수, 연구진) 상주 • 전문교육 설계 및 운영 • 기업-대학 공동 R&D 및 PoC • 기술 컨설팅 및 사업화 연계

□ 추진일정

○ '26. 4. ~ 9. 관련기관 협의, 센터 공간 확보 및 인프라 구축

○ '26.10. ~ 12. 센터 개소, 전문 인력 배치, 교육·R&D 수요조사 실시

○ '27. ~ 교육과정 및 공동 R&D 과제 수행, 지·산·학·연 협의체 가동 등

□ 홍보계획

○ **문현금융단지 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AI·BC 융합 **기술 컨설팅** 및 **전문 교육 프로그램** 집중 안내

○ 매년 **각종 세미나 및 투자 설명회 등**을 활용하여 연구센터의 **기술이전** 및 **채용 성공 사례 홍보**

○ **지역 언론, 시정 보도자료,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

6-3 부산 정주형 원격근무 프로젝트 사업

주관부서	디지털경제실 일자리노동과	협조기관	(사)부산경영자총협회
담당자	이은숙 주무관	연락처	051-888-4474

□ 추진배경

○ **(지역 IT 인력·일자리 미스매치)** 부산지역 청년 IT 인력은 지속적으로 배출되고 있으나 지역 내 일감과 기업 기반은 제한적

○ **(디지털 원격 협업 확대)** 클라우드 기반 개발환경, 협업플랫폼 확산 등으로 기업·인재 간 물리적 제약 없이 프로젝트 단위 협업이 가능한 근무 환경으로 전환

○ **(정주형 원격근무 모델 필요)** 수도권 중심의 일감 구조와 지역 인력 간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내 부산외 기업의 프로젝트를 지역 청년 인력과 연결하는 새로운 일자리 방식 필요

부산외 기업 프로젝트와 부산 청년 개발자 연결을 통한 **정주 기반 원격근무** 일자리 창출 필요

□ 세부 추진사항

○ **(사 업 명)** 부산 정주형 원격근무 프로젝트

○ **(추진근거)** 「부산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제6조(일자리 창출 사업)

○ **(사업기간)** 2026년 3월 ~ 12월

○ **(사 업 비)** 130백만원 ('25. 일자리대상 "광역대상" 수상 인센티브)

○ **(추진방식)** 역외 기업 원격 프로젝트 발주 ↔ 부산청년 개발자 수행 연계

○ **(지원대상)**

- **(발 주 처)** 원격 프로젝트 플랫폼 통해 프로젝트를 발주하는 부산 외 기업
- **(수행인력)** 부산 청년 IT 개발자(만 39세 이하) 또는 개발팀

○ **(지원규모)** 프로젝트 20건 내외(프로젝트 1건당 최대 5백만원)

- **(발 주 처)** 프로젝트 계약금액의 20% 이내(최대 3백만원)
- **(수행인력)** 고용보험료 및 프로그램 구독료 (최대 1백만원) 혹은 창업(사업자등록)한 개인 개발자에게 창업지원금(최대 2백만원)

○ **(정책소통 및 참여형 운영 강화)**

- **(사례 확산)** 원격근무 브이로그를 통해 참여자의 실제 근무·생활 사례를 공유하고 사업 인지도 제고
- **(정책 체감도 조사)** 참여자 대상 만족도 조사 실시하여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사업 체감도 확인

○ **(수행기관)** 부산경영자총협회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시행 전	시행 후
○ 수도권 중심 IT 기업 수요 집중으로 지역 내 프로젝트 유입 부족	○ 외부기업 프로젝트 20건 이상 유치

○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 청년 IT 인력 수도권 유출	○ 부산 정주 기반 일자리 참여 확대 ○ 지역 청년 IT 인력의 소득 기반 마련 ○ 부산형 디지털 일자리 모델 선도

□ '26년 소요예산

○ **(사 업 비)** 130백만원 ('25. 일자리대상 "광역대상" 수상 인센티브)

- (인건비) 12,600천원 (1,400천원×9개월)
- (사업비) 100,000천원 (발주처 지원 60,000천원, 수행인력 지원 40,000천원)
- (홍보비) 17,400천원 (홍보영상 및 인쇄물 등)

□ 추진체계



□ 추진일정

○ ('26. 3.) 수행기관 협약체결 및 사업계획서 확정

○ ('26. 4.~11.) 플랫폼 협약 체결, 참여자 모집, 프로젝트 매칭 등

○ ('26. 12.) 성과 점검 및 향후 추진 방향 검토

□ 홍보계획

○ **(온라인 홍보)** 「Stay Busan, Work Anywhere」 캠페인

- (유튜브) 숏폼 콘텐츠, 참여 청년 브이로그 및 인터뷰 영상 등
- (블로그・SNS) 프로젝트 홍보 콘텐츠, 카드 뉴스 등

○ **(오프라인 홍보)** 정주형 원격근무 기사 등 게재

- (일간지) 정주형 원격근무 사업 기획기사 게재
- (대중교통) 시내버스 정류소 영상 상영

6-4 지역상권 활력 회복을 위한 상권활성화 사업 추진

주관부서	디지털경제실 중소상공인지원과	협조기관	(재)부산경제진흥원
담당자	강지우 주무관	연락처	051-888-4787

□ 추진배경

○ 기반이 잘 갖춰진 지역상권은 다양한 지역상품·콘텐츠 경험이 가능하고 외부 소비자와 관광객 유입을 통해 지역 경제 활력을 제고함

○ 제도권(전통시장, 상점가 등) 밖 골목상권의 소상공인 조직화를 통해 골목상권의 로컬브랜드화 및 자생력 강화 필요

○ 침체된 지역상권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및 구역별 테마 기획 등을 통하여 특색있는 상권 공간 구성 및 재도약 도모

□ 세부 추진사항

○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을 통한 상권 규모 확장 및 자생력 강화**

- 골목상권 공동체 조직화 및 부산다운 골목도움 지정
- 대학생 골목상권 마케터즈 운영을 통한 상권 매칭 및 홍보

○ **침체된 지역상권의 재도약을 위한 글로컬 상권활성화 사업 추진**

- 구·군별 상권활성화사업 설명회 개최 및 PM 도입
- 상권환경개선(H/W)* 및 상권활성화(S/W)**사업을 추진하되 구역별 테마 등을 기획하여 핫플레이스 상권으로 육성

* 환경개선사업 : 거리정비 및 기반공사, 거리 디자인(테마별) 등

** 활성화사업 : 테마존 운영, 특화상품·브랜드 개발, 상권홍보, 역량강화 교육 등

○ **상권활성화구역 운영 역량 강화**

- 부산경제진흥원 주관 자문위원회 운영을 통한 전문가 자문
- 실무자 간 지속적 정보 공유 및 상권 활성화 방안 논의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시행 전	시행 후
○ 골목상권 조직화(25개소), 우수골목 (10개소) ○ 글로컬 상권활성화사업 대상구역(5개소)	○ 골목상권 조직화(30개소), 우수골목 (12개소) ○ 글로컬 상권활성화사업 대상구역(6개소)

○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 영세한 점포 중심 골목상권 자생력 부족 ○ 정책사업 상권 운영 경험 부족으로 인한 시행착오 발생	○ 골목상권 공동체를 통한 제도권 편입 및 상권 단위 성장 지원 ○ 상권 주체 간 실무경험 공유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한 상권 운영 역량 강화

□ '26년 소요예산

○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10억

○ 상권활성화사업(5개 상권) 45.6억원

□ 추진체계

○ (총괄) 부산광역시

○ (수행기관) (재)부산경제진흥원, 자율상권조합

○ (참여주체) 구·군, 지역 소상공인, 상권 전문가 등

□ 추진일정

○ '26. 1.~12. 글로컬 상권활성화사업(5개 상권) 추진

○ '26. 2.~4. 16개 구·군 대상 찾아가는 사업설명회 개최

○ '26. 4.~12. 골목상권 활성화사업 지원대상 선정 및 사업 추진

○ '26. 5.~6. 상권활성화사업 추진 상권 통합 컨설팅

○ '26. 9. 글로컬 상권활성화사업 대상 확정 ▷ 총 6개 상권

□ 홍보계획

○ (매체홍보) 지면광고, 市 공식채널, 소상공인지원센터 홈페이지·SNS 등

○ (구·군 홍보) 구·군별 설명회 개최 현수막 게시,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6-5 산업단지 유치업종 구조개편

주관부서	디지털경제실 산업입지과	협조기관	부산경제진흥원
담당자	정원철, 최윤철 주무관	연락처	051-888-4922/4914

□ 추진배경

○ 제조업 중심 **포지티브(Positive) 방식의** 한정적 유치업종 체계로 인한 기업유치 장벽

-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다양한 산업수요 진입 장벽

○ 기업 필요에 따른 사후변경으로 시간적·경제적 부담 유발

- 변경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비용을 기업이 직접 부담

  * 비용 부담으로 인한 입주포기, 투자이탈 등 산단 경쟁력 저하

- 유치업종 재편에 대한 업계 전반의 요구 증가

□ 세부 추진사항

✔. 전국 최초, 관리권자 주도 산업단지 유치업종 구조개편 시행.
  - 28개 준공 산업단지 대상

✔. 서부산스마트밸리 일반산업단지(舊. 신평장림, '80~'90.) 계획 이후 46년만의 대전환.

○ **(단 기 : '26년 6월까지)** 지식·정보통신산업 등 37개 업종 전면 개방

- 대상 : 면적 15만㎡ 미만 9개 산업단지
- 제조업과 결합 효과 크고, 청년층 선호도 높은 업종 우선 개방

○ **(중 기 : '27년 말까지)** 28개 준공 산업단지, 제조업종 추가 개방

- 대상 : 28개 준공 산업단지 전체

  * (면적 15만㎡ 미만 9개, 15만㎡ 이상 19개)

- 지식·정보통신산업 등 37개 업종 外 제조업종도 추가 개방

  * 기반시설용량, 환경보전방안 허용 범위 내 개방 – 부산시 주관 전문기술용역 시행

○ **(장 기)** 노후 산업단지 고도화 및 재생사업 시행

- 대상 : 착공 후 20년 도래 노후 산업단지
- 기반시설 개량·확충 및 업종구조 전면 재편

* 재생사업, 경쟁력강화, 문화선도 산단 등 정부 공모사업 연계 시행

○ **(지속·확산)**

- 5년 주기 부산시 주도 산업단지 기능·업종 재검토 추진
- 신규로 조성하는 산업단지는 처음부터 업종 Free-Zone(Negative 방식), 職住樂 생활인프라를 갖춘 직주도시 계획 등.

(입주기업 의견 수렴)

- 관리기관 회의 개최 : '26. 4. 6.(월)
  (관리기관) 경제자유구역청, 부산경제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신평장림산업단지 관리공단, 명례일반산업단지 관리공단
- 산업단지 관리기관을 통한 입주기업 의견 수렴 실시(~ '26. 6.)
  (19개 입주기업 협의회, 5,900여 입주 기업체)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시행 전	시행 후
○ 제조업 중심의 한정적 업종체계 - 다양한 산업수요(제조-연구개발-지식서비스 융합 등) 진입 장애	○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37개 비제조업 전면 개방 - '26. 6.까지 : 15만㎡ 미만 산업단지(9개) - '27. 말까지 : 15만㎡ 이상 산업단지(19개) ○ 제조업종 추가 개방 - '27. 말까지 : 전체 준공 산업단지(28개) - 기반시설용량, 환경보전방안 범위 내
○ 필요 기업 신청에 의한 사후변경 방식 - 비용 부담으로 인한 입주포기, 투자이탈 등 산단 경쟁력 저하	○ 관리권자 주도 선제적 구조개편 시행 - 기업부담하는 시간적 경제적 부담 완화 - 5년 주기 재검토 추진

- 시가 재정투입하여 관리권자로서의 전면 재검토 실시
- 28개 준공 산업단지, '27말까지 비조제업 37개 및 제조업 추가 개방 완료

○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 입주가능 업종 제한적(제조업 중심) ○ 업종변경 절차에 따른 시간, 비용을 기업이 직접 부담	○ 업종 운영의 유연성 확대 - 기업 수요에 맞춘 입주여건 개선 ○ 업종변경 비용 부담 완화 ○ 신산업 입지 기반 확대, 미래 산업지도 재편 본격화

- 관리권자 주도 선제적 구조개편을 통해, 기업이 체감하는 산업단지 관리 운영 방식 대전환.
- 제조, 연구개발, 지식서비스 등 신산업 유치, 청년고용 확대
- 약 3.000억원에 달하는 기업부담 완화를 통한 기업애로 해소, 투자 활성화

□ 관련 조례 및 지침 개정계획

○ 해당없음

□ ’26년 소요예산

○ 산업단지계획(변경) 수립 및 환경보정방안 검토 용역 : 약 10억원

□ 추진체계

○ 부산광역시(산업입지과)
- 예산확보, 전문기술용역 시행
- 관계기관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
-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및 산업단지계획 변경 고시

○ 부산경제진흥원 등 산업단지 관리기관
- 입주기업체 의견 수렴 등

□ 추진일정

○ ‘26. 4. ~ 6. : 입주기업 의견 수렴

○ ‘26. 6. : 비제조업 37개 업종 개방 완료(15만㎡ 미만 9개 산단)

○ ‘26. 下 : 산업단지계획(변경) 수립 용역 등 착수

○ ‘27. 下 : 제조업종까지 추가 개방 순차 완료(28개 산단)

□ 홍보계획

○ 시장님 언론 브리핑 및 보도자료 배포 : ‘26. 3.31.

- KBS부산, 부산일보, 국제신문 등 정책 홍보

○ 시청광장 전광판, 시역내 주요 지점(벡스코 등 26개소) IPTV 홍보영상 송출

○ 안내문 배포, 산단내 현수막 게시 등 현장 밀착형 홍보 시행

6-6 부산 전력반도체 특화 인력양성

주관부서	첨단산업국 반도체신소재과	협조기관	지역 대학, 부산테크노파크
담당자	윤고은 주무관	연락처	051-888-4706

□ 추진배경

○ 반도체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 필요

- 정부의 「AI 시대 반도체 산업 전략('25.12.10.)」에 따라 부산이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로 명시됨
- 소부장 특화단지 및 기회발전특구 지정으로 기업 유치 필요
- 기업 수요에 부합하는 실무형 전문 인력의 적기 공급 체계 구축

□ 세부 추진사항

○ 지·산·학 협력기반「부산권 전력반도체 공유대학」 고도화

- 지역 11개 대학 간 교육 자원 개방 및 공동 활용 체계 구축
- 산업체 수요를 반영한 차세대 반도체 특화 교육과정 운영

○ 대학 현장 방문 등을 통한 반도체 교육 운영과정에 대한 정책 환류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시행 전	시행 후
○ 개별대학 중심의 파편화된 교육	○ 11개 대학 자원 공유형 통합교육 - 반도체 공유대학 전문인력 양성 300명 달성 ※ 산출근거: 15개 과정 * 20명 = 300명

○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 지역 인재의 수도권 유출 가속화 ○ 기업들의 인력 수급난 호소	○ 지역 대학생에게 고품질 전문 교육 및 우수 기업 취업 기회 제공 ○ 인력 양성→기업 유치→고용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 혁신 모델 정착

□ ’26년 소요예산

○ 비예산사업 (각 대학 RISE 사업비 총액 34,000천원)

□ 추진체계

○ 부산시: 정책 수립, 총괄 관리

○ 동의대학교: 사업 수행 주관, 대학 간 네트워크 허브 역할

○ 지역대학 및 부산테크노파크: 공유대학 교육과정 운영 및 전문 인력 배출

□ 추진일정

○ 교육생 모집 및 선발: ’26. 1월 ~ 3월

○ 전력반도체 특화 교육과정 운영: ’26. 3월 ~ ’27. 2월

○ 성과 공유회 및 교육 수료: ’27. 2월

□ 홍보계획

○ 상시 SNS(인스타그램), 대학 게시판을 통한 교육과정 홍보

6-7 5극 3특 초광역 공유대학 운영

주관부서	청년산학국 지산학협력과	협조기관	부산·울산·경남지역 대학
담당자	김현주 주무관	연락처	051-888-4892

□ 추진배경

○ **(지역 소멸 위기 및 인재 유출 가속화)** 수도권 집중 현상 대응 초광역 단위의 고등교육 혁신 모델 필요

○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Anchor)' 대응)** 대학을 지역 성장의 앵커(Anchor)로 육성하여 산업-교육-일자리의 선순환 체계 구축

○ **(거점 국립대 육성사업과의 연계)** 거점 중심의 자원공유를 통해 교육 인프라 상향 평준화, 지역 전략산업에 최적화된 인재 공급

□ 세부 추진사항

○ **(사업기간)** 2026년~2029년(4개년)

○ **(총사업비)** 1,600억원(거점국립대 교당 200억원(국비))

○ **(사업내용)**

- **(공동 학사운영)** 공동 학점인정, 공동 학위제 및 마이크로 디그리 도입
- **(특화 산업)** 스마트조선, 미래차, 우주항공, 수소, 방산 등 5대 전략 산업 교육과정 개발.
- **(인프라)** 시공간 제약 없는 디지털 공유 캠퍼스(Meta-Campus) 구축
- **(취업 연계)** 앵커 기업 연계 현장 실습(Co-op) 및 채용 연계형 인턴십 의무화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시행 전	시행 후
○ BSU 부산공유대학 운영	○ 초광역 공유대학 추진(1개)

○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 (교육체계) 대학별 분절적 학사 운영	초광역 공동 학사 및 공유대학 체제 구축
○ (연구역량) 개별대학 단위 연구	전략산업 기반 석·박사 R&D 클러스터 조성
○ (자원활용) 대학별 기자재 중복 투자	인프라 공유를 통한 투자 효율성 극대화
○ (지역안착) 우수 인재 수도권 유출	전략산업 인력난 해소 및 기업 경쟁력 강화

□ 관련 조례 및 지침 개정계획

○ **(공유대학 운영 규정)** 참여 대학 간 학사 행정 통합 표준안 및 공동 학위 수여에 관한 세부 지침 마련 검토

○ **(지산학 협력 촉진 지침)** 기업 지원금에 대한 세제 혜택 및 대학 시설 개방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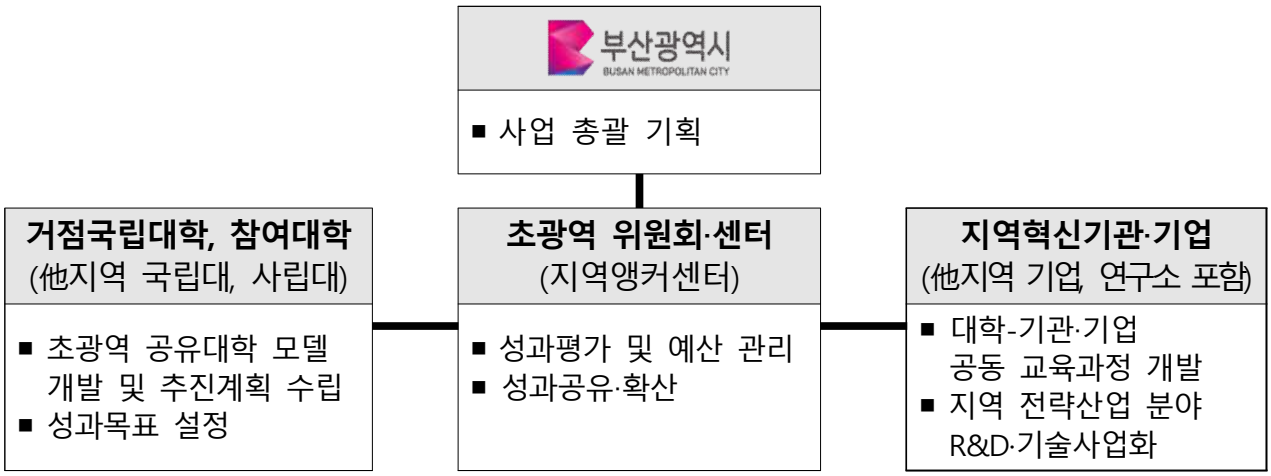
□ '26년 소요예산(국비)

(단위:억 원)

항 목	주요 내용	예산	비고
플랫폼 구축	디지털 공유 캠퍼스 인프라 및 LMS 고도화	200	
교육과정 개발	5대 전략 산업별 특화 커리큘럼 개발(5개 분야)	100	국립대 육성사업 연계
학생 지원 등	공유대학 혁신 장학금 및 원거리 교통 지원, 사무국 운영 및 지산학 거버넌스 활성화	100	
합 계		400	*부울경

□ 추진체계

○ 권역별 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지자체·대학·산업 간 초광역 거버넌스 운영을 통해 지역 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 구축



□ 추진일정

○ ’26. 4. : 부울경 관계기관 킥오프 회의 개최

○ ’26. 5. : 교육부 2026년 재정지원 지원대학 선정계획 발표

○ ’26. 6. ~9. : 추진계획 수립 및 공모신청, 선정결과 발표

○ ‘26. 10.~ : 참여대학 간 학사 교류 협약(MOU) 체결

○ ’27. 3.~ : 부울경 초광역 공유대학 공식 개교

□ 홍보계획

○ **(캠 페 인)** 유튜브, 인스타그램을 활용한 ‘부울경 앵커(Anchor) 인재’ 브랜드 디지털 캠페인 전개

○ **(성과홍보)** 우수 성공사례 발굴을 통해 성과보고회, 위크숍 개최

○ **(성과확산)** 공유대학 성공 사례(취업 수기 등) 영상 제작을 통한 대국민 인식 제고

6-8 선박 AR/VR 가상화센터 조성 및 운영(영도 경제기반)

주관부서	주택건축국 도시공간활력과	협조기관	KIOST, KOMERI 등
담당자	김양수 주무관	연락처	051-888-4194

□ 추진배경

○ 영도 대평동 일원 수리조선산업 등 지역산업 쇠퇴에 대응하기 위하여 중앙부처(국토부), 市, 지역 주민 및 사업체, 공공기관, 전문가 단체 등이 상호 협력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 영도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20년~27년, 500억원, 3개분야 9개 세부사업 추진)

○ 수리조선 분야의 교육여건 변화 및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AR/VR 콘텐츠 개발 및 교육·실습 프로그램 운영

□ 선박 AR/VR 가상화센터 조성 및 운영

○ (사업내용) 선박 AR/VR 가상화센터 콘텐츠 제작 및 프로그램 운영

- 선박 외형, 내부(조타실, 기관실 등) 디지털트윈 구현
- 선박 기관실 배관, 장비 운영 및 정비 등 가상화 교육 콘텐츠 제작
- VR기반 선박 안전교육 체험형 콘텐츠 제작
- AR/VR 선박수리 교육 프로그램 운영 (4회, 60명)

○ (사업대상) 수리조선 관련 근로자 및 학생, 관계기관 등

○ (사 업 비) 5억원(국 2.5, 시 2.5)

○ (추진일정) 콘텐츠 제작('26.8.) → 교육훈련('26.9.~11.) → 사업성과 환류('26.12.)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시행 전	시행 후
○ 선박 실물 도제식 교육의 한계로 신규인력 유입 제한 ○ 이론 및 시청각 안전 교육훈련으로 교육효과 및 참여도 저조	○ 가상화 콘텐츠 활용을 통해 수준별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성과목표: 교육프로그램 만족도 80% ○ 도상(이론), AR/VR 가상체험 등 다양한 교육훈련 제공으로 참여도 및 효과 증대

○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 도시재생사업 참여도 저조	○ 교육환경 변화 및 수요 반영을 통한 사업 참여도 향상 ○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한 프로그램 고도화 및 확장성 확보 기대

□ '26년 소요예산

○ 소요예산 : 500백만원 (국비 250, 시비 250)

* 26년 영도 경제기반 도시재생사업 사업비: 7,604백만원(국 4,604, 시 3,000)

□ 추진체계

○ (부산시) 사업계획 조정 및 예산확보 지원

○ (KIOST) AR/VR 가상화센터 운영

* KIOST(한국해양과학기술원) 영도 경제기반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상 운영기관

○ (산업체 및 관련기관) 프로그램 참여 및 교육 수강 등

□ 추진일정

○ '26. 4.~ 8. : AR/VR 콘텐츠 제작

○ '26. 9. : 콘텐츠 성과물 전문가 평가

○ '26. 9.~11. : AR/VR 수리조선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 '26. 12. : 운영결과 환류, 교육 콘텐츠 업데이트

6-9 김 국유품종을 활용한 부산지역적합 신품종 개발

주관부서	수산자원연구소 연구개발팀	협조기관	국립수산과학원 해조류연구소
담당자	신효진 주무관	연락처	051-209-0929

□ 추진배경

○ 김은 최근 세계적으로 저칼로리, 고단백 웰빙식품으로 각광
-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품목 1위(2024년 수출액 : 약 9.97억달러)

○ 기후 온난화에 따른 수온 상승으로 부산 지역 김 양식 여건 악화,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대응방안 마련 시급
- 지역 해양생태환경에 적합한 김 품종 개발 및 안정적인 생산 지원

□ 현황(문제점) 진단

○ 겨울철 수온 상승에 따른 김 양식기간 감소 및 병해 발생으로 부산 연안 김양식 어업인 지속 가능한 생산 저해

○ 양식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김 종자를 지역 해양환경에 적합하고 생장이 우수한 김 신품종 개발 보급

□ 추진방향

○ 지역적합 우량계통주 선발 및 재배심사 전 시험양식 (1단계)

○ 1차 재배심사 시험(개발출원품종, 대조품종 대상) (2단계)

○ 2차 재배심사 시험 및 품종보호권 출원 및 등록 (3단계)

□ 세부 추진사항

○ 부산지역적합 김 우량사상체 및 유용계통주 확보
- 우수엽체 및 감마선 조사 등으로 우량 유용계통주 2개 확보

○ 품종별 패각사상체 배양관리

○ 우량계통주를 대상으로 품종특성조사 재배심사 시험 실시
- 출원심사를 위한 김 품종특성조사 기준에 따른 조사 추진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시행 전	시행 후
○ 부산 특화 김 품종 부재 ○ 부산해역 맞춤형 김 품종의 양식 현장 보급체계 미비	○ 부산지역 특화 김 신품종 현장시험 - 개발 1종 이상, 시험양식장 1개소 선정

○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 부산지역 김 품종의 다양성 부족 및 지역적합 김 품종 미개발	- 김품종 다양화로 김 산업 질적 생산 확대 - 신품종에 대한 어업인 신뢰도 향상 및 부산 지역적합 품종 개발 기술 확립

□ 과제 추진상 장애요인

○ **기술적 요인** : 품종 연구개발 관련 연구소 자체 배양시스템 등 시설 미비

○ **환경적 요인** : 이상 고수온 등 환경 변화에 인한 황백화 병해 피해 발생

□ '26년 소요예산

○ 소요 예산 : 47,203천원(국 70%, 시 30%)

- 양식장 임차비 등 사무관리비(31,503천원) 및 시험연구비(15,700천원)

□ 추진체계

○ 부산광역시 수산자원연구소

- 패각배양, 양성, 품종특성조사 및 우수엽체 선발 등의 현장실험

○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종자육종연구소

- 단일품종 순계배양 및 유용계통주 보관

□ 추진일정

○ '26. 1.~ 3. : 유용계통주 선발 및 확보

○ '26. 3.~ 9. : 품종별 패각사상체 배양관리 및 육상채묘

○ '26. 10.~ 12. : 품종특성조사 재배심사 시험

□ 홍보계획

○ 관련기관 워크숍 및 연구소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연구 성과 홍보

○ 언론사를 통한 부산 김 신품종 개발 홍보

7. 주민 누구에게나 쉽고 편리한 서비스 이용환경 조성

7-1 [납세자 권익보호] 숨은 절세 혜택 선제적 발굴·지원

주관부서	기획관 법무담당관실	협조기관	구·군,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담당자	김원경 주무관	연락처	051-888-2304

□ 추진배경

○ 생활과 직결되는 세금정보에 대한 인지 부족으로 마땅한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과세 이후 불복하더라도 기각되는 사례 빈발

○ 관련 법 개정 등 변화되는 제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을 선제적으로 발굴·안내하여 고충민원 예방 및 납세자의 권익 보호

□ 세부 추진사항

○ **(월별과제 추진)** 신설(변경) 제도 안내 및 환급 시책추진

- 지방세 관련 법령 개정 사항 및 민원 사례, 타 지자체 우수사례 등 관련 자료수집과 검토를 통해 납세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고충사항을 미리 찾아서 안내하고 과오납 세액이 있을 경우 환급

○ **(납세자 고충 반영)** 세금 관련 민원 청취 및 인용(과세 등에 민원의견 반영)

○ **기관별 역할**

- (시) 월별과제 선정, 실행방법 안내 및 지원, 자료취합 및 피드백
- (구·군) 대상자(부과자료) 추출 및 혜택 안내, 환급 등 과제 실행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표준정보시스템 지원(과세대상 자료 추출)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시행 전	시행 후
○ 세금관련 정보부족으로 인한 시민불편 ○ 납세관련 사후적 안내 및 민원처리	○ 세금관련 시민 불편사항 발굴 추진 - 신규시책 개발 및 추진 6건 이상 ○ 선제적 민원안내로 권익침해 방지

○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 지방세 관련 정보부족으로 인한 과오납 불복 청구 등 민원 발생 ○ 과세 후 이의신청·환급 등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	○ 납세자 권익 선제적 보호 및 만족도 제고 ○ 민원 감소로 행정 효율성 제고 ○ 지방 행정에 대한 신뢰도 향상

□ '26년 소요예산 ▻ 비예산

□ 추진체계

○ **시, 구·군 협업을 통한 신규시책 개발 및 추진**

- (市) ①납세자보호관 운영계획 수립, ②지방세 관련 법령 개정 사항 및 기존 우수사례 등 관련 자료수집·검토 , ③월별 추진과제 선정(추진시기 및 방법 등 업무프로세스 정립, 구·군 시달)
- (구·군) 월별과제 추진(안내문 발송, 환급 등)

○ 유선, 온라인 등 다양한 경로로 제기되는 세금 관련 민원 의견 수렴

□ 추진일정

○ '26. 4. **운영 계획 수립**

○ '26. 5. ~ 9. 과제별 **세부계획 수립** 및 통보

- 구·군 공문 시달(市) : 체계적·구체적 추진 지침* 안내

* 관계 법령 등 근거자료, 업무처리 방법 및 안내문(안) 등

- (월별과제 추진) 세부 업무처리 방법에 따라 집행(구·군)
  2~3개월 이내 추진 결과 회신(구·군→시)

○ '26. 11. 추진 **결과 분석** 및 **피드백**(시→구·군)

○ '26. 12. 구·군 추진 **실적 평가 및 시상**

□ 홍보계획

○ 시 공식 홍보 채널(페이스북 등) 활용 온라인 홍보

○ 주요 수요처 방문, 주민접점 밀착형 홍보

- 공동주택 게시판(EV 모니터) 활용 지방세 홍보(정기분, 6~12월)
- 반상회보, 납세고지서, 홍보물품 제작·배포 등

7-2 온라인 자동차등록시스템 구축

주관부서	재정관 세정정책담당관	협조기관	국토부, 행안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한국교통안전공단, 부산은행
담당자	정성숙 주무관	연락처	051-888-2192

□ 추진배경

○ 지자체간 자동차 금융상품(리스·렌트) 유치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대량의 자동차 등록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시스템 필요

- 여신전문금융법인(캐피탈, 카드사 등)의 기관민원 온라인 처리 지원

○ 사용자 중심의 지능형 온라인 등록 플랫폼 구축을 통한 유치 경쟁력 강화

□ 추진방향

○ 국토부·행안부 시스템 실시간 연동으로 정합성 및 행정 효율화

○ 자동차 등록·부과·납부·등록까지 원스톱 온라인 통합처리 구현

- 대량·일괄 등록 등 기업민원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납부 자동 연계 통합처리 지원

○ 시스템 활용 확대에 대비하여 모듈화, 표준화 및 API 연계

- 시스템 이용기관 확대, 모바일 서비스 확대를 **고려하여 구현**

□ 세부 추진사항(주요내용)

○ 사 업 명: 온라인 자동차 등록지원시스템(기업민원서비스) 구축

○ 사업기간: 2026. 4월 ~ 9월(5개월)

○ 사업비: 시금고 협력사업으로 추진(비예산)

○ 사업내용

- (자동차 등록) 신규, 이전, 변경, 말소, 저당권 등 지원
- (통합납부) 묶음 가상계좌 납부, 신용카드 납부, 부과·납부

- 정보시스템 실시간 연계

• (국토부, 자동차관리 시스템) 자동차 기본사항, 자동차등록원부

• (행안부, 지방세 시스템) 취・등록세 수납, 미납, 체납, 기관민원 과세자료 등

• (재경부, 전자수입인지시스템) 전자수입인지 대량 구매 및 재고관리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 온라인 기반 업무전환 및 대량처리 지원으로 업무 효율성 향상

- 자동차 등록처리 기간 단축(1~2일)으로 차별화된 행정서비스 제공

○ 기대효과

- 외부 시스템과 연계로 데이터 정합성 및 시스템 신뢰도 확보

- 리스·렌터카 등록유치 확대로 지방세(취득세, 자동차세) 확충에 기여

□ '26년 소요예산

○ 비예산 사업 (시금고 협력사업)

□ 추진체계

○ 행안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 차세대 지방세입시스템 연계

○ 국토부, 한국교통안전공단 : 차세대 자동차관리시스템 연계

○ 부산은행 : 시금고 협력사업 추진

□ 추진일정

○ 사업자 선정(부산은행) : '26. 4.

○ 시스템 구축 계획 수립 : '26. 4.

○ 시스템 개발 및 구축 : '26. 4. ~ 9.

○ 서비스 개시 : '26. 9.

7-3 종이 없는 전자계약 추진

주관부서	재정관 회계재산담당관	협조기관	계약상대자, 사업부서
담당자	하도흔 주무관	연락처	051-888-2232

□ 추진배경

○ 계약상대자의 계약관련 서류(착공, 준공, 대가청구 등) 제출시 **행정기관 방문에 따른 시간 및 비용발생 등의 불편함 초래**

※ 지방계약 시 종이서류 제출 요구 최소화 요청(행정안전부 회계계약제도과-4812호(2024. 6. 18.)

○ **종이문서 생산에 따른 보관·관리 장소문제** 및 분실, 훼손, 위·변조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 등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요인 제거

- 수기문서 접수 건의 과중으로 계약담당자의 **업무량 가중**

○ 전자계약 업무 추진에 따른 **전자정부시스템 인프라 기 구축**

※ ① '문서24'(민·관 전자문서송수신시스템) ② 나라장터(전자조달시스템)
③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④ 전자대금청구시스템(e호조+빌)

□ 세부 추진사항

○ 시행: 「종이 없는 전자계약 추진계획」 알림(회계재산담당관-68566(2025. 12. 17.)

○ 대상: 본청, 사업소, 직속기관, 시의회 ※구군,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등은 자발적 참여

○ 시행시기: 2026. 1월~

○ 방법: 신규 발주 계약관련 모든 서류를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보관**

○ 계약서류 관리: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통합 관리

- (계약상대자) 문서24, 나라장터 등을 통해 계약서류 제출
- (계약부서)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통한 계약서류 보관

※ 계약담당자가 계약체결 후 원인행위단계에서 계약서, 계약보증서 등 **전자저장 처리**

- (사업부서) 온나라 문서 시스템을 통한 계약서류 제출

※ 감독담당자는 착공, 준공신고서 등 **"문서 24"로 접수 후 계약부서에 공문 송부**(담당자 1인 결재)

○ 계약 단계별 개선 사항

① [계약의뢰 단계] 온나라(이호조 연계) 계약 의뢰

주 체	현 행	개 선
사업부서	◦ (온나라) 발주계획 보고서 내부결재, 계약 의뢰 공문 계약부서 발송(e호조 연계)	(좌동)
	◦ (e호조) 지출품의승인내역등록	◦ (e호조) 지출품의승인내역 등록시 계약의뢰 관련 서류 첨부 후 계약 승인 요청

② [개찰 및 적격심사 단계] 나라장터, 문서24로 적격심사 서류 제출

주 체	현 행	개 선
계약부서	◦ (나라장터) 개찰 ◦ (온나라) 적격심사대상 통보(문서24연계)	(좌동)
입찰 참가자	◦ 적격서류 방문 제출	◦ (나라장터, 문서24) 적격서류 온라인 제출
계약부서	◦ 적격심사	(좌동)

③ [계약 체결 단계] 계약서 파일 전자 저장 처리

주 체	현 행	개 선
계약업체	◦ 계약서류 방문 제출	◦ (나라장터) 계약응답 시 계약서류 첨부
계약부서	◦ (나라장터) 계약 체결	(좌동)
	◦ (e호조) 계약대장 등재	◦ (e호조) 계약서, 계약서류 등 파일 업로드
	◦ (온나라) 사업부서에 계약체결알림	(좌동)

④ [착공 및 준공(기성)신고서 제출 단계] 문서24 접수 후 공문 발송

주 체	현 행	개 선
계약업체	◦ 사업부서 경유 후 방문 제출	◦ (문서24) 전자 제출
사업부서	◦ 종이 서류 검토 후 1부 보관	◦ (온나라) 검토 후 신고서 첨부하여 공문으로 계약부서 송부 (담당자 1인 결재) * (e호조) 검수 등록 시 착수계, 준공계 등 서류 전자 업로드
계약부서	◦ 종이 서류 수기 접수 및 보관	◦ (온나라) 사업부서 발송 공문 접수

⑤ [대금 지급단계] 계약업체 전자(나라장터, 문서24 등) 제출

주 체	현 행	개 선
계약업체	◦ 대금청구서 방문 제출	◦ (나라장터, 문서24 등) 전자제출
계약부서	◦ (e호조) 대금 지급	◦ (e호조) 대금 지급 시 관련 서류 등 파일 업로드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시행 전	시행 후
○ 계약상대자 관공서 방문 - 계약건당 평균 3회 이상 방문	○ 전자제출 방식으로 방문 불필요 및 비용절감 - 방문 1회당 비용: **30천원**(직접비용[교통비등], 기회비용 포함)
○ 복사용지 및 토너사용 비용 발생	○ 예산절감 효과(복사용지 및 토너등 사용감소) - 복사용지 구매비용: **10원/매** - 토너비용: **30원/매** * 흑백 레이저 프린트 기준

○ **기대효과('26년 예상)** ※ **'25년 계약 13,138건**(본청, 의회, 직속, 사업소)으로 분석

➤ **민원인 비용절감(1,182,420천원), 예산절감(52,552천원), 1,770그루 나무 심는 효과**

- 계약상대자: 행정기관 방문을 위해 사용하는 **비용과 시간의 경제적 기회비용 절약 및 민원인 편의 증진**

❖ 민원인 방문 비용 절감 예상액: 1,182,420천원(13,138건×3회×30천원)
* 계약 한건당 평균 방문 횟수: **최소 3회**(착수계, 준공계, 대금청구 등)
* 방문 1회당 비용: **30천원**(직접비용[교통비등], 기회비용 포함)

- 부산시: 종이 인쇄물 최소화로 효과적인 계약 행정 실천

① **일하는 방식 개선 및 업무효율 증진**(문서보관을 위한 공간·인력 비용 감소)

② **탄소중립 정책 부응**(인쇄물 사용감소로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

③ **예산절감 효과**(복사용지 및 토너등 사용감소)

④ **계약행정의 투명성·공정성 강화로 청렴도 향상**(계약 과정 전자적 보관으로 위변조 방지 및 보안성 강화)

7-4 적극행정의 표본이 된, "폐원된 어린이집의 무형유산 전수공간으로 변신"

주관부서	문화국 문화유산과	협조기관	국가유산청
담당자	노지현 주무관	연락처	051-888-5067

□ 추진배경

○ 40여 년간 부산시(기장군)에 전승기반을 둔 국가무형유산(동해안별신굿)의 보존회가 전수 공간 부재 등의 사유로 **보존회소재지를 포항으로 이전하려 한다는 동향**을 긴급 접하고, **시·기장군은 동해안별신굿보존회에 구체적인 지원계획 안을 제안·적극 소통하여, 해당 종목이 지닌 지역정체성을 강조함으로써 해당 보존회의 포항 이전 계획을 철회**시킴.

* ('25.3.19,국제신문) 부산문화유산(국가무형유산) 안일행정탓 포항에 뺏길 판
('25.5.11,중앙일보) 동해안별신굿, 부산남는다. 포항과 '국가유산전쟁'일단락
('25.5.13,연합뉴스) 무형문화재'동해안별신굿'보존회,포항대신 부산에 남기로
('25.5.13,국제신문) 포항가려했던 동해안별신굿, 부산 남는다.

○ 복수의 무형유산 종목이 소재한 구(군) 중 유일하게 전수교육관이 없는 기장군에 **市 공유재산(안델센어린이집)을 시설개선(리모델링)을 통한 전수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기장군 무형유산의 안정적 전승 기반 여건 조성**

□ 세부 추진사항

○ 시 공유재산(안델센어린이집*)의 재산관리관 변경('26.9.17.)

- 변경내역 : 출산보육과→문화유산과

* 면적 : 652.28㎡ / 개원 : '18.3.1., 폐원 : '25.6.5.

○ 조례 개정으로 부산시 민속예술관 운영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부산광역시 민속예술관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26.4.8)

* 개정조문 : 제2조(명칭과 소재지)
▹ 기존 5개 민속예술관에 '기장민속문화예술관'을 추가하여 총 6개소로 함.

○ 기장민속문화예술관 설계 용역 및 공사추진 진행

- 시설개선 리모델링 설계 용역 (‘26.1.15 ~ 3.15, 0.3억)
- 시설개선 리모델링 공사 예정 (‘26.5 ~ 8, 2.5억)

○ 기장민속문화예술관 건립 예정 : ’26. 9월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시행 전	시행 후
○ 市 민속예술관 설치 및 운영조례 미비 ○ 기장군, 4개 종목의 무형유산이 전승되고 있으나 전수교육관의 부재로 16개 구·군 대비 전승기반 열악 ※ 기장군 무형유산: 국가1, 시3 (국가)동해안별신굿 (부산시)기장오구굿,주성장,사기장	○ 市 민속예술관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 완료 - 제335회 임시회(’26.4월) ○ 기장민속문화예술관 건립: ’26. 9월 예정 - 소재지 : 기장군 장안읍 반룡리 870번지 (지하1/지상2층, 연면적 652.28㎡)

- 폐원된 어린이집을 ‘무형유산 전수관’으로 사용함으로써 시 공유재산의 활용 강화
- 무형유산 전수관 확충을 통해 국가무형유산 보존회의 부산 잔류 유도 및 기장군 소재 무형유산의 안정적 전승 기반 조성

○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 기장군 소재 무형유산의 안정적 전승 기반 부재 ○ 어린이집 폐원으로 공유재산 미활용	○ 기장군 소재 무형유산의 안정적 전승 기반 마련 ○ 폐원된 어린이집을 무형유산 전수관으로 확충함으로써 공유재산의 적극적 활용

- 전수 공간 확보 및 운영 지원을 통한 안정적 전승 기반 마련

* 전수(연습)장, 공연 · 전시장, 숙박 공간, 체험 · 교육 공간 등을 갖춘 민속예술관 확보 ▸ **내 · 외국인 대상으로 한 다양한 교육·체험 활동 추진 가능, 공개행사 및 전시회 등을 자체 개최 가능**

- **폐원된 市 어린이집을 적극 활용**한 기장민속문화예술관 조기 확충

* 민속문화예술관 신축 시에 소요되는 평균 기간(4~5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여(1년) 기장민속문화예술관(임시)** 확충

□ ’26년 소요예산

○ 시 설 명 : 기장민속문화예술관 시설개선(안델센어린이집 리모델링)

○ 총사업비 : 279백만원(부가세 포함)

(*공사비245백만원, 설계용역비30백만원, 감리비4.3백만원)

○ 시행시기 : ‘26. 2. ~ ‘26. 8.

○ 주요시설 : 무형유산(3종목) 작업실, 사무실, 연습장 등으로 개선

※ 기장군 소재 종목(3종목) ▹ (국가)동해안별신굿,(시)기장오구굿,사기장

구분	층	변경전	변경후	면적(㎡)	비고
1	지상2층	보육실,교사실 등	오구굿 연습실 등	172.21	
2	지상1층	보육실,원장실, 주방 등	별신굿 연습실, 전수관사무실, 공유주방 등	277.60	
3	지하1층	유희실, 문서고 등	사기장 작업실 및 사무실 등	202.47	
합계				**652.28**	

□ 추진체계

○ (부산시) 기장민속예술관 지원 기본계획 수립, 민속예술관 건물 확보, 조례 개정, 시설 리모델링 용역・공사

- ’25. 3. 7. 동해안별신굿 보존회소재지 포항 이전 관련 회의 개최
  *참석자 : 부산시 문화국장, 기장군 문화환경국장, 보존회 사무국장 등
- ’25. 3. 8. 부산시, 동해안별신굿보존회 임원진에 ‘지원계획’ 설명
  * 보존회, 총회 개최(’25. 3. 8.) ▹ ‘이전 안건’ 통과
- ’25. 3. 13. 보존회소재지 이전 관련 국가유산청 방문 및 협조 요청
  * 면담자 : 국가유산청 무형유산국장·전승지원과장

○ (기장군) 민속예술관 신축을 위한 타당성 설계용역 실시 - ’25.8

○ (민간) 사단법인 ‘기장민속문화예술보존협회’ 설립, ‘26.1.3
사단법인 ‘기장민속문화예술보존협회’ 등기, ‘26.2.4

□ 추진경과 ('25)

○ '25. 2. 27. 포항시, 국가유산청에 국비 확보를 위한 사업 설명
▸국가유산청, 동해안별신굿 보존회소재지 포항 이전 계획 부산시 유선 알림

○ '25. 3. 7. 동해안별신굿 보존회소재지 포항 이전 관련 회의 개최
※ 참석자 : 부산시 문화국장, 기장군 문화환경국장, 보존회 사무국장 등

○ '25. 3. 8. 부산시, 동해안별신굿보존회 임원진에 '지원계획' 설명
※ 보존회, 총회 개최('25. 3. 8.) ▹ '이전 안건' 통과

○ '25. 3. 9. 언론보도 ▹ 국제신문, '부산의 중요 무형유산 타 지자체에 빼앗길 위기'로 분석

○ '25. 3. 13. 보존회소재지 이전 관련 국가유산청 방문 및 협조 요청
※ 면담자 : 국가유산청 무형유산국장·전승지원과장

○ '25. 8. 8. 부산광역시 민속예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 '25. 8. 13.~9. 2. 입법예고 ▸ 제출의견 없음

○ '25. 8. 12.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 원안동의

○ '25. 8. 19. 성별영향평가(여성가족과) ▸ 의견없음

○ '25. 9. 10. 법제심사 완료

○ '25. 11.19. 제332회 시의회 정례회 조례 개정

□ 추진일정 ('26)

○ '26.1 ~ '26.3 시설개선 리모델링 설계용역 완료

○ '26.4. 8. 제335회 시의회 정례회 개정 조례 공포

○ '26.5 ~'26.9 시설개선 리모델링 공사 및 준공

□ 홍보계획

○ 폐원된 어린이집을 활용한 전수 공간 확보 및 전수 공간의 운영 지원 마련을 위한 조례 개정을 통해 시무형유산의 안정적 전승 기반을 신속히 마련하고, 폐원된 어린이집을 적극 활용한, 전수 공간의 신속한 확충에 적극 행정을 펼친 점 언론 부각

○ 우리 시에 소재한 40여 년 역사의 국가유산을 시·군의 협력과 보존회와의 상시 소통 및 지원·신뢰 회복을 통한 이전계획을 철회하고, 민속예술관 건립을 통한 안정적 무형유산 전승기반 조성

7-5 시민 수요 맞춤 러닝 인프라 확충 및 프로그램 운영

주관부서	체육국 생활체육과	협조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담당자	조은태 주무관 이지훈 주무관	연락처	051-888-6532 051-888-6537

□ 추진배경

○ **(러닝인구 증가)** 고물가 시대 **가성비 트렌드**와 **야외운동 선호 확산**으로 비용 부담이 적은 **러닝의 인기가 지속 상승**하며 러닝동호회와 개인 러너층 확산 추세

–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러닝은 힙하다'는 인식과 함께 러닝크루 문화 확산

○ **(러너 편의시설 확충 요구)** 부산은 **해변, 강 등 러너들이 선호하는 코스**를 **보유**하고 있으나, **러닝인프라 부족**으로 **편의시설 확충 필요성 지속 제기**

○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 기대)** 러너지원공간은 단순 체육시설을 넘어 다양한 **경제·사회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복합적 거점 시설로의 역할 기대**

– (경제적) 지역 상권 활성화 / (사회적) 커뮤니티 활성화로 도시 활력 제고

□ 세부 추진사항

1 러너지원공간 조성·운영

○ **(지역맞춤형 「러너지원공간」 조성)**

- **장소별 특성**을 **반영**한 **공간 조성**으로 **활용도와 접근성 제고**
- 탈의실.물품보관함 등 **러너 편의시설 제공**으로 **시민체감형 인프라 조성**
- **운영성과 분석**을 바탕으로 **이용률 제고 및 프로그램 연계 등 운영 내실화 추진**

○ **(러너수요반영 「보조지원공간」 조성)**

- **주요 러닝코스** 내 **물품보관함 중심의 보조지원공간** 조성
- **러너 의견조회** 및 **현장 여건 검토**를 통한 **단계적 조성 확대 추진**

2 러닝프로그램 운영

○ **운영기간 :** ‘26. 5~11월

○ **운영횟수 및 인원 :** 90회, 2,500여명

○ **운영장소 :** 수영강·다대포해수욕장·온천천 등 4개소

○ **운영내용 :** 러닝자세, 심폐력 강화 등 러닝주법 강습 및 코스별 러닝 진행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시행 전	시행 후
○ **현황 및 문제점** - **러닝 거점시설 부재**로 **편의시설 확충 요구** 지속 - **시민 대상 체계적인 러닝 프로그램 부족** 및 프로그램 운영 후 **체계적 의견수렴 절차 미흡**으로 참여자 요구사항이 차기 운영계획에 구조적으로 반영 어려움	○ **성과목표** - **생활권 기반 러닝 거점시설 2개소 이상 조성** · 러너지원공간 2개소, 보조지원공간 2개소 - **러닝프로그램 만족도 8점 이상 달성(10점 척도)** · 만족도 조사 응답자수(표본) 1,200명 이상 확보 * 예) 매우 만족 10점, 조금 만족 7점, 보통 5점, 조금 불만족 3점, 불만족 0점

- (「달려라부산 러닝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실시)

· 참여자 약 2,500명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병행 만족도 조사 실시

* 회차별 현장 QR코드 및 지면설문과 프로그램 종료 후 온라인 설문 병행으로 응답 접근성 제고

· 프로그램 운영 전반에 대한 조사문항 구성

* 프로그램 전반 만족도(10점 척도 기준), 참여동기, 운영시간 및 장소 적정성, 강습 내용 및 강사 전문성, 안전관리, 재참여 의향, 개선 필요사항 등

· 회차별 현장 의견과 종료 후 설문결과를 종합하여, 프로그램 내용·운영·안전관리 등 분야별 개선과제 발굴 가능

· 참여 규모 및 운영 횟수(약 90회)를 고려할 때 최소 3~5건 이상의 실질적 개선사항 도출 가능

○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 **시민 생활권 러닝인프라 부족** - 생활권 내 러닝 인프라 부족으로 일상 속 운동 실천 환경 개선 필요 ○ **시민 건강 및 참여 개선 필요** - 프로그램 운영 후 만족도 및 성과에 대한 객관적 데이터 축적 미흡 ○ **시민 생활체육 참여율 정체** - 생활체육 참여율 증가세 둔화 및 지속적 참여 확산 한계	○ **시민 생활권 러닝인프라 확충** - 생활권 기반 러닝 인프라 확충으로 일상 속 운동 환경 조성 ○ **시민 건강 증진 및 참여 확대** - 러닝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지속적 신체활동 실천 유도 -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객관적 데이터에 근거한 프로그램 개선 체계 구축 ○ **프로그램 품질 향상 및 운영 내실화** - 시민 의견을 실제 운영에 반영하여, 참여 효율성 및 만족도 제고 ○ **시민 생활체육참여율 제고(`25년 70.6%)** - 생활밀착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생활체육 참여율 향상 기여

□ '26년 소요예산

○ 소요예산 : 896백만원

- 러너지원공간 조성 및 운영 500백만원
- 러닝프로그램 운영 396백만원(국비 포함)

• 문체부 공모사업 : 지역자율형 생활체육활동[달려라부산], 어르신스포츠강좌 프로그램[달려라부산 라이프런]

□ 추진체계

○ (러너지원공간 조성) 부산시↔구·군↔부산시설공단 등

市	구·군	부산시설공단 등
· 사업총괄추진·운영 · 러너지원공간 조성·운영 · 예산집행, 홍보 등	· 대상지 발굴 및 운영·관리 · 사업홍보, 안내	· 대상지 발굴 및 운영·관리 · 사업홍보, 안내

○ (러닝프로그램 운영) 부산시↔구·군↔생활체육문화센터·노인복지관 등↔부산시육상연맹

市	구·군, 노인복지관	부산시 육상연맹	체력인증센터, 스포츠과학센터
· 사업추진·운영 · 사업홍보·브랜딩 · 예산관리 등	· 대상자 발굴 및 연계 · 사업홍보, 안내	· 지도자·강사 추천 · 세부 프로그램 자문 등	· 체력측정, 운동처방 - 참여자 대상 운영

□ 추진일정

○ 26. 3. 다대포 러너지원공간 개소 및 연계 러닝행사 개최('26.3.28.)

○ 26. 4. 러너 보조지원공간 2개소 조성(부산시민공원, 북항친수공원)

○ 26. 5. ~ 11. 달려라부산 러닝프로그램 운영 및 회차별 만족도 조사 등

○ 26. 하. 금련산역 러너지원공간 및 보조지원공간 추가조성

○ 26. 12. 러닝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및 종합 결과 분석

□ 홍보계획

○ 러너지원공간 및 러닝 프로그램 홍보

- 방송사 등 언론을 통한 보도자료 배포 등 홍보
- 전용 홈페이지, SNS 개설 및 운영
- 부산시보 및 부산시 공식 SNS 통한 홍보 및 기타 관계기관별 홍보
- 구·군, 노인복지관·경로당 등 현장 방문 홍보 병행

○ 러닝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및 의견반영 내용 홍보

- 프로그램 참여자 대상 현장홍보
  · 운영장소별 안내판, 현수막, 배너, QR코드 비치 등 통한 만족도 조사 참여 안내
  · 강사 및 운영요원을 통한 조사 참여 독려
- 온라인 통한 참여 안내 및 홍보
  · 부산시 및 운영기관 홈페이지, SNS, 온라인커뮤니티 등을 통한 조사 참여 안내
  · 참가자 대상 문자 또는 모바일 안내를 통한 설문 참여 유도

7-6 건설현장 'Clean-업(UP) 맞춤형 클리닉' : 찾아가는 예방교육 및 컨설팅

주관부서	도시혁신균형실 건설행정과	협조기관	지역건설업체, 대한건설협회 등
담당자	이소현 주무관	연락처	051-888-2688

□ 추진배경

○ 형식적 교육 운영에 따른 지역 건설업체의 낮은 수혜 체감도

- 연 1회 실시되는 대규모 집합 교육은 생업에 종사하는 건설업자들의 시간적·물리적 제약으로 인해 참여율 저조

○ 처벌 중심의 소극 행정에서 예방 중심의 적극 행정으로 전환 필요

- 위반 빈도가 높은 '취약 업체' 및 '신규 등록 업체'를 직접 찾아가 소통하는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공직사회의 신뢰도를 높이고 일잘하는 시정 구현 필수

* 2025년 종합건설업 신규 등록 31건, 행정처분 건수 435건

□ 세부 추진사항

○ 대상자 중심의 '찾아가는 건설행정 맞춤형 클리닉' 운영

- 최근 3년 내 위반 이력이 있는 업체 및 신규 등록 업체를 우선순위로 선정
- 집합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담당자 및 전문가가 직접 사무실 및 현장을 방문하여 1:1 법령 준수 컨설팅 및 실태조사 대비 요령 안내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시행 전	시행 후
○ 집합 교육 시 생업 종사 및 현실적 이유로 참여율이 저조 - 집합교육 * 연 1회	○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행정 서비스 도입 - 현장 방문 교육(컨설팅) 횟수 * 연 2회 (반기1회) *시범도입 후 횟수조정

○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 복잡한 법령 숙지 미흡에 따른 행정처분 불복 우려	○ 연 1회 형식적 집합 교육을 탈피하여, 위반 빈도가 높은 업체를 직접 방문하는 '핀셋형 예방 행정' 구현 ○ 사후 처벌 위주의 행정에서 사전 예방 중심의 서비스 행정으로 패러다임 전환

- 단순히 '가르치는 교육'이 아니라, 업체별로 취약한 부분을 진단하고 처방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을 줄여 투명한(Clean) 환경을 만들고, 지역 업체의 역량을 끌어올림(UP)

□ '26년 소요예산

○ 교육 및 홍보물 제작 3,000천원

□ 추진체계

○ (건설행정과) 방문 교육 대상자 선정 및 맞춤형 컨설팅 실시

○ (대한건설협회) 교육 대상 업체 홍보 지원 및 전문가 섭외, 최근 위반 사례 공유

□ 추진일정

○ 건설업 위반 사례 분석 및 교육 대상 업체 선발('26. 6월)

○ 찾아가는 클리닉 시범운영 ('26. 10월, 12월)

○ 연간 성과 분석 및 우수 사례(처분 감소율 등) 도출('27. 1월)

□ 홍보계획

○ (홍보방법) 시청 홈페이지 팝업창 게시, 업체 대상 개별 안내문 발송, 협회 홍보, 시 SNS(인스타그램) 홍보

○ (홍보내용) '처벌보다 예방 우선, 찾아가는 건설행정 클리닉' 운영 안내 및 자가진단 서비스 홍보 등

7-7 정비사업 상생지원단 운영

주관부서	도시혁신균형실 건설행정과	협조기관	도시정비과, 구청 대한전문건설협회(부산시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부산시회)
담당자	김성민 주무관	연락처	051-888-2672

□ 추진배경

○ 고금리 · 고물가 장기화에 따른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지역건설업체 지역하도급 수주 감소

○ 관급공사의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수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민간공사의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수주 확대로 지역건설경기 활성화 도모

□ 세부 추진사항

○ 정비사업 지역하도급 인센티브(용적률) 제도 안내('25.1. 시행)

지역업체 참여비율	40% 이상	50% 이상	60% 이상	70% 이상
인센티브	**6%**	**9%**	**12%**	**15%**

○ 원활한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멘토(공무원) 지정

구 분	내 용	비 고
멘토 지정	- 건설행정과 시설6급 김성민	
멘토 역할	- 정비사업 각종 행정절차 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행정지원 - 정비사업 업무 로드맵 안내 및 관련 법령사항 자문 - 기타 정비사업 추진 시 애로사항 청취 및 해결방안 모색	

○ 부산지역 우수 전문건설업체 안내 및 향후 착공 시 지역업체 참여 당부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시행 전	시행 후
○ 현황 및 문제점 - 정비사업 지역하도급 인센티브 적용에 대한 홍보 등 행정지원 미비로 지역건설업체의 정비사업 참여실적이 저조한 실정임.	○ 성과목표(지역하도급 인센티브 적용) - 26.4월 현재 사전타당성 검토 심의 및 입안요청 (제안) 검토 건수 : 65건 - 성과목표 60% : 40건

○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수주 감소 ○ 건설분야 지역일자리 감소	○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수주 증대 ○ 일자리 증가 등 지역건설경기 활성화

□ 관련 조례 및 지침 개정계획

○ 관련조례: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제10조(지역건설산업자의 참여 확대) 제2항 제2호

□ '26년 소요예산

○ 해당사항 없음

□ 추진체계

○ 상생지원단·정비사업 주체·구청 담당부서 협의체 구성·운영

※ 기관별 주요 업무

기 관 별	주 요 업 무
부 산 시	• 정비사업 지역하도급 상생지원단 구성 및 운영 • 정비사업 멘토(공무원) 역할 철저 • 상생지원단 활동 관련 자료 준비
관련 협회	• 우수 전문건설사업자 홍보자료 제작 • 기타 정비사업 관련 회원사 건의사항 파악
구 청	• 상생지원단 운영 관련 정비사업 주체 연락체계 유지 • 상생지원단 회의 장소(건축과 사무실 등) 마련

□ 추진일정

○ 사전타당성 검토 심의 신청 등 **현황 파악** 및 **지원대상 발굴**('26. 4.)

○ 정비사업 지역하도급 상생지원단 **kick-off 회의**('26. 4.)

○ 상생지원단 활동 개시('26. 5.~계속)

□ 홍보계획

○ 정비사업 지역하도급 상생지원단 운영계획 관련기관 배포

○ 향후 상생지원단 활동내역 언론보도

7-8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선정으로 양질의 주택 신속 공급

주관부서	주택건축국 도시정비과	협조기관	-
담당자	이주형 주무관	연락처	051-888-4242

□ 추진배경

○ 신축노후주택이 혼재되어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저층 노후주거지 등에 **신속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통한 서민 주거 안정 도모 필요**

○ 체계적인 관리계획 수립으로 난개발 방지, **기반시설 확보 등 양질의 주거환경 개선 유도 필요**

□ 세부 추진사항

1 공모개요

○ 공모기간 : 2026. 4. 13.(월) ~ 5. 12.(화) (30일간)

○ 관리지역 요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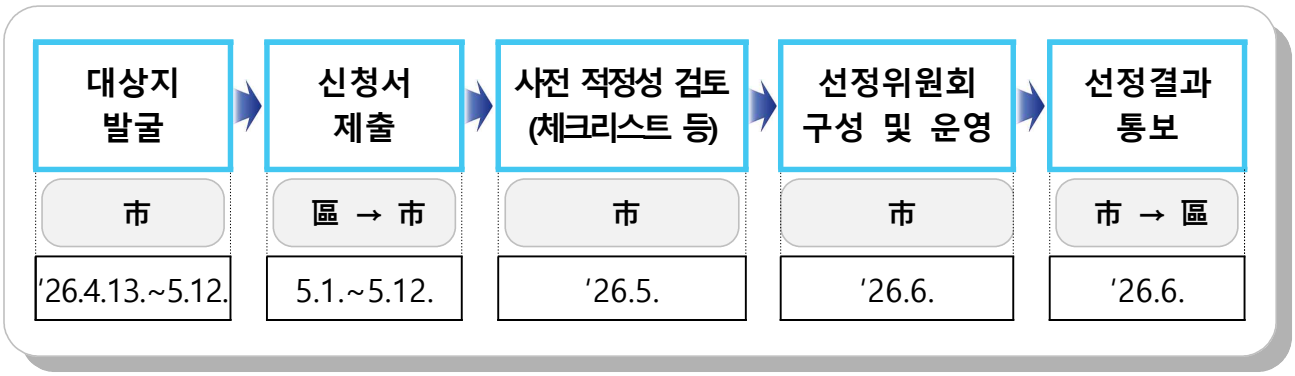
- 대상 지역 면적 10만㎡ 미만일 것
-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지역 전체 건축물 수의 2분의 1 이상인 지역,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 등

【제외지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정비예정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 가능)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존치지역 신청 가능)
-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 신청방법

- 제출기간 : 2026. 5. 1.(금) ~ 5. 12.(화)
- 제출방법 : 자치구에서 제출기간 내 공문으로 제출
- 제출서류 : 신청서(신청서, 체크리스트, 사업계획서) 및 평가 배점 기준별 근거자료 등

2 선정절차



○ **선 정 수 : 3개소 선정('26년 예산 고려)**

* 금회 미 선정 지역은 향후 예산 확보 후 자치구 추진 의사(주민의견 포함) 확인하여 추가 선정 검토

○ **선정방법 : 평가 배점 기준에 따라 대상지 평가 후 선정**

3 선정기준

○ 평가 배점 기준에 따른 사전 적정성 검토, 현장조사(주민설명회 등) 후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선정

○ **대상지 평가**

- 개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여부, 관리지역 대상지 취지 부합 여부, 정비 시급성, 지역 주민 참여 의사, 구청장 관심도(예산확보 여부) 등 정량적 평가
- 대상지 평가 결과 70점 이상 및 소관부서 검토 결과 선별된 대상지 중에서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시행 전	시행 후
○ 신축·노후주택이 혼재된 저층 노후 주거지는 광역적 개발이 어려움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대상지 선정 - 선정수 : 3개소 - 선정된 대상지 자치구에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지원(개소당, 각 150백만원 지급)

○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 단일 규모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도로 확장 등의 기반시설 확보가 어려우며, 나홀로 개발에 따른 난개발 우려 - 도로망 연계 등의 공공기여 미확보	○ 정비가 시급한 저층 노후주거지를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대상지로 선정함으로써, 공공이 주도하여 체계적인 관리계획 수립 가능

□ '26년 소요예산

○ 선정된 대상지 자치구에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지원

- 예산 : 450백만원(각 150백만원 지급)

□ 추진일정

○ '26. 4.~5. : 관리지역 대상지 선정계획 공문 시달

○ '26. 5.~6. : 대상지 평가 및 선정

○ '26. 6. : 선정된 대상지 자치구에 예산 교부

7-9 시내버스요금 간편결제(제로페이) 도입

주관부서	교통혁신국 대중교통과	협조기관	버스운송사업조합 한국간편결제진흥원
담당자	류극희 주무관	연락처	051-888-3982

□ 추진배경

○ 부산시의 관광 활성화 정책으로 인해 2026년 부산 방문 외국인 관광객수가 300만명 이상으로 예상되며, 중국, 대만, 홍콩, 필리핀 등 아시아권 관광객이 6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

○ 특히 중국을 중심으로 모바일 웰렛(Alipay/WeChat Pay 등) 결제 비중이 높아 'QR코드 기반 간편 결제수단' 도입을 통해 부산 방문 외국인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향상 도모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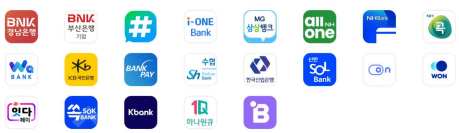
□ 세부 추진사항

○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와 제휴한 QR코드 기반 '제로페이' 도입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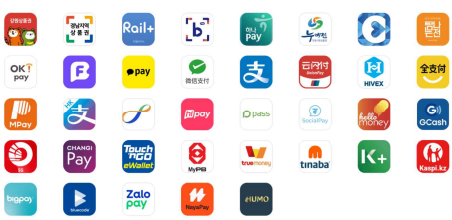
- 추가 시스템 구축 없이 제로페이 QR코드 차내 부착, 이용자 자국 결제 앱 사용으로 신속한 확대 도입 가능 (환전 불필요, 환승 불가능)
- 정산수수료(1.1~2.2% 매출액 차등)최소화, 운영정책 마련, 홍보 등을 위해 (재)한국간편결제진흥원과 협력체계 구성

[제로페이 개요]

- 운 영 사 :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비영리재단법인)
- 출범시기 : 2018. 12. 20
- 결제방식 : 은행·간편결제 앱에서 QR코드 스캔→ 금액 입력→ 즉시 이체
- 제 휴 사 : 국내 은행 및 전자금융사, 글로벌 결제사(Alipay/WeChat Pay 등)



< 은행앱 >



< 결제앱 >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시행 전	시행 후
○ 제로페이 결제 안됨	○ 147개노선 2,517대 시내버스 제로페이 결제가능

○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 해외관광객 시내버스 탑승시 환전을 통한 현금 결제 ○ 편의점 등에서 별도 교통카드 구매하여 요금 결제	○ 해외 관광객이 별도의 환전없이 본인소지 스마트폰에서 자국의 제로페이 결제앱으로 버스요금 결제 가능으로 버스이용 편의 증대

□ '26년 소요예산

○ 사업비 : 1억원 (버스운송사업조합 예산)

- 차내 QR코드 및 안내문 제작, 홍보비 등
- 정산수수료는 별도로 준공영제 공통경비에 반영

※ 현금요금 1,700원 기준 약 20원/건 내외 추정

□ 추진일정

○ '26. 4, 버스조합, 한국간편결제진흥원 등 유관기관 협의

○ '26. 5, 교통위원회 제로페이 도입 보고

○ '26. 6, 버스회사 가맹점 신청, QR스티커 제작 및 부착

○ '26. 7, 시내버스 제로페이 결제서비스 개시

□ 홍보계획

○ 해외결제사(Alipay/WeChat Pay 등) 홍보 및 할인 프로모션 진행

○ 버스내부 및 정류소표지판 다국어 안내홍보물 제작 및 부착

○ 홍보팜플렛 제작, 보도자료 배포 등

8. 가짜 노동 없는 성과 중심의 조직 운영

8-1 주요 재정사업 평가 실효성 제고

주관부서	재정관 재정협력담당관	협조기관	부산시(전부서)
담당자	김지훈 주무관	연락처	051-888-2075

□ 추진배경

○ 매년 총사업비 5억원 이상 주요 재정사업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

- 평가 결과를 차년도 예산편성에 반영 및 재정사업 재구조화

○ 주요 재정사업 평가 결과에 대한 실효성 지적*

- 차년도 예산과 연계성이 낮은 완료사업까지 상대평가에 포함되어 평가의 형평성이 저하
- 다년도 건설사업의 단계별 특성이 미반영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적사항('25.12.)

□ 세부 추진사항

○ 완료사업 절대평가 의무 적용

- 차년도 예산 반영과 무관한 완료사업은 상대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절대평가로 운영
- 완료사업은 사업성과 및 정책효과 중심으로 평가하여 종료사업의 실질적 성과를 객관적으로 검증

○ 사업유형별 차등 평가체계 도입

- 일반사업, 다년도 건설사업, 완료사업으로 유형을 구분하여 평가
- 다년도 건설사업은 공정관리 및 사업관리 적정성 중심으로 평가 비중 조정
- 완료사업은 성과 및 결과 중심 평가 비중을 확대하여 정책 효과성 검증 강화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시행 전	시행 후
○ 완료사업 절대평가 미적용 ○ 사업유형별 차등 배점 미적용	○ 완료사업 절대평가 적용률 : 100% ○ 사업유형별 차등 배점 적용률 : 100%

○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 차년도 예산과 연계성이 낮은 완료사업까지 상대평가에 포함되어 평가의 형평성이 저하 ○ 다년도 건설사업의 단계별 특성이 미반영	○ 완료사업과 진행사업을 구분한 평가체계 정립으로 평가의 공정성과 합리성 제고 ○ 다년도 건설사업의 단계별 특성을 반영한 평가를 통해 사업관리 중심의 정밀한 평가체계 구축

□ 관련 조례 및 지침 개정계획

○ 2026년 주요 재정사업 평가계획 수립

- 완료사업 절대평가 적용 기준 명확화
- 사업유형별 배점체계 운영 기준 정비

□ '26년 소요예산

○ 비예산사업

□ 추진일정

○ '26. 3월 : 추진계획 수립 및 평가 기준, 달라지는 제도 안내

○ '26. 3~4월 : 평가대상 확정 및 실·국·본부 자체평가 실시

○ '26. 5~6월 : 평가결과 점검 및 확정

○ '26. 7~9월 : 평가결과 '27년도 예산(안) 반영

8-2 재난 안전분야 인력 강화 및 인센티브 확대 추진

주관부서	행정자치국 인사과	협조기관	행정안전부, 인사처, 구·군 등
담당자	김효경 주무관	연락처	051-888-1957

□ 추진배경

○ 재난부서(시 시민안전실, 구·군 안전도시국 등) 중심으로 관할 내에서 발생하는 전 유형의 재난 대응

○ 우수 인력 확보를 통한 재난·안전 대응 역량 강화 필요

□ 현황(문제점) 진단

○ 안전관리 최일선에 있는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의 처우 개선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조직 내 낮은 평가와 실제 업무에 대한 보상 미흡 등으로 재난·안전 부서 기피, 전문인력 유출 지속

□ 세부 추진사항(주요내용)

○ 재난·안전분야 처우 개선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자체 인사 규칙 적기 개정 및 운영

- 재난안전 분야 근무 가점 및 근속승진 기간 단축 혜택 부여

○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 적용 방안 마련

-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에 대한 보직관리 및 전문직위 등 신설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시행 전	시행 후
○ 시행 전	○ '26년 재난안전분야 전문직위 신설 및 전문관 선발 ○ 재난안전분야 근무 직원 인사상 우대 (포상, 특별승급, 승진 등)

○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 재난안전 부서 조직 내 낮은 평가와 실제 업무에 대한 보상 미흡 ○ 재난안전 부서 기피 및 전문인력 유출	○ 재난.안전분야 우수 인력 유입 및 장기근무 ○ 재난안전 분야 위상 강화, 대응 역량 강화

□ 관련 자치법규 및 지침 개정계획

○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26. 6.)

○ 부산광역시 공무원 인사규칙 개정('25. 10.)

□ '26년 소요예산

○ 비예산사업

□ 추진체계

○ 행정안전부 -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개정

○ 시 및 구·군 - 법령 개정에 따른 자체 인사 규칙 개정 및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 적용 방안 마련

□ 추진일정

○ '26. 상반기 전문직위 신설 및 전문관 임용

□ 홍보계획

○ 재난안전분야 인사 우대방안 전 직원 안내·홍보

- 연초 인사 운영계획 수립 시 반영 및 전 직원 대상 주기적 안내

※ 재난.안전 분야 근무 시 가점 부여 및 근속 승진 기간 단축, 각종 수당 지급 등 관련 인센티브에 대한 지속 안내

8-3 라이프세이버 운영

주관부서	소방재난본부 구조구급과	협조기관	해당사항 없음
담당자	소방경 윤성욱	연락처	051-760-3101

□ 추진배경

○ 인명구조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공유함으로서, 소방의 사회적 신뢰도 향상과 시민들에게 고품질 소방 서비스 제공 유도

○ 긴박한 재난 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시민의 생명을 구한 소방관에 대한 합당한 포상과 특전을 제공하여 소방조직의 사기를 진작하고 현장대원의 자긍심 고취 필요

□ 세부 추진사항

○ **선정 시기** : 반기별 2명 선정(연 총 4명)

○ **선정 절차**

1차 (건의)	2차 (추천)	3차 (결정)	수여
현장지휘관 또는 동료대원 건의	**소방서장 추천** ※ 본부 직원 : 부서장 추천	**심의 위원회 결정**	**본부 또는 소방서**

○ **선정 기준**

- **(직접구조)** ①소방공무원이 재난현장에서 ②생명의 위험에 처한 구조대상자를 ③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로 생명을 구한 경우
- **(대형 인명피해 방지)** ①소방공무원이 재난현장에서 ②신속·적극적 조치로 ③대형 인명피해 발생을 방지한 경우
- **(소방 명예 고양)** 대형 재난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있는 사고를 방지함으로서, **사회적 이목을 끌고 주요 언론 등에 보도**되어 **소방의 명예와 신뢰를 드높인 경우**

○ **인센티브** : 라이프세이버 인증서 및 배지 수여, 명패 게시 등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 라이프세이버 선정 : 반기별 2명(연 총 4명)

* '26년 최초 시행(구급관련 세이버하트, 트라우마, 브레인 제도 기 시행 중)

시행 전	시행 후
○ 구급관련 인센티브 외 현장활동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미비	○ 구조활동라이프세이버 연간 총 4명 선정 - 상반기 2명 / 하반기 2명

○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 소방조직 본연의 인명구조 활동을 장려하는 조직문화 조성 필요	○ 우수 구조 노하우의 확산으로 소방의 전문성을 상향 평준화하여, 모든 시민에게 빈틈없는 고품질 구조 서비스 제공 ○ 합당한 포상과 특전을 제공하여 소방조직의 사기를 진작하고 현장대원의 자긍심 고취

□ '26년 소요 예산

○ 라이프세이버 운영(게시판 구입 등) ▸ 3,190천원

○ 라이프세이버 선정 외부위원 수당 ▸ 1,800천원

○ 라이프세이버 포상금 ▸ 2,000천원

- 라이프세이버 금 배지 수여 500천원금 × 4명(상·하반기 각 2명)

□ 추진일정

○ '26년 상반기「라이프세이버」수상 후보자 모집 ‣ '26년 1월

○ '26년 상반기「라이프세이버」수상자 선정 및 수여 ‣ '26년 2월 ~ 3월

○ '26년 하반기「라이프세이버」수상 후보자 모집 ‣ '26년 7월

○ '26년 하반기「라이프세이버」수상자 선정 및 수여 ‣ '26년 8월

□ 홍보계획

○ 라이프세이버 수상에 대한 신문사 언론홍보 등 실시

○ 소방본부 1층 로비 라이프세이버 수상자 활동내역 명패 게시

8-4 QR 기반 공동주택 세대점검 효율화 추진

주관부서	소방재난본부 부산진소방서	협조기관	-
담당자	소방장 박성환	연락처	051-760-4277

□ 추진배경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및 [별표3 제6호]에 따라 공동주택 세대점검 의무화

○ 시민 인지 및 전문성 부족

- 기존 법정 서식 텍스트 중심 체크리스트로 구성되어 일반 시민이 소방시설(자동확산소화기, 주방자동소화장치 등)의 명칭과 점검 방법을 이해하는 데 한계

○ 행정 업무 과중

- 점검 방법에 대한 단순 문의가 소방서 및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집중되어 현장 행정 인력의 업무 부담 가중

○ 디지털 전환 필요성

- 높은 스마트폰 보급률을 고려할 때, 종이 서식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디지털 기반 점검 가이드 제공 필요

□ 세부 추진사항

○ QR코드·사진 연계형 세대점검표 개선·배포

- 기존 텍스트 중심 서식 → 사진·QR 삽입 시각형 점검표로 개선
- 완강기, 대피공간 등 주요 시설 사진 제공 → 직관적 이해 지원
- QR 스캔 시 점검방법 동영상 연계 → 비대면 학습 가능
- 법정 점검 항목 유지 → 법적 적합성 확보

○ 민관 협력을 통한 접근 채널 다변화

- ‘아파트아이’, ‘노크타운’, ‘아파트너’ 등 민간 앱 연계
- 관리사무소 배부 및 게시판·엘리베이터 홍보

○ QR 활용 실적 관리 및 분석

- 점검표 배포 현황 및 참여율 등 실적 관리
- 공동주택별 참여 수준 분석을 통한 정책 개선 및 환류

○ 성과관리 체계 구축

- 공동주택별 점검 참여율 및 보급률 관리대장 운영
- 주요 성과지표 월별 점검 및 분석

□ 성과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구분	시행 전	시행 후
QR 점검표 보급률	-	관내 공동주택 70%이상
세대점검 참여율	**20%**	**70%**
점검표 활용률	**20%**	**70%**
시민 만족도	**70점**	**85점**
점검 관련 문의 건수	-	20%이상 감소

※ 성과측정 및 산출근거

- QR 점검표 보급률: 공동주택 대상 배포 및 부착 실적 기준으로 산정
- 세대점검 참여율: 관리사무소 제출 점검표 회수 현황을 기준으로 산정
- 점검표 활용률: 점검표 배포 세대 대비 실제 점검 참여 세대 비율로 산정
- 시민 만족도: 간이 설문조사 및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측정
- 점검 관련 문의 건수: 소방서 및 관리사무소 문의 현황 비교 분석

○ 기대효과

- 자율 소방안전 체계 구축
  * 영상 기반 자기주도 점검 → 화재 예방 역량 향상
  * 피난시설 점검 강화 → 인명피해 최소화
- 행정 및 관리 업무 효율화
  * 단순 문의 감소 → 현장 업무 부담 경감
  * 점검 결과 데이터화 → 체계적 관리 가능
- 사후관리 및 확산 기반 마련
  * 사용자 만족도 조사 및 콘텐츠 개선
  * 점검률·민원 감소 분석 → 타 지역 확대 보급

□ '26년 소요예산

○ 비예산 사업 (기존 QR코드 및 홍보체계 활용)

□ 추진체계

○ 부산진소방서

- QR 점검표 배포 및 참여율 등 실적 관리
- 공동주택별 참여 현황 분석 및 성과관리

○ 유관기관 및 시설 관계자

- QR 점검표 활용 협조
- 이용 안내 및 홍보

□ 추진일정

○ 2026. 4월: 추진계획 수립 및 콘텐츠 기획

○ 2026. 5월~6월: QR 점검표 제작·배포 및 시범 운영

○ 2026. 7월~9월: 확대 운영 및 참여 실적 관리

○ 2026. 10월~11월: 성과 분석 및 개선

○ 2026. 12월: 평가 및 환류

□ 홍보계획

○ 공동주택 QR 점검표 배포 및 부착 홍보

○ SNS 및 홈페이지 활용 영상 안내 콘텐츠 배포

○ 관리사무소 협조를 통한 참여 독려 및 안내방송 실시

○ 안전교육 및 훈련 시 QR 점검 참여 방법 병행 안내

8-5 아차사고 제안제도 도입을 통한 안전혁신 추진

주관부서	상수도사업본부 안전감사부	협조기관	-
담당자	이윤선 주무관	연락처	051-669-4144

□ 추진배경

○ 현장 내 사고는 사소한 위험징후와 아차사고를 조기에 발견·개선하지 못할 경우 중대재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 현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현장 근로자가 직접 위험 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참여형 안전문화 정착** 필요

○ 사고 발생 후 대응 중심에서 **예방중심의 안전행정 전환** 요구 증대

□ 세부 추진사항

○ **아차사고 제안제도 상시 운영**

- 기　　간: (제안접수)연중상시 / (평가·포상)6월, 12월
- 내　　용: 아차사고, 종사자의견(유해·위험요인, 작업환경 개선 등)
- 절　　차: 제안서접수(QR, 메일, 서면) ⇒ 심사·평가 ⇒ 채택 결정 ⇒ 개선착수 및 이행점검 ⇒ 위험사례 데이터베이스 구축
- 사후관리: 제안 개선활동 점검 및 우수사례 포상

○ **신속 조치 체계 구축**

- 제안사항 접수 후 즉시 위험성을 검토하여 긴급사항 우선조치
-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 확보를 위한 영구 대책 수립 및 실행
- 개선방안 추진 후 재발 여부 확인 및 보고

○ **평가 및 포상**

- 상·하반기 우수제안 선정(위험 심각도, 개선 기여도 등 평가)
- 우수 제안자, 부서 포상금 지급 및 우수사례 전 사업장 공유

○ **사후관리**

- 반기별 모니터링으로 건수, 처리현황, 개선조치 이행률 점검
- 행동 유형별, 사용 설비·장비별 아차사고 등 위험 사례 데이터베이스 구축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시행 전	시행 후
▹ 단편적인 점검으로는 현장 위험요인 발굴 한계	▹ 현장 직원이 직접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하는 참여형 안전문화 정착 - 제안건수 목표: 15건

○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 종사자 수동적 참여로 위험요인 파악을 위한 현장 의견 반영 한계 ▹ 사고예방을 위한 관련 데이터 부족	▹ 종사자 자발적 참여 확대를 통한 현장 중심 안전관리 강화 ▹ 아차사고 데이터 축적을 통한 위험요인 선제 관리

□ '26년 소요예산

○ 아차사고 제안제도 포상금: 3,000천원

□ 추진일정

○ 제안제도 접수 개시 ('26. 2월)

○ 평가 및 포상 ('26. 6월, 12월)

○ 연간 성과 평가 및 제도 개선 ('26. 12월)

□ 홍보계획

○ 아차사고 제안제도 홍보 포스터 제작 및 전 사업소 배포

○ 현장 및 사업소 직접 방문하여 운영 취지 및 참여방법 안내

9. 열정이 넘치고 일 잘하는 공직사회 조성

9-1 혁신과 소통이 활발한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

주관부서	기획관 조직담당관	협조기관	전 부서
담당자	조은빈 주무관	연락처	051-888-1107

□ 추진배경

○ 그간 조직문화 개선 노력에도 불구, 여전히 남아있는 공직사회 내 불합리한 관행과 행정 비효율에 대한 조직문화 혁신 요구 증대

○ 열정이 넘치고 일 잘하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구성원 간 소통과 협업이 활발한 건전하고 효율적 조직문화 조성 필요

□ 세부 추진사항

○ 불합리·비효율적 관행 근절 관련 적극혁신 문화 조성

- **(조직문화 개선계획 수립·시행)** 조직문화 진단 설문조사를 통해 실태 진단 및 조직문화 개선과제 등을 발굴하여 2026년 부산시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 개선계획 수립·시행
- **('간부 모시는 날' 근절 추진)** 공직사회 내 대표적인 불합리한 관행 중 하나인 '간부 모시는 날' 완전한 근절(zero화) 추진
- **(혁신모임 운영)** 부산시 저연차 직원 혁신모임 「혁신챌린저스」 운영 및 활동 지원으로 조직문화 혁신 분위기 조성

○ 소통·협업 중심 조직문화 확산

- **(소통 교육 실시)** 간부공무원 대상 소통의 중요성, 소통의 기술 등에 대한 교육 실시로 조직 내 건전한 소통문화 확산 유도
- **(정책연구모임 운영)** 다양한 직급·직렬로 구성된 정책연구모임 운영으로 업무 전문성 강화 및 자율적으로 학습하는 조직문화 조성
- **(행정협업 활성화)** 업무 효율성 제고 및 기관 간 경계 없는 협업을 추진하기 위한 협업과제 발굴 및 협업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시행 전	시행 후
○ 조직문화 객관적 수준 파악 및 개선 과제 도출 애로 ○ 유연하고 개방적인 조직문화를 추구하는 MZ세대 직원 중심으로 조직문화 개선 요구 증대 ○ 수직적 의사결정 구조 및 보수적 분위기, 자율적 참여 기반 학습·제안 등 저조	○ 불합리·비효율적 관행 근절 관련 적극혁신 문화 조성 - 조직문화 진단 실시 : 연 1회 -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 개선계획 수립·시행 : 연 1회 - 혁신챌린저스 구성 및 운영 : 구성 1회 / 운영 연 2회 ○ 소통·협업 중심 조직문화 확산 - 소통 교육 실시 : 연 1회 - 정책연구모임 구성·운영 : 구성 1회 / 운영 월 1회 - 협업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 연 1회

○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 조직문화 객관적 수준 파악 및 개선 과제 도출 애로	○ 전 직원 대상 조직문화 진단 설문조사 실시 후 직원들의 공감도·체감도가 높은 조직문화 개선과제 발굴 및 조직문화 개선계획 수립·시행
○ 불합리·비효율적 관행으로 경직된 조직문화	○ 시대에 맞지 않는 잘못된 공직관행을 발굴하고 개선하여 변화에 유연한 조직문화 조성
○ 조직 내 수평적 소통 및 의견 교류 부족	○ 소통·협업하는 조직문화 조성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고 수평적이고 활력있는 조직문화 조성

□ ’26년 소요예산

○ 공무원 참여시정 활성화 16.4백만원, 혁신챌린저스 운영 1.4백만원, 협업 행정 활성화 10.2백만원

□ 추진일정

○ ’26. 1. : ‘간부 모시는 날’ 근절 추진 계획 수립

○ ’26. 2. : 불합리·비효율적 관행 근절 관련 현장 간담회 개최

○ ’26. 4. : 조직문화 개선 소통 특강 실시

○ ’26. 5. : 2026년 부산시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 개선계획 수립·추진

○ ’26. 8.~ : 2026년 혁신챌린저스 구성 및 운영

○ ‘26. 12. : 추진 실적 공유

□ 홍보계획

○ ’25년도 정책연구모임 운영 성과 공유 및 ’26년도 정책연구모임 모집 홍보

○ 조직문화 개선 캠페인 실시

- (온라인) 행정포털 업무게시판 등 활용 홍보자료 게시
- (오프라인) 조직문화 개선 출근길 캠페인 추진

○ 소통 특강 실시

- 간부공무원 대상 조직문화 개선 소통 특강 실시 및 조직문화 개선 문구 부착된 홍보물품 배부

9-2 소통으로 마음을 잇는 직원 어울한마당

주관부서	행정자치국 총무과	협조기관	클래식부산
담당자	황정민 주무관	연락처	051-888-1857

□ 추진배경

○ (운영방식)

- 현재, 직원 선호도 반영하여 전직원 참여하는 체육대회 미개최('17.~'25.)로 실·국별 자체행사 기획·추진하는 방식으로 진행
- 소규모 행사 개최로 실·국별 행사개최 부담감 호소, 간담회 등 행사 취지에 맞지 않는 형식적인 방식으로 진행하는 등 문제점 발생

○ (직원 소통 기회 부족)

- 부서 간 소통 기회 부족으로 구성원 간 공감대 형성 기회 부족, 부서 협력 시 원활한 협력 어려움

○ (문화시설 체험 기회 제공 및 직원 역량 강화 필요)

- 관내 선진 문화시설에 대한 이용 요구 크며, 고품격 문화향유 경험 확대를 통해 도시 경쟁력 요소에 대한 직원 이해증진 및 시민 관점 행정서비스 추진 역량 강화 필요

□ 세부 추진사항

○ (운영방식 개선)

- **(기존) 부서별(팀별) 소규모 행사개최 → (변경) 전직원 참여 소통 방식**
- 클래식부산 협업하여 2025년 신설된 부산콘서트홀 이용한 전 직원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어울한마당 개최 추진

○ (프로그램기획)

- **클래식 부산 등 유관기관 협업으로 직원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 기획하여 "열정이 넘치고 일잘하는 공직사회 조성"**

○ (행사 피드백 실시)

- 직원 설문조사를 통한 피드백 실시, 향후 오페라하우스, 동물원 등 관내 신설 문화시설을 활용한 다양한 행사 개최방안 발굴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시행 전	시행 후
○ 개최방식: 실국별 업무연찬 실시 등 소규모 행사 개최 ○ 소요예산: 실국별 평균 950천원	○ 개최방식: 전직원 참여 가능한 문화체험 행사 개최 ○ 소요예산: 행사운영비 25,500천원

○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 체육대회 비선호에 따른 실·국별 개별 행사 개최로 직원 화합도모 어려움 ○ 내실 있고 체험 기반의 행사 개최불가 ○ 행사와 업무간 연계 부족으로 실효성 있는 업무 활용, 성과 창출에 제약있음	○ 공동 참여 통한 부서 간 협력 기반 조성 및 조직 구성원 간 소통 공감대 확산 ○ 품격있는 문화 향유 기회 제공을 통한 직원 힐링 기회 제공 ○ 현장 중심 문화체험을 통한 정책 실효성 제고 및 공감 행정 구현 기반 확보

□ '26년 소요예산

○ 행사운영비 25,500천원

□ 추진체계

○ (총무과) 어울한마당 행사 개최 계획 수립 및 총괄업무 추진

○ (클래식부산) 부산콘서트홀 공연일정 조정 및 시설이용 협조 지원, 품격 있는 문화공연 기획 협조 등

○ (그 외) 그 외 유관부서 협업사항 추가 발굴하여 내실있는 행사 개최 추진

□ 추진일정

○ '26. 2.~8. 행사 개최를 위한 유관부서 사전 협의

○ '26. 9. 행사계획 수립

○ '26. 12. 어울한마당 개최(대관 규모에 따라 인원 배분하여 4회진행)

□ 홍보계획

○ 직원 어울한마당 개최 및 참석 알림 공문 및 게시판 활용하여 전 직원 참석 적극 독려

9-3 저연차 공무원 공사감독 역량강화 교육 추진

주관부서	도시계획국 기술심사과	협조기관	인재개발원
담당자	최주현 주무관	연락처	051-888-2512

□ 추진배경

○ 「중대재해처벌법」 등 시민의 안전을 위한 발주청의 책임 강화

○ 구·군 토목팀장 직무교육 및 간담회 시 신규직원 중 비전공자가 많아 직원 직무교육 요청

○ 저연차 직원의 실무경험 부족에 따른 시공관리 및 시설물 안전성 확보의 어려움으로 건설사업 담당자 관리 역량 강화 필요

□ 세부 추진사항(주요내용)

○ (대 상) 구·군 시설직 공무원 7급 이하

○ (교육일정) 저연차 공무원 공사감독 실무 교육(9월, 인재개발원), 찾아가는 시설직 공무원 직무교육(상·하반기 16개 구·군 4개 권역으로 나눠 시행), 기술 세미나, 전시회 등 개최

○ (교육내용) 공사(용역) 설계, 발주, 감독 실무요령, 건설사업관리 사업 추진 단계별 이행 절차, 시설물 유지관리 등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시행 전	시행 후
○ 전문성 및 직무능력 부족으로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실무 담당 직원의 기술 및 경험 부족으로 대시민 서비스 질 저하	○ 저연차 공무원 공사감독 실무교육(2일) ○ 찾아가는 시설직 직무교육 시행(상하반기) ○ 기술 세미나, 전시회 등 개최(연 6회) - 연 6회 목표 횟수는 협력 단체 일정(휴가, 설명절 등) 제외, 매월 개최 목표로 최대치 설정

- 전문적 직무능력 개발 및 건설사업 관리 역량 강화로 대시민 서비스 질 향상과 저연차 공무원 조기 퇴사 방지에 도움

○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 전문성 및 직무능력 부족으로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실무 담당 직원의 기술 및 경험 부족으로 대시민 서비스 질 저하	○ 시대의 변화에 따른 직원간의 소통, 기술 교류 및 협업으로 전문성 강화 ○ 시공관리 및 시설물 안전성 확보로 건설사업 담당자 관리 역량 강화 및 대시민 안전 확보

- 초급 공사감독의 교육을 통한 전문성 및 직무능력 향상
  · 부산시 인재개발원 직무교육과정 신설
  · 찾아가는 시설직 공무원 직무교육(시행중) 내실화
- 건설기술 관련 단체와 교류 확대로 기술 동향 파악 및 네트워크 형성
  · 학술세미나, 토목 컨벤션, 전시회 등 산·학·관 협력 지속 추진
  · 119 토목구조대, 국토안전관리원 안전관리 지원사업 활성화

□ 추진체계

○ **(부산시)** 저연차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필요한 교육에 대한 수요 조사를 통해서 내실 있는 교육을 준비하고 저연차 공무들의 교육 참여를 위해 구·군 협조 요청

○ **(인재개발원)** 저연차 공무원들의 교육수요 조사 결과에 대한 강사 섭외 및 추후 교육진행을 고려 인원 및 교육 기간 확대 검토

□ 추진일정

○ 저연차 공무원 공사감독 실무 과정(9월, 인재개발원)

○ 찾아가는 시설직 공무원 직무교육(상・하반기)

○ 기술세미나, 전시회 등 개회 등(연 6회)

□ 홍보계획

○ 저연차 공무원 공사감독 실무 교육 시 관련 내용 안내(8월)

○ 찾아가는 시설직 공무원 직무교육 관련 내용 안내(5월, 11월)

○ 기술 세미나, 전시회 등 관련 사항 안내 및 보도자료 배포(수시)

9-4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성화

주관부서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협조기관	조직담당관 등
담당자	정성수 주무관, 안지호 주무관	연락처	051-888-1212, 1216

□ 추진배경

○ 공직자의 적극행정 유도를 위해 법령 제·개정, 면책기준 완화 등 제도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시행 중이나, 제도 활용 실적 저조

* 부산광역시 면책 실적 : '25년 2건, '24년 2건, '23년 3건, '22년 1건, '21년 1건

○ 제도 활성화를 위해 홍보 포함, 면책 신청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접근성을 강화하는 방안 필요

❖ **적극행정 면책제도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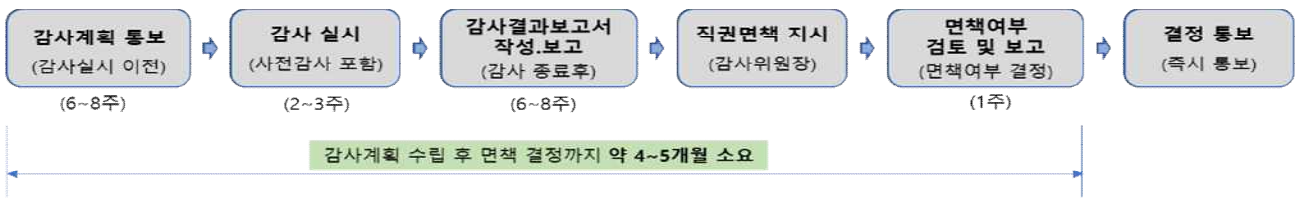
- 공직자 등이 **①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②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③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분요구를 하지 않거나 감경하는 제도
- ①, ②, ③ 동시 충족을 해야 면책요건 발생하며, 일반면책·현장면책·처리단계 직권면책이 있음

□ 세부 추진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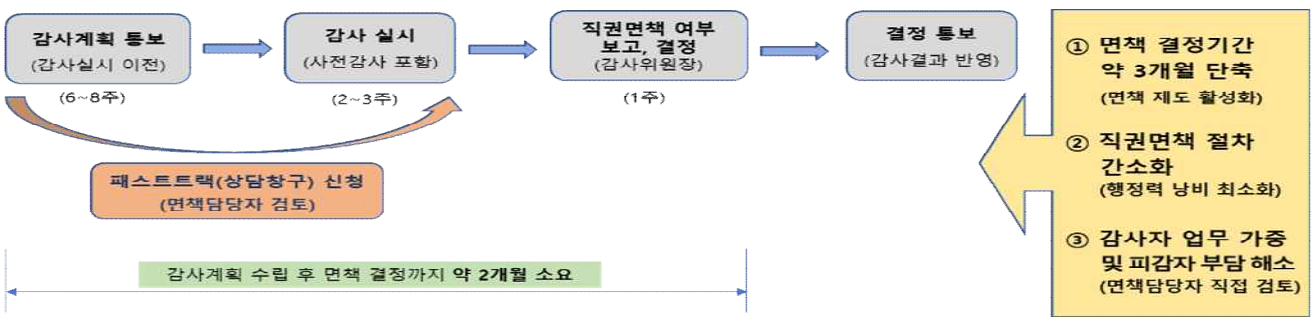
○ 기존 적극행정 면책제도 중 일반면책 및 현장면책은 유지하되,

○ **적극행정 직권면책 패스트트랙(상담창구)을 개설**하여, 처리단계 직권면책의 **소요 기간을 단축**하고, **피감자의 접근성 제고**

<< (기존) 처리단계 직권면책 >>



<< (개선) 처리단계 직권면책 >>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 **직권면책 패스트트랙(상담창구) 개설 및 제도 홍보**

시행 전	시행 후
○ 상담창구 부존재 ○ 찾아가는 현장 교육·상담 대상기관 : 구·군 16개소 ○ 찾아가는 현장 교육 실시 횟수 : 4회 ○ 구·군 자체감사활동 평가 적극행정 면책 실적 배점 : 2점 ○ 우수직원 인센티브 : 시장표창, 부상금	○ **직권면책 패스트트랙(상담창구) 개설** ○ 찾아가는 현장 교육·상담 대상기관 : 구·군,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38개소** ○ 찾아가는 현장 교육 실시 횟수 : **6회** ○ 구·군 자체감사활동 평가 적극행정 면책 실적 배점 : **5점** ○ 우수직원 인센티브 : 시장표창, 부상금, **인사우대 1종, 특별휴가 2일, 정책연수 가점 2점** ○ 카드뉴스 제작·행정포털 게시 : **분기 1회**

○ 기대효과 : **열정이 넘치고 일 잘하는 공직사회 조성에 기여**

시행 전	시행 후
○ 적극행정 면책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 ○ 감사 수감, 지적 사항 및 처분요구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한 소극행정 발생	○ 직권면책 패스트트랙(상담창구) 개설을 통한 제도에 대한 이해도 및 접근성 강화 ○ 적극행정 면책제도 인지 및 활용을 통한 공직자의 적극행정 유도
○ 감사자의 면책 여부 검토에 따른 업무 과중 우려 ○ 직권면책 결정 기간 4~5개월 소요	○ 상담 신청 건 면책 담당자 직접 검토에 따른 감사자 업무 부담 해소 ○ 직권면책 결정기간 2~3개월로 단축

□ 관련 조례 및 지침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4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제15조

○「부산광역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 '26년 소요예산

○ 사전 컨설팅감사 활성화(홍보 등) 15,000천원

□ 추진체계

○ 조직담당관 ‘2026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에 사전컨설팅 감사 및 적극행정 면책제도 반영하여 협업 추진

- 성과 보상과 보호 강화를 통한 도전하는 공직문화 조성 도모

□ 추진일정

○ ‘26. 1. 직권면책 개선방안 검토 및 유관부서(정보화정책과) 협의

○ ‘26. 2. 행정포털 내 적극행정 직권면책 패스트트랙(상담창구) 개설

○ (상시) 직권면책 패스트트랙(상담창구) 신청 건에 대한 검토 및 처리

□ 홍보계획

○ 찾아가는 사전컨설팅 감사 현장 교육 확대를 통한 적극행정 직권면책 패스트트랙 적극 홍보

* (당초) 구·군 16개소(4회) → (확대) 구·군,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38개소(6회)

○ 찾아가는 현장 상담창구를 활용하여 사전 컨설팅 상담 및 제도 홍보

* 구·군,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38개소 대상으로 매월 실시

○ 사전컨설팅 감사 및 적극행정 면책제도 카드뉴스 제작·게시(분기 1회)

○ 출근길 홍보캠페인 실시를 통한 직원 인식도 제고

○ 적극행정 공직자 대상 포상 강화를 통한 공직자 도전 의식 고취

9-5 소방공무원「찾아가는 상담실」상담 프로그램 운영

주관부서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협조기관	소속 직속기관
담당자	소방위 조정민	연락처	051-760-3043

□ 추진배경

○ 초기 심리상담으로 **관리·치료 필요군**을 **선별**하고 지속적인 **관리체계 구축**

○ 상담·교육·치유 등 **심리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마음건강 인식 제고**

□ 세부 추진사항(주요내용)

○ **마음건강 상담 전문가 방문**

- 소방관서별 상담사 배치로 상시 마음돌봄 지원체계 강화
- 최소 3회 이상 안전센터 방문, 심리상담을 통해 마음건강관리 인식개선
- 교육·홍보를 통해 마음건강 이해 및 직무 스트레스 해소
- 대면상담 원칙, **고위험군 지속관리** 및 필요시 **가족 상담 병행 실시**

○ **외상사고 노출 직원 보호프로그램**

- 심리적 응급처치 제공 및 **24시간 안심콜센터 운영(760-5777)**
- 초기상담 후 1개월 내 후속 상담 포함 **총 4회기 상담 실시**

○ **「마음건강 상담·검사·진료비 지원」 연계 운영**

- 지속상담 후 전문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상담사 상담소견서 제공
- (부산) 27개 협약기관, (전국) 254개 협약기관 이용 가능

□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 외상 경험 후 체계적 지원 부족 ○ 스트레스, PTSD 초기신호 인식 미흡 ○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인식 부족 ○ 심리적 문제 누적, 이직, 소진 위험증가	○ 조기개입 및 체계적 심리회복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초기 스트레스 반응 조기 발견 및 개입 강화 ○ 정신건강 관리 문화 정착, 적극적 참여 유도 ○ 심리회복력 향상, 근무 지속성 및 만족도 증가

□ ’26년 소요예산(국비 50%, 시비 50%)

○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 일반운영비 - 사무관리비 : 694,976**천원**

□ 추진체계

○ 대상자 선정

- 자체 마음건강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PTSD, 우울증, 자살위험군 및 신규임용자(임용예정자 포함), 복직 및 보직변경자 등

【 외상사고 노출직원 보호프로그램 적용 대상 】

1. 사망 및 자살사고 현장 출동
2. 영·유아 사망사고 현장 출동
3. 다수 사상자 발생 등 대규모 현장 출동
4. 구급대원(소방공무원) 폭언·폭행 발생
5. 동료의 순직 및 자살사고 발생
6. 현장활동 시 부상 및 상해 발생
7. 기타 직업적 또는 개인적 어려움으로 인해 극심한 혼란 상황에 처해있는 경우

○ 사업운영 세부내용

신뢰구축 활동	마음건강 증진활동	스트레스 관리	성과분석·평가
■ 마음건강교육 ■ 다양한 홍보활동 ■ 신뢰관계 조성	■ 마음건강 결과 안내 ■ 위험군 1:1개인상담 ■ 가족상담(필요시) ■ 집단상담 운영	■ 관리·치료 필요군 심층상담 ■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연계 관리 ■ 고위험군 병원 연계	■ 운영성과 분석 및 평가 ■ 상담사 수행결과 평가 ■ 사업개선 결과 도출

□ 추진일정

○ 소방관서별 찾아가는 상담실 상담사 지정 및 운영

○ 월 2회 이상 자체 교육 및 외부 정신건강 전문가 사례 자문

○ 성과평가 결과 및 개선사항 공유를 위한 관계자 평가회 실시

○ 참여자 대상 온라인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및 차년도 개선자료 활용

□ 홍보계획

○ 내부 소통창구를 통한 홍보 추진(카카오톡, 인스타그램, 유트브, 앱 등)

10. 공공부문 AI 대전환을 위한 인프라 구축

10-1 드론·센서 활용 AI기반 급경사지 안전관리

주관부서	시민안전실 자연재난과	협조기관	(재)부산테크노파크
담당자	권태균 주무관	연락처	051-888-2975

□ 추진배경

○ 급경사지 실시간 모니터링 및 AI 분석을 통한 조기위험 예측으로 재해예방

○ 급경사지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관리로 시민 생명 및 재산 보호

□ 세부 추진사항

○ 드론, 센서 활용 AI에 기반한 급경사지 안전관리 18개소

- 센서 드론, 스마트폴, AI분석 및 예측시스템 설치·모니터링

※ 연간 6개소 내외, 설치 규모 및 예산 범위 내에서 대상지 증·감 발생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시행 전	시행 후
○ 위험급경사지 육안 점검	○ 계측기 설치 18개소(3년간), 연간 6개소

○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 급경사지 조기위험 예측 어려움	○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급경사지의 변위·균열 등 위험 요소 조기 발견, AI기술을 통해 붕괴 위험 등 재해 발생 가능성 사전 예측 ○ 급경사지에 대한 주기적 안전점검을 상시점검(연중)으로 변경하여 대응·복구 중심의 재난관리를 사전대비·예방 체계로 전환 ○ 데이터 기반 위험도 분석을 통해 과학적·객관적 의사결정 지원

□ ’26년 소요예산

○ 드론・센서 활용 AI에 기반한 급경사지 안전관리 6개소: 6억원

□ 추진체계

○ (재)부산테크노파크 위·수탁 계약 체결 및 사업 추진

□ 추진일정

ㅇ ’26. 1.: 위·수탁 계약 체결 및 사업 추진

ㅇ ’26.~ ’28. : 급경사지 18개소 안전관리 수행

10-2	지역 자본 역외 유출 방지를 위한 AI · 데이터 기반 지능형 거버넌스 구축

주관부서	디지털경제실 경제정책과	협조기관	공공기관(시, 구·군,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정부·국가기관 등)
담당자	송상민 주무관, 김미향 주무관	연락처	051-888-7694, 7695

□ 추진배경

○ '민생안정과 혁신성장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 조성을 위해 지역상품 구매확대 정책 필요

○ 부산은 GRDP 비중이 유사한 시도와 비교 시 지역업체 계약실적 금액과 비중이 낮은편(부산: 42,511억원, 41.53%, 인천: 49,667억원, 50.46%)[24년 기준]

○ 각종 물품, 공사, 용역 등 지역상품 구매 확대 및 공공기관 발주현황 모니터링으로 지역자본의 외부 유출 방지 및 지방세원 확충 도모

➡ 지역 자본 역외 유출 방지를 위한 AI · 데이터 기반 지능형 거버넌스 구축으로 실효성있는 지역상품 구매확대 정책 추진

□ 세부 추진사항

○ 지역상품 구매 확대 정책 추진

- 추진목표: 지역상품 구매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확립
- 추진방향: (공공) 각종 계약(공사·용역·물품)시 지역상품 구매 확대
  (민간) 인센티브 부여·붐업 조성을 통한 민간·시민 참여 유도
- 추진전략: 공공부문 구매 강화, 민간부문 참여 확대, 협력시스템 구축

* (공공 선도적 구매) 지역업체 수주율 향상, 모니터링 및 인센티브 확대, 제도개선

* (민간 가치 소비 확산) 인허가 절차 단축, 정책자금 이차보전율 상향 등 인센티브 제공

* (상생 시스템 구축) 컨트롤타워 운영, 공공·민간 협력체계 구축, 붐업 체계 운영

○ 공공계약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운영

- 시스템명: 부산광역시 공공계약 모니터링 시스템(busanproduct.co.kr)
- 개발주체: 경제정책과 자체 개발(Google Gemini AI 및 NCP 클라우드 활용)
- 대　　상: 시 및 구·군 공무원, 공기업·출자·출연기관 계약 담당자

- 주요기능: 조달청 공공계약 데이터 활용 지역업체 계약현황 모니터링

  * 조달청 OpenAPI 계약데이터 13종 연동 및 11단계 필터링을 통한 실시간 계약률 산출
  * 역외 유출 품목 분석 및 대체 가능 부산 지역업체 · 상품 리스트 추천
  * 대형 유출(50억 이상) 및 보호제도 미적용 공고 실시간 포착 및 알림
  * 부산시 및 산하기관, 국가 및 정부공공기관 대상 실시간 지역업체 계약률 순위 표출
  * 지역업체 계약 실적을 부가가치 유발액, 취업 유발 인원 등 객관적 지표로 계량화

○ 지능형 업무매뉴얼 개발·운영

- 명　　칭: (가칭)부산광역시 지역상품 상생협력 어드바이저
- 목　　적: 계약 법령 및 지침 해석 등 실시간 데이터 기반 지역업체와의 계약 가능 여부를 즉시 판단하여 지역업체 수주율 제고 지원
- 개발주체: 경제정책과 자체 개발(Google Gemini AI 및 NCP 클라우드 활용)
- 대　　상: 시 및 구·군 공무원, 공기업·출자·출연기관, 부산시 소재 국가기관 및 정부공공기관 계약 담당자
- 주요기능: 지능형 법령·지침 검색, 지역업체 매칭 및 사전 검토 등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시행 전	시행 후
○ 지역업체 계약실적 저조('24년, 41.5%*) 및 목표 관리 부재 * 지역상품 계약실적/총 계약실적(조달데이터허브)	○ 데이터 기반 지역업체 계약 수주 확대를 위한 '26년 정책 목표 수립('26년, 70%*) * 지역상품 계약실적/총 계약실적(부산시 공공계약 모니터링 시스템 *조달청 OpenAPI 계약데이터 연동)
○ 지역상품 구매 확대 정책 부재 및 제도기반 미비	○ 지역상품 구매 확대 종합계획 수립 및 조례 제정 등 제도기반 마련
○ 지역업체 계약실적 실시간 파악 애로 * 조달데이터허브 기준 최소 6개월 격차 발생	○ 공공계약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통한 지역업체 계약실적 실시간 모니터링 및 계약단계별(발주·입찰·계약)·기관별 모니터링
○ 지역업체 우선구매 업무처리 매뉴얼 부재	○ 지역업체 수주확대를 위한 지능형 업무매뉴얼 개발·운영으로 발주 담당자 업무 지원 및 지역업체 수주율 제고

○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 지역상품 구매 저조로 인한 중소기업 경영 애로 및 지역경제 약화 우려	○ 지역상품 구매 확대로 지역 중소기업 보호·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지역상품 구매 저조 사유 파악 애로	○ 조달청 계약 데이터 객관적 분석 가능
○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위한 업무매뉴얼 부재로 발주 담당자 법령·지침 파악 애로	○ 지역업체 수주확대를 위한 지능형 업무매뉴얼 개발·운영으로 발주 담당자 업무 지원 및 지역업체 수주율 제고

□ 관련 조례 및 지침 개정계획

○ 부산광역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제정 완료('26.2.25.)

□ '26년 소요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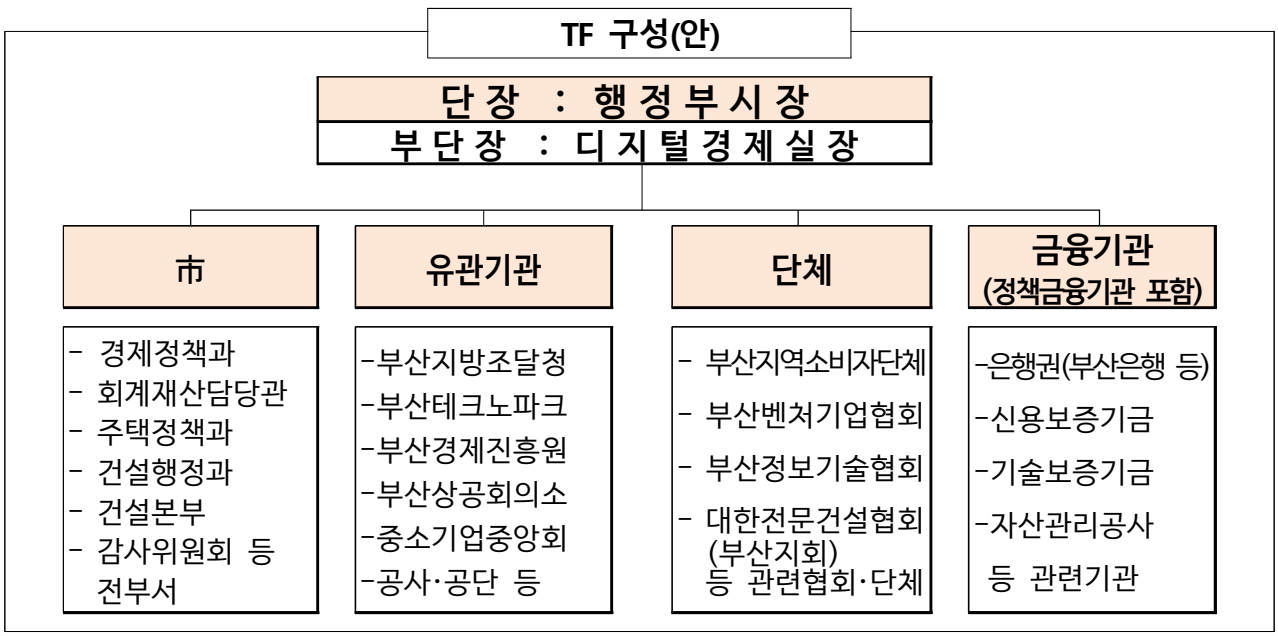
○ 지역상품 구매확대 정책 추진 : 3억 원(시비)

▹ 지역상품 구매확대 회의 운영 0.4억 원, 홍보콘텐츠 제작 1억 원 및 정책 홍보 1.6억 원

□ 추진체계

○ 지역구매 확대 컨트롤타워 운영 등 협업시스템 구축

- (**컨트롤타워 운영**) 산업·기업 분야 정책고문 위촉,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성
- (**TF 구성**) 부산광역시, 유관기관, 민간단체, 금융권 등 연계 TF 구성



- (**MOU 체결**) 부산지역 공공기관 및 경제관련 협·단체* 업무협약 체결

  * 시, 구·군,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부산소재 특별지방행정기관, 공공기관(이전공공기관 포함), 교육청, 금융기관(정책금융기관 포함), 경제관련 협회·단체 등 100여 개 기관

□ 추진일정

○ ’26. 1.: 지역상품 구매 활성화를 위한 민·관합동 회의 개최(’26.1.27.)

○ ’26. 2.: 지역상품 우선구매 업무협약식 개최(’26.2.10.)

○ ’26. 2.: 부산광역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제정(’26.2.25.)

○ ’26. 3.: 지역상품 구매확대 종합대책 보고회 개최(’26.3.26.)

○ ’26. 3.: 부산시 공공계약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영

○ ’26. 4.: 지능형 업무매뉴얼 개발 및 챗봇 상담 제공

○ ’26. 4.~: 지역상품 구매 확대 정책 홍보콘텐츠 기획·제작 및 홍보

○ ’26. 5.~: 공공계약 모니터링 등 지역상품 구매실적 분석 결과 공유 및 지역업체 수주율 제고

□ 홍보계획

○ ’26. 2.: 지역상품 구매확대 시민 붐업행사 개최 등 정책 언론 홍보

○ ’26. 3.: 공공기관 참여 현수막, 전광판 등 매체 활용 대시민 홍보, 지역상품 구매확대 종합대책 보고회 개최 등 정책 언론 홍보

○ ’26. 4.: 정책 기획보도, 언론 지면 광고 및 정책 홍보콘텐츠 기획, 시 홈페이지 내 지역상품 구매현황* 등 정책 성과 홍보

  * 공공계약 모니터링 시스템 연계

○ ’26. 5.: 정책 공감대 형성을 위한 대시민 캠페인 추진

○ ’26. 6.: 브랜드페스타 등 연계 우수기업 판로확대 지원 등 붐업 홍보

○ ’26. 하.: 지역상품 구매 확대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및 고용창출,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 등 우수사례 종합 홍보

10-3 인공지능 지역 확산 지원 사업

주관부서	미래기술전략국 인공지능소프트웨어과	협조기관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담당자	한동훈 주무관	연락처	051-888-4594

□ 추진배경

○ 부산시 AI 종합전략에 따른 글로벌 AI 허브 도시 부산 실현 총력 필요

○ 범국가적 차원의 AI 정책 방향에 선제적 대응으로 지역 AI 거버넌스 주도

○ 지역 AI 경쟁력 및 주도권 확보를 위한 '부산광역시 인공지능위원회' 중심 시장 주도(Market Driven) AI 종합계획 수립·실행 필요

□ 세부 추진사항

○ **(부산 AI 일자리 챌린지)** AI를 활용한 다양한 일자리 창출, 부산시의 현안과 연계된 기존 문제를 AI 기반의 해결책 제시

○ **(시민 참여형 AI 포럼)** AI의 사회적 영향과 시민 참여 기반의 기술 수용성 및 윤리 논의

○ **(AI 개발자 포럼)** 지역 개발자와 기업 간 기술 교류 및 정책 연계를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 강화

○ **(AI 교육 사례 공유 컨퍼런스)** 청소년 AI 교육사례를 공유하고 부산 교육 전반의 AI 활용 기반 확립 및 지역 확산

○ **(AI 이음 밋업데이)** 정책 수요자와 기술 공급자 간 매칭을 통해 지역 산업 전반에 AI 기술 도입 및 디지털 전환 가속화

○ **(AI 개발 경진대회)** 시민·대학생 대상 일반부와 전문가부로 구분, 부산 지역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서비스 맞춤형 AI 솔루션을 발굴 지역 기관 및 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실증 및 고도화 기회를 제공

○ **(부산광역시 인공지능위원회 운영)** 부산시 AI 정책 사업 전반에 대한 심의 자문을 위한 정기 위원회 운영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시행 전	시행 후
○ 지역 AI관련 행사 부족으로 민·관·산·학·연 교류 및 시민·전문가의 참여 기회 부족 ○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AI솔루션 발굴 체계 부재 ○ AI 정책 심의 자문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미흡 ○ 지역 기업의 AI 도입 및 활용 역량 부족	○ 포럼 및 컨퍼런스, 조선산업 AI 전환 얼라이언스 출범 등 3회 이상 250명 ○ 일반부 25팀, 전문가부 25팀, 100명 우수 3개팀 기관·기업 연계 지원 ○ AI위원회 정기회의 4회, 기획단 회의 6회 이상 ○ 기업 컨설팅 50개사 참가 30개사 이상 지원

○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 수도권 중심의 AI 개발·투자 집중으로 지역 간 기술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부산 지역 내 AI 활용 기반 및 시민 체감형 서비스가 부족하여 인공지능의 실질적인 지역 확산이 미흡한 실정	○ AI 일자리 챌린지 및 경진대회를 통해 부산 현안과 연계된 AI 기반 해결책을 발굴하고, 지역 기관·기업 연계로 실질적 사업화 및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 시민 참여형 AI 포럼 운영으로 AI 기술 수용성 및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청소년 AI 교육사례 공유를 통해 지역 전반의 AI 활용 기반 확산 ○ AI 이음 밋업데이 및 개발자 포럼을 통해 정책 수요자와 기술 공급자를 연결하고, 지역 산업 전반의 AI 도입 및 디지털 전환 가속화 ○ 인공지능위원회 중심의 거버넌스 운영으로 시장 주도형 AI 종합계획을 체계적으로 실행하고, 글로벌 AI 허브 도시 부산 실현을 위한 지역 AI 주도권 확보

□ '26년 소요예산

○ (총사업비) 4.5억*(시비)

* 부산 AI 일자리 챌린지 1.2억, 시민 참여형 AI 포럼 0.4억, AI 개발자 포럼 0.3억, AI 교육사례 공유 컨퍼런스 0.3억, 시민 참여형 AI 포럼 0.4억, AI 경진대회 1.3억, 인공지능위원회 운영 0.5억, AI 이음 밋업데이 0.1억

□ 추진체계

○ (인공지능소프트웨어과) 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사업비 교부·정산 등 총괄

○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사업계획서 작성, 기획·운영, 홍보, 사업비 집행 및 관리 등

□ 추진일정

○ ‘26. 1. : 2026 부산 AI 교육 미래 전략 컨퍼런스 개최

○ ’26. 2. : 부산 조선산업 AI 전환 업무협약 및 얼라이언스 출범

○ ‘26. 4. : AI 이음 밋업데이

○ ‘26. 7. : 시민 참여형 AI 포럼

○ ’26. 9. : 부산 AI 일자리 챌린지

○ ‘26. 11. : AI 개발자 포럼, AI 개발 경진대회

○ ’26. 1.~12. : 부산시 인공지능위원회 운영

□ 홍보계획

구 분	채널명	대 상	비 고
공식채널	기관 홈페이지	기관·기업·일반시민 등	사업공고 게시
	부산AI실증지원센터 홈페이지	기관·기업·일반시민 등	공지 게시
	보도자료(언론배포)	언론사	-
공식SNS	페이스북	채널 팔로워	홍보물 게시
	카카오톡	채널 팔로워	홍보물 게시 및 팔로워 대상 메시지 발송
협력 네트워크	메일 발송	기업·대학·협단체	-
홍보자료 배포	포스터 배포	유관기관	-
대외공문	홍보 및 참여요청 공문	유관기관·대학·협회	-
공식메일	뉴스레터	협력기관·기업·협회	-

10-4 부산형 지능행정 구현을 위한 AI 서비스 확대

주관부서	행정자치국 정보화정책과	협조기관	행정안전부, 전부서
담당자	김미란 주무관	연락처	051-888-2372

□ 추진배경

○ 「국가 AI 전략 정책방향」('24.9.)에서 2030년까지 공공부문 AI 도입률 95% 달성 목표 및 공공 AI 3대 전략 목표 제시

- 공공 AX는 국가 AX의 중요한 마중물 역할, AI 3대 강국 실현 출발점임에 따라 행정 프로세스와 공공서비스 전면 재설계 필요

○ 「부산형 지능행정 구현을 위한 AI서비스 도입」('25.4.~'26.6.) 운영에 따른 AI 서비스 지속적인 확산

- AI데이터 확장, 실시간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축을 통한 AI학습 자동화 구현 등 필요

□ 세부 추진사항

○ **AI 인프라 확대 구축**

- AI행정서비스 전 분야 확대 및 고도화된 생성형 AI기능 도입에 대비하여 운영서버(2대) 및 자료저장장치(1식) 용량 증설

○ **AI 데이터 플랫폼 확대 구축**

- AI 서비스 확산을 위한 도시·교통·해양분야 8개 실·국* 34개 부서 학습용 벡터DB 구축(각종 업무매뉴얼, 관련지침, 결재문서 등)

* 도시혁신균형실(5), 미래공간전략국(3), 도시계획국(6), 주택건축국(4), 미래디자인본부(3), 교통혁신국(4), 푸른도시국(4), 해양농수산국(5)

- 데이터 수집, 처리, 저장, 모델 학습까지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AI 학습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축 등

① 자료수집 ▶ ② 학습자료 검토 및 보완 ▶ ③ 학습자료 RAG 구축 및 서비스 적용

- 반복업무 간소화 및 자동화를 위한 정책계획서, 보도자료, 행사 시나리오 등 다양한 초안 자동 작성, 대화형 질의응답 품질 향상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시행 전	시행 후
○ '25년 시범사업만으로는 실효성 확보에 한계 - 다단계 구축이 필요한 복합시스템으로 단발성 구축으로는 완성도 있는 성과 창출이 불가능	○ AI 서비스 고도화로 행정혁신 선도 - 도시/교통/해양 분야 AI학습, 벡터DB구축, sLLM 학습 강화 등 - 운영서버 2대, 자료저장치 용량 증설 1식 등

- 인공지능 학습률 80% 달성 ▷ 산출근거 : (실제 AI학습완료건수/자료 제출 건수) × 100
- AI인프라 확대 구축률 100% 달성 ▷ 산출근거 : (도입수량/목표수량) × 100

○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 반복업무 과다로 직무만족도 저하 ○ 데이터 분산, 수동 검색 등으로 데이터 관리 최신화의 어려움	○ AI를 활용한 반복업무 자동화로 업무효율성 향상 ○ AI학습기반 데이터 정제·연계를 통한 고품질 행정데이터 확보

- 부산시 특화 인공지능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AI 인프라 조성을 통한 AI 행정서비스 안정적 운영
- AI 협업 기반 일상 업무 효율화 및 정책지능 고도화를 통해 최적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업무 수행 방식의 효율성을 제고

□ '26년 소요예산

○ 부산형 인공지능 서비스 운영 35억 ▷ 고도화 23억, 개발 6.5억, 인프라 5.5억

□ 추진체계

○ 공공분야 AI 행정혁신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 기반 구축

- 부산시-네이버클라우드(주) 업무협약* 체결('25.4.8.~'27.12.31.)

* 협약내용 : 민·관협력 공공분야 AI행정혁신 추진기반 구축 선도, 지속가능한 AI·데이터 기반 지능행정 구현의 성공사례 도출 협력 등

□ 추진일정

○ ‘26. 2 ~ 7월 : AI 인프라 확대 구축 및 운영

○ ‘26. 4 ~ 12월 : AI 데이터 플랫폼 확대 구축

- 사업계획 수립(’26.4월), 사업추진(’26.5.~12월), 고도화 서비스 개시(’27.1월)

□ 홍보계획

○ AI 행정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 병행(수시)

- 업무게시판을 통한 AI서비스 활용팁 공유, 사용인증 이벤트 등

○ 사업 참여 확대 유도

- AI 서비스 적용 확대를 위한 공공분야 AI/AX 관련 정책 동향 등 홍보

10-5 AI 기반 소형어선 등 일체형 블랙박스 개발

주관부서	해양농수산국 수산정책과	협조기관	㈜원데이터기술 외 2
담당자	최재문 주무관	연락처	051-888-5411

□ 추진배경

○ 선체 노후화, 선원 고령화,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부산 관내 연근해 어선 사고발생* 및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

* 사고발생 : ('21) 40건 → ('22) 46건 → ('23) 53건 → ('24) 51건 → ('25) 52건

** 인명피해 : ('21) 7명 → ('22) 2명 → ('23) 2명 → ('24) 18명 → ('25) 31명

○ 해난사고 사전예방 및 선제적 대응체계 마련으로 인명피해 최소화 및 선내 데이터 확보 및 원인 분석을 통해 신속한 분쟁 해결 필요

□ 세부 추진사항

○ 연구과제명 : AI 기반 소형선박 및 동력수상레저기구 선상사고 예방을 위한 일체형 블랙박스 개발

○ 사업기간 : 2025. 4. ~ 2027. 12.(33개월)

○ 총사업비 : 21.9억원(국비 14.6, 시비 3.65, 기타 3.65)

○ 사업주체 : ㈜원데이터기술[주관연구개발기관] 외 2[공동연구개발기관]

○ 주요내용 : 데이터 AI 분석 기술 기반 소형어선 등의 선상안전 관리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일체형 인공지능 블랙박스 개발

- 1차년도(2025) : 블랙박스 요소 기술 개발 및 기본 구조 설계
- 2차년도(2026) : 일체형 블랙박스 시제품 개발
- 3차년도(2027) : 블랙박스 및 안전관리 관제시스템 실증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시행 전	시행 후
○ 블랙박스 요소 기술 개발 및 기본 구조 설계	○ 일체형 블랙박스 시제품 개발 1식

○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 해난사고 사전예방 및 선제적 대응 체계 부재 ○ AI 기반 사고예방 어선설비 부재 및 사고 원인 규명·분석 애로	○ 선내 데이터 확보 및 원인 분석을 통해 신속한 분쟁 해결 ○ AI 블랙박스 설치로 해난사고 사전예방 및 신속 대응으로 인명피해 최소화

□ ’26년 소요예산

○ 2차년도(2026) 연구개발(R&D) 예산 : 795백만원

□ 추진체계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연구개발사업 기획·평가 등 총괄

○ (부산광역시) 관내 기관·업계 협조 체계 구축 및 행정지원 등

○ (원데이터기술 외 2) AI 기반 블랙박스 연구개발(R&D) 추진 등

□ 추진일정

○ ’26. 5월 : 2차년도(2026) 연구개발비 집행(시비 132.5백만원)

○ ’26. 11월 : 2차년도(2026) 연구개발 과제(시제품 개발) 추진

○ ’27. : 3차년도(2027) 연구개발 과제(실증) 추진 및 개발 완료

□ 홍보계획

○ 대한민국 해양모빌리티·안전 엑스포 등 국내·외 유사 박람회 등 참관을 통한 AI 블랙박스 홍보

10-6 기상특보 단계별 AI 지능형 콜백시스템 운용을 통한 119 신고폭주 대응력 강화

주관부서	소방재난본부 119종합상황실	협조기관	-
담당자	소방경 박경민 소방위 이현지 소방장 정인환	연락처	051-760-3151 051-760-3152 051-760-3143

□ 추진배경(신고폭주 그간의 대비)

○ **부산은 여름철(6월~9월) 태풍·호우 빈발 지역으로 단기 신고 폭주 발생**

- 전 접수대 통화 중, 신고자는 대기 또는 포기 →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

* '20년 초량 침수사고 당시 시간당 3,115건의 신고가 집중되고 실제 신고접수율 49.8%였음

○ **기존 접수대 추가 인프라 단계적 확충**

① ('21년 9월) 119안전체험관에 총 18억원 투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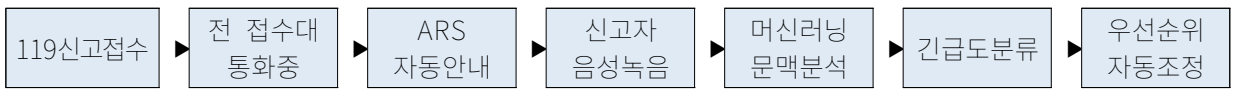
→ 주 접수대 8대 + 보조 접수대 12대 증설 (총 20대 추가)

② 기상특보 단계별 수보대 최대 88대까지 증설 운용체계 구축

③ ('25년 12월) AI 지능형 콜백 시스템 도입 완료 '26년 실전 적용 첫 해

□ 세부 추진사항

○ **지능형 콜백 시스템 운용 실전적용 - 음성인식 긴급도 자동 분류**



- 신고 폭주 시 미완료 신고건 목록에서 특정 키워드 추출 → 긴급도 분류
- **긴급 신고** : 목록 최상위 이동 + **적색 표기** → **우선 처리**
- **실활용 학습효과 통해 자동분류 정확도 높여 고위험 신고 우선 골든타임 확보**

○ **지능형 콜백 시스템 활용 비긴급 신고 소방서 이관 운용 및 신고폭주 훈련**

- 비긴급 신고는 소방서로 이관 처리 → 119종합상황실은 긴급신고에 최우선
- 신고폭주훈련 종합상황실↔소방서 합동훈련 연 2회 실시 (상·하반기)
  상황실 비상근무자 인력 보강 및 내근 예비상황요원 평시 훈련 통해 대비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시행 전	시행 후
○ 위험도 구분없는 선착순 접수 - 고위험 신고 대응지연	○ AI 음성인식 긴급도 자동분류 - AI 분류 정확도 85% 이상
○ 신고폭주시 전 접수대 통화중 - 신고자 대기, 포기 긴급신고 대응 공백	○ ARS 자동접수 + 콜백 처리율 90%이상 - 신고포기 제로화
○ 신고폭주 시 긴급과 비긴급의 혼재 및 인력 등의 한계	○ 신고폭주대비 상황실 ⇆ 소방서 합동훈련 연 2회 100% 완료

- 수보대 증설 88대 및 ARS 긴급, 비긴급 자동 분류로 놓치는 콜 없도록 함

○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 ARS 전환 신고건 100% 역걸기 시행 통한 긴급, 비긴급 근무자 직접 수동구분	○ ARS 시 AI 신고 전환으로 신고포기 감소와 긴급상황대응 공백 최소화
○ 위험도 구분 없는 선착순 접수 → 고위험 신고가 밀려 대응 지연 발생	○ AI 음성인식 기반 긴급도 자동 분류 → 긴급신고 즉시 최상위 배치, 평균 응답 시간 단축으로 골든타임 확보
○ 긴급·비긴급 신고 혼재 → 상황대원 부담 가중, 대응 역량 분산	○ 비긴급 신고 소방서 자동 이관 → 종합상황실은 긴급신고 대응에 역량 집중
○ 인력중심 대응체계로 신고폭주 시 한계와 협업 체계 미흡	○ AI 기반 지능형 대응체계 전환하여 안정성 확보 및 상황실과 소방서 역할 분산 통한 유기적 협업 체계 구축

□ '26년 소요예산

○ '25년 AI 신고접수 시스템 (+지능형 콜백 시스템) 구축완료 6.5억
'26년도 유지보수 등 추가 예산 없음

□ 추진일정

○ '26. 1. ~ 3. 전년도('25) 운용 데이터 분석 및 시스템 점검

○ '26. 4. ~ 5. 상반기 신고폭주 대비 상황실 ↔ 소방서 합동훈련 (1회)

○ '26. 6. ~ 9. 여름철 신고폭주 대응 비상운용체계 돌입

○ '26. 7. ~ 9. 여름철 호우·태풍 시즌 콜백시스템 실전 운용 (성과 측정)

○ ’26. 9. ~ 10. 하반기 합동훈련 실시 (2회) 및 성과 분석

○ ’26. 11. ~ 12. 연간 콜백 처리 현황 결과보고

□ 홍보계획

○ 신고폭주 대응 지능형 콜백시스템 운용 성과 홍보

- 홍보일자 : ’26. 9. ~ (여름철 운용 이후)
- 홍보방법 : 소방본부 SNS, 언론사 보도자료 배포
- 내용 : ’신고폭주 이제 놓치지 않습니다’
  기상특보 단계별 콜백시스템 운용 성과 홍보

10-7 생성형 AI 기반 민원해결도우미「119도와줘봇」챗봇 운영

주관부서	소방재난본부 해운대소방서	협조기관	
담당자	소방위 하만수	연락처	051-760-4691

□ 추진배경

○ **단순·반복 민원 증가로 전문 민원 대응 여건 저하**

- 단순 안내성 민원(위치, 절차, 서식 등) 비중이 높아 업무 효율성 저하
- 소방법령 해석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민원에 충분한 대응 시간 확보 곤란

○ **소방법령 관련 민원 접근성 부족**

- 민원인이 소방 관련 법령 및 절차를 이해하기 어려워 반복 문의 발생
- 다중이용업소 업주 등 대상자별 필수 교육·신고 절차 안내 부족

○ **생성형 AI 활용을 통한 행정 품질 향상 필요**

- 반복 민원 자동화를 통해 직원은 고난도·전문 민원에 집중
- 민원 서비스의 정확성 및 전문성 향상 필요

□ 세부 추진사항

○ **생성형 AI 기반 「119도와줘봇」 챗봇 구축 및 운영**

- ChatGPT 기반 소방서 전용 민원응대 챗봇 개발
- FAQ, 법령, 민원절차, 교육안내 등 데이터 학습

○ **민원·행정 처리 연계 기능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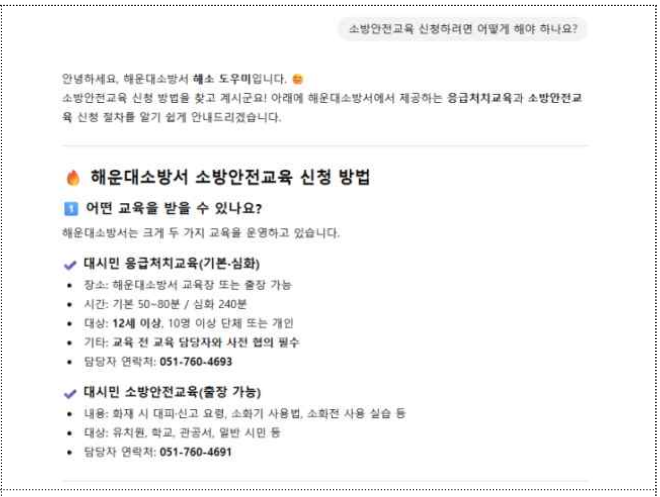
- 예방행정 관련 규정 및 기준 설명 기능 구현
- 소방서 위치, 전화번호, 부서 안내 자동 제공
- 민원서식 다운로드 및 작성방법 안내

○ **24시간 비대면 민원응대 체계 구축**

- PC·모바일·QR코드 기반 접근성 확보
- 시간·장소 제약 없는 상시 민원 상담 서비스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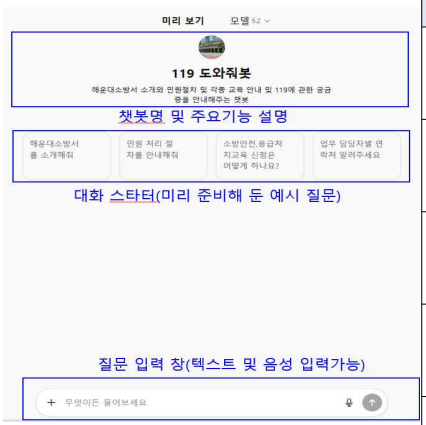


ChatGPT 기반 챗봇 화면



질문 및 답변

※ 기능설명 및 차이점



구 분	Chat GPT 챗봇	카카오톡 챗봇
답변방식	상황에 맞게 답변 생성	미리 정해진 답변
질문방법	자유롭게 말로 질문	버튼 선택 위주
이해수준	문맥·의도 이해	키워드 중심
추가질문	자연스럽게 이어서 가능	거의 불가능
설명능력	자세한 설명·요약 가능	짧은 안내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 생성형 AI(ChatGPT) 기반 「119도와줘봇」 챗봇 구축 및 운영
- 민원실 배너 게시를 통한 챗봇 이용 안내 및 현장 홍보
- 소방서 홈페이지 배너 게재를 통한 온라인 접근성 강화
- 교육 안내 우편물 내 QR코드 삽입을 통한 정기 홍보 추진

○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 민원 서비스 - 단순 안내 수준 - 정보 접근 어려움 - 교육·신고 등 절차 혼선 ○ 조직 운영 - 반복 민원 처리 부담 - 단순 민원 대응으로 업무 집중도 저하 ○ 대시민 체감 - 근무시간 내 전화·방문 중심 민원 처리 - 민원서식, 교육정보 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불편	○ 민원서비스 - 소방법령까지 포함한 전문 정보 제공 가능 - 민원인이 스스로 필요한 정보 즉시 확인 가능 - 맞춤형 안내 제공으로 혼선 최소화 ○ 조직운영 - AI가 대체하여 업무 경감 - 전문·고난도 민원에 집중 가능 ○ 대시민 체감 - 24시간 언제든지 민원 상담 및 정보 확인 가능 - 챗봇을 통해 필요한 정보(서식·교육·절차) 한 번에 제공 ☞ **소방행정의 전문성·신속성·정확성 동시 향상**

□ '26년 소요예산

○ Chat GPT 월구독료($20/1개월)

□ 추진일정

○ 2026. 2 : 메인 데이터 구축 및 업로드

- 해운대소방서 맞춤 데이터 학습 파일 구축

(행정·민원·교육·훈련·예방업무·전화번호 등)

○ 2026. 2~5 : 민원 대응 정확도 테스트

- 예방·구급·구조·행정 부서별 담당자 참여
- 반복 질문 개선 및 데이터 보완

○ 2026. 6 : 정식 오픈 및 홍보

- 정식 서비스 개시(보도자료 배포 및 SNS 홍보, QR코드 배포)

○ 2026. 6~: 고도화 및 유지관리

- 데이터 업데이트 반기 1회 이상

□ 홍보계획

○ 온·오프라인 홍보 병행

○ 소방서 홈페이지 및 SNS 게시

○ 민원실 및 우편물 QR코드 배포

○ 시민 참여 유도 → 챗봇 이용 안내 및 체험 유도
사용자 피드백 수집 및 반영

10-8 AI로 실현하는 1:1 맞춤형「우리 가구 안전 디지털 처방」

주관부서	소방재난본부 금정소방서	협조기관	금정구청(복지정책과), 카카오톡(비즈니스)
담당자	소방교 김민준	연락처	051-760-4767

□ 추진배경

○ 공급자 중심의 획일적 안전 교육의 한계

- 가구별 특성(고령자·영유아 등)을 고려하지 않은 단방향 정보 전달로 실질적인 화재 대응력 강화에 한계

○ 행정 효율성 저하 및 민원 대기 시간 발생

- 단순 반복적 상담에 평균 2~7일이 소요되어, 시민들의 즉각적인 안전 정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행정력이 낭비됨.

□ 세부 추진사항

○ AI 기반 하이퍼 개인화* 「안전 처방전」 발송

* 하이퍼 개인화: AI 기반의 초정밀 실시간 맞춤 서비스

【「안전 처방전」발송 프로세스】

- **서비스 경로**: '금정소방서 민원 톡' 내 AI 챗봇 구축
- **입력 항목**: 거주 층수, 주거 형태(노후 아파트/신축 등), 가구 구성원(고령자, 영유아, 반려동물 여부)
- **처방 내용**: 분석 데이터에 기반한 맞춤형 피난 경로 안내 및 가구 맞춤형 소방용품 추천

○ 현장 방문 및 주민 소통 창구 운영

- 노인 복지관 및 어린이집 방문 교육 시 AI 처방전을 통한 실습형 안전 교육 실시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시행 전	시행 후
○ 민원 응대 및 상담 장시간 소요 - 전화·대면 상담 위주로 답변까지 평균 48시간(2일) 소요 ○ 획일적 안전 정보 배부 - 챗봇 기반 1:1 상담을 통해 즉시 응답(30초 이내) 제공	○ AI 즉시 응대 시스템 구축 - 챗봇 기반 1:1 상담을 통해 즉시 응답(30초 이내) ○ 개인별 맞춤형 안전정보 제공 - 가구 특성이 반영된 '디지털 처방전' 50건 이상 발행

○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 막연한 불안감 및 정보 격차 - 아파트 화재 시 대피 방법 혼선 및 우리 집 맞춤형 장비 미인지 ○ 반복적 민원으로 업무 부하 - 단순·반복적인 소방 시설 및 대피 요령 문의에 대한 행정력 낭비 ○ 공공 주도의 일방적 관리 - 소방서의 점검과 단속에 의존하는 수동적 안전 문화	○ 체감형 안전 신뢰도 향상 - 거주 환경에 딱 맞는 '안전 처방'을 통해 화재 대응 자신감 및 실제 생존율 제고 ○ 데이터 기반 지능형 행정 구현 - 저비용·고효율 AI 시스템 도입으로 단순 업무 자동화 및 고부가가치 현장 업무 집중 가능 ○ 시민 참여형 자율 안전 문화 - 스스로 우리 집 안전을 점검하고 인증하는 능동적이고 지속 가능한 민·관 협력 안전 생태계 구축

□ 관련 조례 및 지침 개정계획

○「소방기본법」 제17조 소방교육·훈련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 '26년 소요예산

○ AI 챗봇 API 이용료 및 콘텐츠 저작권료(500,000원)

○ 홍보용 배너 및 QR코드 스티커 제작(500,000원)

□ 추진체계

○ (금정소방서) AI 시나리오 개발, 안전 데이터베이스 구축, 현장 홍보 총괄

○ (금정구청) 취약 가구(독거노인 등) 대상 서비스 안내 및 데이터 협업

○ (카카오톡) 카카오톡 채널을 통한 서비스 인터페이스 제공

□ 추진일정

○ ('26. 4.~5.) AI 맞춤형 답변 시나리오 설계 및 인포그래픽 제작

○ ('26. 6.~7.) 카카오톡 챗봇 시스템 구축 및 내부 시범 운영

○ ('26. 8.) 서비스 정식 개시 및 대시민 홍보

○ ('26. 9.~11.) 이용자 데이터 분석 및 만족도 조사를 통한 서비스 고도화

□ 홍보계획

○ (온 라 인) 소방서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지역 커뮤니티 등 카드뉴스 게시

○ (오프라인) 관내 221개 아파트 단지 엘리베이터 및 게시판에 '우리 집 안전 처방' QR 스티커 부착

○ (현　　장) 소방안전 교육 및 주택 점검 시 시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현장 안내

10-9 AI 기반 도서 추천 서비스 도입

주관부서	부산도서관	협조기관	구·군 공공도서관 교육청 공공도서관 도서관 관련부서
담당자	한충승 주무관	연락처	051-310-5425

□ 추진배경

○ AI 기술 발전과 데이터 기반 행정 확산에 따라 이용자 맞춤형·지능형 도서 검색서비스에 대한 시민 요구 증대

○ 통합 서버(회원정보, 도서정보)로 운영되는 부산의 도서관 특성 감안, 중복 투자 방지 위해 부산도서관에서 서비스 도입과 제공 필요

○ 시 · 구 · 군 · 교육청 요구사항 반영, 표준화된 모델 구축 및 공동활용체계의 선제적 마련과 대응 통해 전국적 사례로 확산 · 전파

□ 세부 추진사항

○ 사 업 명 : AI 기반 도서 추천 서비스 도입

○ 사업기간 : 2026. 3. ~ 10.

○ 사업내용

- 통합서지색인 구축 및 검색 API 고도화
  - ▷ 부산 지역 공공도서관 소장도서의 ISBN 기반 통합서지색인 구성
  - ▷ 통합색인 검색을 위한 검색 API 기능 고도화
  - ▷ 통합서지색인 기반 UI 고도화
- AI 도서 추천 서비스 도입
  - ▷ 지능형 검색 API를 이용한 검색 시스템 고도화
  - ▷ 지능형 검색 위한 검색 질의 의도 분석 등 AI 서비스 연계
  - ▷ AI와 대화 통한 이용자가 원하는 분야 도서추천서비스 제공
- 개인 맞춤형 도서 추천 서비스 도입
  - ▷ 대출이력, 성별, 나이, 지역 등 로그인된 정보 바탕으로 능동적 도서 추천
  - ▷ 빅데이터 분석플랫폼을 활용한 개인화된 도서 추천 서비스 제공
- 공동활용기반 마련 위한 정책 소통 설명회 개최
  - ▷ 구 · 군 ·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 및 전문가 참여 의견 수렴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시행 전	시행 후
○ 키워드 기반 단순 도서검색서비스 ○ 검색 결과 동일 자료가 개별 단위로 중복 노출 ○ 도서 추천시 일부 기관(어린이도서연구회, 신문사 등) 의존하여 평면적 추천	○ 통합서지색인 구축 및 검색 API 고도화 - 도입 도서관수 : 총 57개 공공도서관 - 대표 레코드 단위의 통합색인기반 전환 ○ AI 도서 추천 서비스 도입 - 도입 도서관수 : 희망 기관 우선 - 자연어 기반 질의응답의 대화형 검색 도입 ○ 개인 맞춤형 도서 추천 서비스 도입 - 도입 도서관수 : 총 57개 공공도서관 - 독서 성향에 따른 추천 알고리즘 적용

○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 자료 검색 시 동일한 자료를 개별 도서 단위로 중복 표시하여 시간 낭비 등 이용 불편 초래 ○ 단순한 도서 검색만 제공하여 이용자가 원하는 분야의 도서 추천 서비스 부족 등 검색 신뢰도 저하 ○ 단위 도서관에서 개별 도입 등으로 서비스 편차 발생 및 관리 비용 증가	○ 중복 제거, 직관적 검색, AI기반 대화형 검색으로 이용 편의성 및 만족도 향상 ○ 정보 탐색 효율성 증가 통해 '검색' 중심에서 '경험' 중심의 독서로 전환 가능 ○ 통합플랫폼 구축으로 중복투자 방지 및 표준화된 시스템 운영으로 도서관간 격차 해소와 관리 효율화 도모

□ '26년 소요예산 : 100,000천원(시비) ☞ 시민참여예산으로 추진

□ 추진체계

구 분	주 요 내 용
부산도서관 (주최·주관)	- 사업계획수립 및 예산관리, 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 관리 - 통합 데이터 및 시스템 총괄 운영, 협력기관 의견 수렴 및 정책 조정 - 사업 평가보고 및 사후 관리
구·군·교육청 관련부서 공공도서관 (협력)	- 시범 운영 참여 및 현장 의견제공 - 이용자 홍보 및 서비스 확산 지원
전문가 (자문)	- 서비스 품질 및 개선 방향 제시 등
용역업체 (수행)	- 통합서지색인 및 검색시스템 개발, 시스템 안정화 및 기술 지원 - AI 추천 알고리즘 설계 및 구현, UI/UX 설계 및 서비스 구축 등

□ 추진일정

○ ‘26. 3. ~ 4. : 자료수집 및 사업계획 수립
○ ’26. 4. ~ 5. : 과업심의, 사전협의, 보안성검토 등 사전절차 이행
○ ‘26. 5. ~ 9. : 계약체결 및 사업추진
○ ’26. 10. : 시범운영 및 서비스 실시

□ 홍보계획

○ 온라인 홍보
- SNS(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활용 서비스 소개
- 카드뉴스 및 숏폼 콘텐츠 제작·배포
- 이용자 대상 이메일·문자 안내 발송

○ 오프라인 홍보
- 공공도서관 내 포스터, 리플릿 비치
- 자료실 및 안내데스크 활용 서비스 안내
- 지역 행사 및 독서문화 프로그램 연계 홍보

○ 참여형 홍보
- “AI 추천 도서 체험 이벤트” 운영

○ 기관 협력 홍보
- 구·군 및 교육청 홈페이지 연계 홍보
- 지역 언론 및 보도자료 배포

10-10 소나무재선충병 무인항공기 예찰 및 AI 분류기술 연구

주관부서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	협조기관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담당자	김주섭 연구사	연락처	051-888-7124

□ 추진배경

○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차단을 위해 누락없는 고사목 탐색이 필요하나, 지상조사는 지형 고저차로 비가시권 존재하여 누락율이 높기 때문에 **무인항공기(드론)을 활용한 예비관찰조사(예찰)이 필수적임**

○ 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산림재난공단)에서 드론예찰을 지원 중이나, 국가선단지 및 신규·재발생지 위주로 지원되고 있어 선제적인 차단을 위한 **자체적인 드론예찰**이 필요함

○ 또한 지금까지 드론예찰결과 배포 시, 단순 좌표 또는 도면의 형태로만 전달되어 현장에서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여전히 누락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활용성 제고를 위한 기술개발**이 필요함

□ 세부 추진사항

○ **자체 드론예찰 확대 추진**

- 보유 드론을 활용하여 시범적으로 직영 드론예찰을 추진해왔음

  * (2024)도급: 1,425ha / (2025)도급: 1,799ha **직영: 312ha** / (2026) 직영: 744ha

- 드론예찰의 장점인 비가시권 누락목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청정전환 대상지를 중점으로 연중 지속예찰하여 확산 조기차단

○ **AI 활용 고사목좌표 추출**

- RGB 정사영상을 활용한 AI 분류의 한계(오탐지좌표 과다)를 극복하기 위하여 NIR 영상을 활용한 고사목 추출 정밀도 향상 연구

○ **드론 좌표의 현장 활용도 제고 방안 연구**

- 스마트폰 현장조사앱(Qfield) 활용한 고사목 예찰 지도 배포
- 각 지역별 여건에 필요한 레이어(등산로, 임도, 시설물, 조망점 등)를 포함한 예찰도면 제공하여 활용도 제고

○ **드론예찰 및 현장활용 교육시행**

- 각 구군에서 보유한 드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드론 예찰 방법 및 드론좌표 활용법 교육 추진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시행 전	시행 후
○ (`25년) 도급 1,799ha, 직영 312ha ○ 고사의심목 좌표 1,693본 탐지되었으나, 오탐지 좌표가 다수	○ 소나무재선충병 드론예찰 2,000ha 시행 - `25년 드론예찰 총 면적 2,111ha를 도급 없이 직영으로 완전 대체 ○ 비가시권 누락고사목 200본 조사 - 피해 경미지역의 완전방제 달성을 위하여, 쇠미산/이기대/승학산 등 잠재 고사목 예측

○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 지상예찰 비가시권 및 험준지의 피해고사목 누락으로, 경미지역임에도 완전방제되지 않고 지속적 피해발생	○ 경미지역의 비가시권에 존재하는 피해고사목을 조기 예찰하여, 피해확산을 차단하고, 동래구·동구 등 최근 재발생지를 청정지역으로 전환 ○ 최근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금정산 등의 산림환경 보전 달성

□ '26년 소요예산

○ 드론 정비용 물품 구입 등 : 시험연구비 등 2백만원

* NIR영상을 통한 고사목 탐지가 성공적일 경우,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촬영속도 및 면적이 월등히 높은 신규 드론기체 취득예산 확보 필요

□ 추진일정

○ 2026. 1.~ 5. : 25년 생활사(25.9.~26.5.) 방제사업을 위한 드론예찰

○ 2026. 5.~ 9. : 소나무재선충병 병 진행에 따른 고사목 영상 변화 추적을 위하여, 특정지역을 시계열 촬영

○ 2026. 9. ~ 10. : 26년도 방제기간(26.9. ~ 27.5.) 방제사업 설계를 위한 드론예찰

○ 2026. 12. : NIR영상을 활용한 AI(딥러닝) 분류결과 보고

11. 공공 AI 리터러시 강화 및 인재 양성

11-1 AI 지적업무 길잡이(ABC) 제작

주관부서	도시계획국 토지정보과	협조기관	구·군
담당자	이철승 주무관	연락처	051-888-2624

□ 추진배경

○ ‘세계 최고 AI 민주정부 구현’을 위해 행정 전반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업무혁신 요구

○ 지적업무 실무지식의 체계적 축적과 표준화된 업무 지원체계 구축 필요

○ 신규 및 비전공자 직원 증가에 따른 지적업무 길잡이 필요

□ 세부 추진사항

○ 명　　칭: AI 지적업무 길잡이 “ABC”*1)

○ 기　　간: 2026년 1월 ~ 6월

○ 대상업무: 토지이동, 지적측량, 지적재조사 등 지적업무

○ 주요내용: AI 학습자료 구축, T/F팀 구성 및 검증, 웹서비스 개시 및 고도화

○ 방　　법: 생성형AI를 사용하여 제작

○ AI엔진 선택: Google의 NotebookLM

- 제작자가 올린 문서·링크를 중심으로 답변하여 이용자의 유료 또는 무료 버전에 관계없이 일관된 답변 생성
- 이용자의 일일 사용량 제한에 있어 자유로움
- 답변에 대한 근거자료 명시(페이지번호 기재)로 답변의 신뢰도 확보

1)ABC: AI Busan Cadastral guide(AI 부산 지적 길잡이)의 약어로 처음부터 시작하는 지적업무 길잡이라는 뜻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시행 전	시행 후
○ 업무처리 방향 설정 시간 단축 필요 - 지적업무처리는 공간정보관리법 뿐 아니라 국토계획법, 건축법, 도시정비법 및 여러 행정 규칙 등을 따라야 하므로 법률 또는 사례를 찾는데 많은 시간 소요 - 신규 및 비전공 직원 증가로 정확한 업무 처리를 위한 가이드 필요 ○ 구·군별 업무처리 통일성 필요 - 구·군별 법률 적용을 각각 다르게 함으로써 민원인 불편이 발생할 소지	○ AI 지적업무 길잡이 제작·운영 - 업무처리에 대한 신속·정확한 방향 설정 - 부산시 구·군 업무처리의 통일성 부여 - 신규, 비전공, 업무변경 직원이 빠르게 업무 적응 -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로 민원 만족도 증대

○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 지적업무 처리에 많은 시간 소요 ○ 개인별 업무 지식 축적 ○ 사무 처리에 대한 개인별 편차 발생	○ 지적업무 처리시간 단축 및 오류 최소화로 업무 효율성과 정확성 향상 ○ 개인 경험 중심의 지식에서 부산시 공통 지식으로 전환하여 실무지식의 조직 자산화 ○ 사무에 대한 일관된 적용, 신규 및 비전공 직원의 업무 조기 적응 가능 ○ 부산형 AI 행정모델 선도

□ 관련 조례 및 지침 개정계획: 해당없음

□ ’26년 소요예산: 비예산사업

□ 추진체계

○ 부산광역시

- 총괄 관리, 자료 수집 및 탑재, 운영지침 설정, 웹서비스 개시, 홍보

○ 구·군

- 민원처리 자료 제출, AI 질의응답 시행, 답변오류에 대한 보완 학습

□ 추진일정

○ ′26. 1월 ~ 2월: 계획수립 및 AI 학습자료 구축

- AI 학습자료 수집·정리: 지적업무 관련 법령·지침·편람, 매뉴얼, 질의회신, 유권해석, 업무사례 등
- “ABC” 생성(NotebookLM 환경) 및 자료 업로드
- 답변 지침 설정: “문서에 없는 내용은 추측하지 말고 ‘정보 없음‘이라고 답변”, “모든 답변은 반드시 출처의 페이지 번호를 명시” 등

○ ′26. 3월 ~ 5월: T/F팀 구성 및 검증

- 시+구·군(지적업무 경력자, 바른땅해결사 연구모임) 구성
- 질의응답 시행, 답변오류에 대한 보완 학습
- 답변 지침 추가, 실무에 필요한 요구사항 적용

○ ′26. 6월 : AI 지적업무 길잡이 웹서비스 개시

- URL게시 및 안내·홍보: 전자문서 발송, 온나라 커뮤니티 게시 등

○ ′26. 7월 ~ 계속: 고도화(부동산 공법 등 영역확대, 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

□ 홍보계획

○ 웹서비스 개시 사항 및 활용방법 안내(’26. 6월)

- 전자문서 발송, 온나라 커뮤니티 게시

11-2 신규임용(후보)자 AI기반 문제해결 능력 강화 교육 운영

주관부서	인재개발원 역량교육과	협조기관	市 인사과
담당자	정유진, 정현진 주무관	연락처	051-366-7554, 7551

□ 추진배경

○ 기존 이론 중심 교육에서 실무·데이터 기반 교육으로 전환 필요성 인식

○ AI 활용 문제해결 학습을 통해 변화수용성과 혁신마인드 형성 기반 마련

□ 세부 추진사항

○ (교육기간) 2026. 2. ~ 11. ▹ 총 5기, 기수별 3일(21시간)

○ (과 목 명) AI기반 문제해결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

○ (교육대상) 일반직 신규임용(후보)자

○ (교육방법) 4개 분반, 각 분반 4~5개 팀 운영

※ 교육생 인원에 따라 분반 구성은 달라질 수 있음

○ (교육내용) AI를 활용하여 市 정책문제 분석 및 해결방안을 도출하고 분임별 결과공유와 상호 피드백을 통해 문제해결 역량 강화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지표명	목표
○ 신규임용(후보)자과정 AI기반 문제해결 능력 강화 교육 운영	○ 연간 5회 운영, 교육인원 400여명 - 제1기: 82명, 제2기: 54명, 제3기: 64명, 제4기: 80명, 제5기: 120명

○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 이론 중심 교육 편중 및 데이터 활용 경험 부족 ○ 변화 대응 및 디지털 활용 역량 미흡	○ 데이터 분석 및 다양한 사례에 AI를 적용한 창의적 해결방안 도출 ○ 미래 행정환경 변화를 준비하는 신규임용(후보)자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

□ '26년 소요예산

○ 60,000천원

- 강사수당 50,000천원, 교육운영 교구 10,000천원

Ⅳ. 소확신 (소소하지만 확실한 정부혁신) 과제

1 시민 수요 맞춤 러닝 인프라 확충 및 프로그램 운영

주관부서	체육국 생활체육과	협조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담당자	조은태 주무관 이지훈 주무관	연락처	051-888-6532 051-888-6537

□ 추진배경

○ **(러닝인구 증가)** 고물가 시대 **가성비 트렌드**와 **야외운동 선호 확산**으로 비용 부담이 적은 **러닝의 인기가 지속 상승**하며 러닝동호회와 개인 러너층 확산 추세

–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러닝은 힙하다'는 인식과 함께 러닝크루 문화 확산

○ **(러너 편의시설 확충 요구)** 부산은 **해변, 강 등 러너들이 선호하는 코스**를 **보유**하고 있으나, **러닝인프라 부족**으로 **편의시설 확충 필요성 지속 제기**

○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 기대)** 러너지원공간은 단순 체육시설을 넘어 다양한 **경제·사회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복합적 거점 시설로의 역할 기대**

– (경제적) 지역 상권 활성화 / (사회적) 커뮤니티 활성화로 도시 활력 제고

□ 세부 추진사항

1 러너지원공간 조성·운영

○ **(지역맞춤형 「러너지원공간」 조성)**

- **장소별 특성**을 **반영**한 **공간 조성**으로 **활용도와 접근성 제고**
- 탈의실.물품보관함 등 **러너 편의시설 제공**으로 **시민체감형 인프라 조성**
- **운영성과 분석**을 바탕으로 **이용률 제고 및 프로그램 연계 등 운영 내실화 추진**

○ **(러너수요반영 「보조지원공간」 조성)**

- **주요 러닝코스** 내 **물품보관함 중심의 보조지원공간** 조성
- **러너 의견조회** 및 **현장 여건 검토**를 통한 **단계적 조성 확대 추진**

2 러닝프로그램 운영

○ **운영기간 :** ‘26. 5~11월

○ **운영횟수 및 인원 :** 90회, 2,500여명

○ **운영장소 :** 수영강·다대포해수욕장·온천천 등 4개소

○ **운영내용 :** 러닝자세, 심폐력 강화 등 러닝주법 강습 및 코스별 러닝 진행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시행 전	시행 후
○ **현황 및 문제점** - **러닝 거점시설 부재**로 **편의시설 확충 요구** 지속 - **시민 대상 체계적인 러닝 프로그램 부족** 및 프로그램 운영 후 **체계적 의견수렴 절차 미흡**으로 참여자 요구사항이 차기 운영계획에 구조적으로 반영 어려움	○ **성과목표** - **생활권 기반 러닝 거점시설 2개소 이상 조성** · 러너지원공간 2개소, 보조지원공간 2개소 - **러닝프로그램 만족도 8점 이상 달성(10점 척도)** · 만족도 조사 응답자수(표본) 1,200명 이상 확보 * 예) 매우 만족 10점, 조금 만족 7점, 보통 5점, 조금 불만족 3점, 불만족 0점

- (「달려라부산 러닝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실시)

· 참여자 약 2,500명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병행 만족도 조사 실시

* 회차별 현장 QR코드 및 지면설문과 프로그램 종료 후 온라인 설문 병행으로 응답 접근성 제고

· 프로그램 운영 전반에 대한 조사문항 구성

* 프로그램 전반 만족도(10점 척도 기준), 참여동기, 운영시간 및 장소 적정성, 강습 내용 및 강사 전문성, 안전관리, 재참여 의향, 개선 필요사항 등

· 회차별 현장 의견과 종료 후 설문결과를 종합하여, 프로그램 내용·운영·안전관리 등 분야별 개선과제 발굴 가능

· 참여 규모 및 운영 횟수(약 90회)를 고려할 때 최소 3~5건 이상의 실질적 개선사항 도출 가능

○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 **시민 생활권 러닝인프라 부족** - 생활권 내 러닝 인프라 부족으로 일상 속 운동 실천 환경 개선 필요 ○ **시민 건강 및 참여 개선 필요** - 프로그램 운영 후 만족도 및 성과에 대한 객관적 데이터 축적 미흡 ○ **시민 생활체육 참여율 정체** - 생활체육 참여율 증가세 둔화 및 지속적 참여 확산 한계	○ **시민 생활권 러닝인프라 확충** - 생활권 기반 러닝 인프라 확충으로 일상 속 운동 환경 조성 ○ **시민 건강 증진 및 참여 확대** - 러닝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지속적 신체활동 실천 유도 -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객관적 데이터에 근거한 프로그램 개선 체계 구축 ○ **프로그램 품질 향상 및 운영 내실화** - 시민 의견을 실제 운영에 반영하여, 참여 효율성 및 만족도 제고 ○ **시민 생활체육참여율 제고(`25년 70.6%)** - 생활밀착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생활체육 참여율 향상 기여

□ '26년 소요예산

○ 소요예산 : 896백만원

- 러너지원공간 조성 및 운영 500백만원
- 러닝프로그램 운영 396백만원(국비 포함)

• 문체부 공모사업 : 지역자율형 생활체육활동[달려라부산], 어르신스포츠강좌 프로그램[달려라부산 라이프런]

□ 추진체계

○ (러너지원공간 조성) 부산시↔구·군↔부산시설공단 등

市	구·군	부산시설공단 등
· 사업총괄추진·운영 · 러너지원공간 조성·운영 · 예산집행, 홍보 등	· 대상지 발굴 및 운영·관리 · 사업홍보, 안내	· 대상지 발굴 및 운영·관리 · 사업홍보, 안내

○ (러닝프로그램 운영) 부산시↔구·군↔생활체육문화센터·노인복지관 등↔부산시육상연맹

市	구·군, 노인복지관	부산시 육상연맹	체력인증센터, 스포츠과학센터
· 사업추진·운영 · 사업홍보·브랜딩 · 예산관리 등	· 대상자 발굴 및 연계 · 사업홍보, 안내	· 지도자·강사 추천 · 세부 프로그램 자문 등	· 체력측정, 운동처방 - 참여자 대상 운영

□ 추진일정

○ 26. 3. 다대포 러너지원공간 개소 및 연계 러닝행사 개최('26.3.28.)

○ 26. 4. 러너 보조지원공간 2개소 조성(부산시민공원, 북항친수공원)

○ 26. 5. ~ 11. 달려라부산 러닝프로그램 운영 및 회차별 만족도 조사 등

○ 26. 하. 금련산역 러너지원공간 및 보조지원공간 추가조성

○ 26. 12. 러닝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및 종합 결과 분석

□ 홍보계획

○ 러너지원공간 및 러닝 프로그램 홍보

- 방송사 등 언론을 통한 보도자료 배포 등 홍보
- 전용 홈페이지, SNS 개설 및 운영
- 부산시보 및 부산시 공식 SNS 통한 홍보 및 기타 관계기관별 홍보
- 구·군, 노인복지관·경로당 등 현장 방문 홍보 병행

○ 러닝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및 의견반영 내용 홍보

- 프로그램 참여자 대상 현장홍보
  · 운영장소별 안내판, 현수막, 배너, QR코드 비치 등 통한 만족도 조사 참여 안내
  · 강사 및 운영요원을 통한 조사 참여 독려
- 온라인 통한 참여 안내 및 홍보
  · 부산시 및 운영기관 홈페이지, SNS, 온라인커뮤니티 등을 통한 조사 참여 안내
  · 참가자 대상 문자 또는 모바일 안내를 통한 설문 참여 유도

2 광역최초 찾아가는 외국인 감염병 예방 통합 검진 시범사업 추진

주관부서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협조기관	대한결핵협회, 한국한센복지협회, 한국건강관리협회, 한국에이즈퇴치연맹, 부산외국인주민지원센터, 부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구·군 보건소 등
담당자	최시영 주무관	연락처	051-888-3321

□ 추진배경

○ 부산시 관내 외국인 주민의 유입 증가

- '26. 1월말 기준 내국인 320만명 대비 외국인 7만명 전체인구의 2.1% 차지 및 꾸준한 내국인 감소에 대비한 외국인 증가세

○ 국내 감염병 중 한센병, 결핵, 에이즈 등 외국인 감염병 발생률 증가로 선제적 감염병 검진을 통한 지역사회 내 감염 전파 차단

○ 언어적, 경제적, 문화적 장벽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공공보건 사각지대 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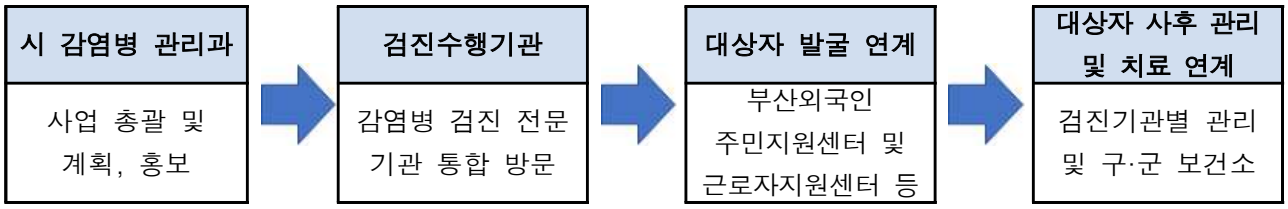
□ 세부 추진사항

○ **외국인 감염병 검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 관련 유관기관 및 검진기관, 외국인 지원 관련 담당 부서 등 단체장 참여 협의회 구성·운영 ▷ 실무자 간담회 별도 상시 운영
- 대상 사업장 발굴 및 운영 사항 협의, 성과 결과 및 환류

○ **수요자 중심 찾아가는 외국인 통합 검진 운영**

- **(추진기간)** '26년 분기별 운영(3, 6, 9, 12월) ※ 1분기 질병관리청 통합 검진 사업 연계
- **(대　　상)** 외국인근로자(미등록 포함), 이주민 및 다문화 가정, 유학생 등
- **(검진기관)** 한센복지협회, 결핵협회, 한국건강관리협회, 구·군 보건소 등
- **(검진내역)** 한센병, 결핵, 기생충감염병, 에이즈, B·C형 간염
- **(운영방법)** 전문 검진기관 통합 현장 방문 검진 실시※익명가능·무료검진



- **(설문조사)** 검진 참여 외국인 대상자 만족도 조사 실시

○ **감염병 예방 홍보 부스 병행 인식 개선 및 예방 행태 강화**

- 주요 감염병 국적별 번역본 배부, 손씻기 체험 교육 등 실시
- 감염병 예방 물품(마스크, 소독티슈 등) 배부 지원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table>
<tr><th>시행 전</th><th>시행 후</th></tr>
<tr><td>○ 신규 시범 사업
○ 기존 검진 기관 개별 단발성 운영</td><td>○ 성과목표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목표(A)</th><th>실적(B)</th><th>달성률(%)</th><th rowspan="2">비고</th></tr>
<tr><th>-</th><th></th><th>85% 이상</th></tr>
<tr><td>검진자 수</td><td>200명</td><td></td><td></td><td rowspan="4">※ 검진 및 홍보 인원 중복 가능</td></tr>
<tr><td>예방 홍보 참여인원</td><td>300명</td><td></td><td></td></tr>
<tr><td>참여 기관</td><td>7개소 이상</td><td></td><td></td></tr>
<tr><td>만족도 조사</td><td>4.5 이상 (5점 만점)</td><td></td><td></td></tr>
</table></td></tr>
</table>

- 기존검진기관 개별 단발성으로 운영되던 외국인 검진을 통합 운영
- 감염병 검진 및 예방 홍보, 교육 등 병행하여 참여 인원 확대

○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 **각 검진 기관별 개별 외국인 검진 단발성 진행** - 결핵, 한센, 에이즈, 기생충감염병 등 관련 검진기관 개별 단발성 검진 실시 - 민간기관의 방문 검진으로 대상자 비협조	○ **광역 단위 거버넌스로 검진 기관을 하나로 묶어 외국인 검진 편의성 향상** - 일정 정례화, 민간검진기관 및 외국인주민센터 등 단체 광역 단위 검진 주관으로 효율성 증대 ○ **외국인 감염병 검진 표준모델 제시 및 감염병 예방 정책의 모범사례 창출** - 외국인근로자 감염병 조기차단 및 예방 통한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 현장 중심의 통합적 검진 및 홍보로 대상자 확대

□ ’26년 소요예산

○ 비예산

* 부산시 기존 민간위탁 사업 및 지방보조사업 운영, 협회 운영 연계로 별도 예산편성 불요

□ 추진체계

○ 사업 운영 체계



□ 추진일정

○ 협의회 구성 및 운영

- 1차: ‘26. 3. 9. 협의회 구성 동의 및 협의회 실시
- 2차: ’26년도 시범사업 운영 종료 후 실시 예정, 사업 결과보고 및 향후 운영 방안 논의

○ 통합 검진 운영 일정

구분	일정(안)	장소	비고
1/4분기	'26. 3.29.(일)	부산 외국인주민 지원센터 (사상구)	부산 외국인주민 지원센터 1차 ※ 질병관리청 연계
2/4분기	'26. 6.28.(일)	부산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연제구)	-
3/4분기	'26. 9.13.(일)	부산 외국인주민 지원센터 (사상구)	부산 외국인주민 지원센터 2차
4/4분기	'26.11.29.(일)	부산 관내 사업장	부산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연계

□ 홍보계획

○ 홈페이지 및 SNS 등 게시, 검진 안내서 제공 등 검진 안내 홍보

- 시 감염병 포털 및 구·군 보건소, 검진 의료기관 및 검진 대상 기관의 홈페이지 등 통합 검진 홍보 요청
- 검진 장소 내 사전 검진 안내서 비치(1개월 전) 및 검진 예약 안내, 대상자 참여 문자 발송

3 동백패스와 K-패스 연계 개선

주관부서	교통혁신국 교통혁신과	협조기관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한국교통안전공단
담당자	박준영 주무관	연락처	051-888-3906

□ 추진배경

○ 정부 정책 변경에 따른 연계 조정으로, **두 제도간 중복 및 시민혼란 방지**

○ K패스와 동백패스 융합으로 **더 폭넓은 혜택 제공,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 사회보장위원회 협의에 따라 교통약자 돌봄 강화 및 **중복 지원 방지**

□ 세부 추진사항

○「동백패스와 K-패스 연계 개선」개요

- (시행시기) ’26. 4. 1. ※ 홍보 개시일: ’26. 3. 4.(수)
- (개선혜택) 부산 대중교통 이용금액, **월 4만 5천원 초과 분 무제한 환급**
- (이용방법) 동백전 교통카드 발급, 동백패스와 K패스 **동시 회원가입** 필수
- (환급방법) 월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해 동백패스와 K-패스의 **환급금을 자동으로 계산**하여 이용자에게 유리한 금액으로 자동 환급

○ 연계 개선(안)

- **시민 혜택 늘리고, 재정 절감 가능한 협의안 제시** ‣ 대광위, 사회보장위(협의 완료)

(기 존) K패스(정률제) 환급금과 **동백패스** 환급금 비교 후 **큰 금액 환급**

(변 경) “K패스 정액제**(모두의 카드)**”, “K패스 정률제” **환급액 크기에 따라 K패스-동백 환급방식 다름**

환급액 비교	**(변 경) 환급방식**
모두의 카드 < K패스(정률제)	**현행 동일** ※ K패스(정률제)와 동백패스 환급금 비교 큰 금액 환급
모두의 카드 >= K패스(정률제)	**① K패스 先지급**, ② 환급 기준금액 **차액(5.5-4.5만원) 동백전 지급**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시행 전	시행 후
○ 동백패스 가입자 85만명	○ 동백패스 가입자 90만명

○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 동백패스 최초 시행 이후 지속적 고도화 하여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확대. 다만, 시비 예산 증가에 따른 부담으로 지속가능성 확보가 중요 과제	○ 시민 혜택 확대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 두 제도간 중복 및 시민 혼란 방지 ○ 정부 정책 대응한 적극 협의로 市 재정 절감 ○ 동백패스 지속 개선으로 도시 이미지 제고

□ '26년 소요예산

○ 대중교통 통합할인제(동백패스 + K패스) 시비 1,100억원

* 동백패스(시비), K패스(국비:시비 = 50:50)

* 산출근거: 매년 가입자 증가하고 환급 예산이 증가하는 구조이나, 연계 개선에 따라 재정 절감으로 전년도 수준 소요 추정 (※25년도 예산(억원) 동백패스 899, K패스: 225)

□ 추진체계

○ (부산시) 동백패스와 K패스 연계 개선 시스템 개발 및 동백패스 운영

○ (대광위) 동백패스와 K패스 연계 개선 시스템 개발

○ (K패스 운영 용역업체 및 한국교통안전공단) K패스 운영 및 환급금 정산

□ 추진일정

○ '25. 12. 정부 K패스 정액제(명칭: 모두의 카드) **최종안 확정**·발표

○ '25. 1. **연계안을 제시**하여 **협의완료**(국토부 대광위, 사회보장위원회)

○ '25.1.~3. 동백패스 - K패스(모두의 카드) **연계 개선 시스템* 개발**

* K패스 이용 데이터 수집·관리 시스템, 카드사 정산·환급시스템 개발 등

○ '26. 3. **대시민 홍보** 개시 및 시스템 연계 개선 **적용 테스트**

○ '26. 4. 동백패스 - K패스(모두의 카드) 연계 개선 **대시민 서비스 시행**

○ '26. 4~ 모니터링**(상시)**, 재정절감 효과 분석 및 피드백**(분기별)**

□ 홍보계획

○ **(대중교통)** 버스안내기 영상 송출, 시내버스 안내방송, 도시철도 공익게시판 도시철도 역사 내 행선안내기 등

○ **(온 라 인)** 市 SNS, 유투브, 인플루언서 광고, 별도 온라인 안내 페이지

○ **(오프라인)** 홍보 캠페인, 구·군(주민센터) 협조 홍보, 옥외전광판 등

○ **(기 타)** 동백전 앱 팝업 공지, 신문 광고, TV방송 광고, 인터뷰 등

4 시내버스요금 간편결제(제로페이) 도입

주관부서	교통혁신국 대중교통과	협조기관	버스운송사업조합 한국간편결제진흥원
담당자	류극희 주무관	연락처	051-888-3982

□ 추진배경

○ 부산시의 관광 활성화 정책으로 인해 2026년 부산 방문 외국인 관광객수가 300만명 이상으로 예상되며, 중국, 대만, 홍콩, 필리핀 등 아시아권 관광객이 6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

○ 특히 중국을 중심으로 모바일 웰렛(Alipay/WeChat Pay 등) 결제 비중이 높아 'QR코드 기반 간편 결제수단' 도입을 통해 부산 방문 외국인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향상 도모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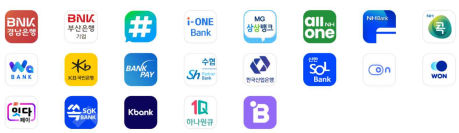
□ 세부 추진사항

○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와 제휴한 QR코드 기반 '제로페이' 도입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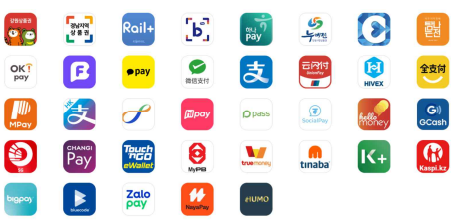
- 추가 시스템 구축 없이 제로페이 QR코드 차내 부착, 이용자 자국 결제 앱 사용으로 신속한 확대 도입 가능 (환전 불필요, 환승 불가능)
- 정산수수료(1.1~2.2% 매출액 차등)최소화, 운영정책 마련, 홍보 등을 위해 (재)한국간편결제진흥원과 협력체계 구성

[제로페이 개요]

- 운 영 사 :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비영리재단법인)
- 출범시기 : 2018. 12. 20
- 결제방식 : 은행·간편결제 앱에서 QR코드 스캔→ 금액 입력→ 즉시 이체
- 제 휴 사 : 국내 은행 및 전자금융사, 글로벌 결제사(Alipay/WeChat Pay 등)



< 은행앱 >



< 결제앱 >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시행 전	시행 후
○ 제로페이 결제 안됨	○ 147개노선 2,517대 시내버스 제로페이 결제가능

○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 해외관광객 시내버스 탑승시 환전을 통한 현금 결제 ○ 편의점 등에서 별도 교통카드 구매하여 요금 결제	○ 해외 관광객이 별도의 환전없이 본인소지 스마트폰에서 자국의 제로페이 결제앱으로 버스요금 결제 가능으로 버스이용 편의 증대

□ '26년 소요예산

○ 사업비 : 1억원 (버스운송사업조합 예산)

- 차내 QR코드 및 안내문 제작, 홍보비 등
- 정산수수료는 별도로 준공영제 공통경비에 반영

※ 현금요금 1,700원 기준 약 20원/건 내외 추정

□ 추진일정

○ '26. 4, 버스조합, 한국간편결제진흥원 등 유관기관 협의

○ '26. 5, 교통위원회 제로페이 도입 보고

○ '26. 6, 버스회사 가맹점 신청, QR스티커 제작 및 부착

○ '26. 7, 시내버스 제로페이 결제서비스 개시

□ 홍보계획

○ 해외결제사(Alipay/WeChat Pay 등) 홍보 및 할인 프로모션 진행

○ 버스내부 및 정류소표지판 다국어 안내홍보물 제작 및 부착

○ 홍보팜플렛 제작, 보도자료 배포 등

Ⅴ. 지방정부 혁신 확산 방안

□ 교육 및 학습 활성화 방안

○ 정부혁신과제의 부서 성과평가(BSC) 연계

- 시정혁신에 대한 부서장들의 관심을 높여 혁신적인 시정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시정혁신과제 추진실적을 부서성과평가(BSC)와 연계

○ 협업 및 적극행정 확산을 통한 지역 현안 해결

- 시정 현안을 중심으로 융복합 협업과제를 지정·관리하고, 협업이 필요한 정책이나 사업을 발굴하여 관리하는 협업의 상시화
- 우수한 협업과제 발굴에 대해 성과관리(BSC) 가점(팀장급)을 부여하고, 6급 이하 직원에게는 실적가점 부여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시상 및 포상

○ 시대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 혁신

- 열린 소통과 협력 강화를 위하여 공감도·체감도 높은 분야를 실천과제로 선정하여 참여도를 높이고, 중점 추진부서와 연계하여 추진

○ 일·학습을 연계한 조직문화 조성 직원교육 실시

- 본청, 사업소, 구군 직원을 대상으로 일과 학습의 연계를 통한 개인·조직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

□ 성과 홍보 방안

○ 혁신 성과, 온·오프라인을 통한 다방면 홍보

- 시 본청, 소속기관 홈페이지 및 SNS(유튜브, 페이스북 등)를 통한 대시민 적극 홍보
- 정부혁신 우수사례, 조직문화 및 일하는 방식, 협업, 적극행정 등 혁신 관련 정보 적극 전파 및 공유(회의자료, 리플릿 등)